

2019년 제1차
식품안전정책위원회

2018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

2019. 3.

관계부처 합동

국무조정실
농림축산식품부
해양수산부

교육부
보건복지부
식품의약품안전처
농촌진흥청

법
환
관

무
경
세

부
부
청

목 차

I . 2018년 추진실적 총평	1
II . 2018년 과제별 추진실적 요약	4
III . 분야별 추진 실적	13

I . 2018년 추진실적 총평

1 추진계획 및 실적

○ (추진계획) 제4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('18~'20)에 따라, '18년에는 5대 분야 158개 과제를 수립하여 시행

- ①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 관리 : 20개 ②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: 39개
 ③ 과학적 유통관리·정보제공 : 36개 ④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: 32개
 ⑤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: 31개

* 식약처 76, 농식품부 38, 해수부 17, 관세청 7, 농진청 6, 교육부 5, 국조실 4, 법무부 2, 복지부 2, 환경부 1

○ (추진결과) 148개 과제 이행완료, 10개 과제 미흡 또는 지연*

*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성과목표 달성율이 90%이하인 경우

- 미흡 또는 지연과제는 △ 가금농가 입식전 신고제 지연, △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 지연, △ 친환경인증기관 반복 선정 제한 지연, △ 부실 친환경인증기관 퇴출제 지연, △ 친환경인증기준 위반 사항 처벌 강화 지연, △ HACCP 양식장 안전성 검사 확대 지연, △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 강화 지연, △ 위생등급제 참여 미흡, △ 식중독 환자 수 초과 발생, △ 양식수산물 유해물질사용 처분강화 지연

2 과제별 미흡·지연 사유 및 대책

세부과제	사유 및 대책
2-1-3-1 (농식품부) 동물복지형으로 사육 환경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진결과) 가금농가 입식전 신고제 도입 지연 * (목표)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완료 / (실적) 국회 계류중 ○ (사유)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도입을 위해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개정안을 의원 대표발의('18.11.8)로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, 국회 농해수위 계류중 ○ (향후대책) 행정지시('17.11월)를 통해 입식 전 신고제를 시행 중이나, 조속히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

세부과제	사유 및 대책
2-3-①-② (농식품부) 인증체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진결과)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 지연 * (목표) 국회제출 / (실적) 부내 법령정비협의회 검토 ○ (사유)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「친환경농어업법」에서 「축산법」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나,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조문(29개조) 축산법 이관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'18.9월) 및 축산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한 이관방안 마련에 시일소요 ○ (향후대책) 「친환경농어업법」 29개조를 「축산법」 13개조로 단순화하여 법령개정 추진(~'19.7) * 현재 축산법 개정안 마련('19.2.3) 후 입법예고('19.2.26~4.8) 중
2-3-②-② (농식품부) 인증기관 반복 선정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진결과) 농가의 친환경 인증기관 반복 선정 제한 근거 마련 지연 * (목표)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/ (실적) 국회 계류중 ○ (사유) 친환경 인증신청시 동일기관 연속 신청횟수 등을 제한하기 위해 「친환경농어업법」 개정안을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으나, 국회 농해수위 계류중 ○ (향후대책)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('19.상) 및 관련 시행령, 시행규칙 정비 추진
2-3-②-③ (농식품부) 부실 친환경 인증기관 퇴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진결과) 부실 친환경인증기관 퇴출 근거 마련 지연 * (목표)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/ (실적) 국회 계류중 ○ (사유) 친환경인증기관 지정기준 평가결과 3회 연속 '미흡'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를 위해 「친환경농어업법」 개정안을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으나, 국회 농해수위 계류중 ○ (향후대책)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('19.상) 및 관련 시행령, 시행규칙 정비 추진
2-3-③-① (농식품부) 위반사항 처벌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진결과) 친환경인증기준 위반사항 처벌 강화 지연 * (목표)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/ (실적) 국회 계류중 ○ (사유) 인증취소 처분 3회시 영구퇴출, 3년간 2회 이상 인증취소 처분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「친환경농어업법」 개정안을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으나, 국회 농해수위 계류중 ○ (향후대책)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('19.상) 및 관련 시행령, 시행규칙 정비 추진

세부과제	사유 및 대책
2-3-③-③ (해수부) HACCP 양식장 안전성 검사 및 관리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진결과) HACCP 양식장 안전성 검사 확대 지연 * (목표)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/ (실적) 개정안 마련 ○ (사유) HACCP관련 감사원 감사*결과 반영 및 HACCP 양식장 안전성 확대 관련 상위법 근거마련 등에 시일소요로 지연 * HACCP 관련 감사(6.4~7.20)를 받았으나 최종 감사결과(11.19)에 지적 사항이 없어 개정안 마련 착수 ○ (향후대책) 상위법 개정('19.상) 후 시행령 개정('19.하) 추진
4-1-③-⑥ (교육부) (청소년)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 등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진결과)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강화 지연 * (목표)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완료 / (실적) 타당성 평가 ○ (사유)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정안의 시범적용 및 영양(교)사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보완 및 추가검토 실시로 지연 ○ (향후대책)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('19)
4-2-①-① (식약처)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진결과)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수 목표 대비 실적 미흡 * (목표) 6,000개소 / (실적) 4,597개소 ○ (사유)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위생등급 지정 시 인센티브 제공 부족 등으로 참여 저조 ○ (향후대책) 인센티브 제공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, 적용대상 확대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
4-2-②-③ (식약처) 범부처 관리 체계 구축·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진결과) 식중독 환자 수 목표 대비 실적 초과 발생 * (목표) 5,642명 / (실적) 11,066명 ○ (사유)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위해요인 증가, 노로바이러스 감염 유행 및 HACCP 업체 관리미흡 등으로 식중독 환자 증가 ○ (향후대책)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 실시간 연계*, 비가열식품 등 학교급식 메뉴** 특별관리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강화 캠페인 추진 *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와 납품업체 정보 공유 및 안전관리 협업 ** 예시 : 여름철(쌈채소), 겨울철(굴, 파래), 평상시(겉절이 김치, 케이크 등)
5-3-④-② (해수부) 양식수산물유해물질 불법사용 처분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추진결과) 양식수산물 유해물질 불법사용 처분강화 지연 * (목표)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개정 / (실적) 개정 수요조사 ○ (사유)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을 위한 상위법 근거마련 시일소요로 지연 ○ (향후대책) 상위법 개정('19.상) 후 동 규칙 개정('19.하) 추진

Ⅱ. 2018년 과제별 추진실적 요약

① 과제 현황

구 분	과제	세부과제
총 괄	55	158
전략 1. [기준 관리]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	10	20
1-1. 식품 등의 기준·규격 재평가	3	5
1-2.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	3	10
1-3. 기술발전·기후변화 대비 사전대응	4	5
♣ 식약처 11, 해수부 4, 농식품부 3, 농진청 2		
전략 2. [생산·제조]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	13	39
2-1.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	7	20
2-2. 가공식품 제조 관리	3	8
2-3. 인증제도 개선	3	11
♣ 농식품부 21, 식약처 9, 해수부 5, 농진청 3, 환경부 1		
전략 3. [유통·수입] 과학적 유통관리·정보제공	13	36
3-1. 유통 관리체계 개선	5	14
3-2.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	4	14
3-3.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	4	8
♣ 식약처 23, 관세청 5, 농식품부 4, 해수부 3, 농진청 1		
전략 4. [소비·생활]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	10	32
4-1.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	3	16
4-2.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활동	4	10
4-3. 생활 속 식생활 교육·홍보 강화	3	6
♣ 식약처 18, 농식품부 6, 교육부 5, 복지부 2, 해수부 1		
전략 5. [관리 기반]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	9	31
5-1.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	3	11
5-2. 대내외 소통·협력 강화	2	7
5-3.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	4	13
♣ 식약처 15, 국조실 4, 농식품부 4, 해수부 4, 법무부 2, 관세청 2		

2 과제별 추진결과

과 제 명		추진부처	추진상황
전략 1. [기준 관리]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			
1-1. 식품 등의 기준·규격 재평가			
1-1-1	식품 위해요소 기준·규격 재평가		
	① 식품 기준·규격 재평가	식약처	이행완료
	② 식품용 기구·용기·포장 기준·규격 재평가	식약처	이행완료
	③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 및 개선	식약처	이행완료
1-1-2	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·규격 재평가		
	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·규격 재평가	식약처	이행완료
1-1-3	인체 위해물질에 대한 통합위해성 평가		
	①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 평가	식약처	이행완료
1-2.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			
1-2-1	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		
	① 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	식약처 농진청	이행완료 이행완료
1-2-2	축·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		
	① 농장단위 전수검사 및 축산물 잔류물질 PLS 제도 도입	농식품부 식약처	이행완료 이행완료
	②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수산물 모니터링 확대	해수부	이행완료
1-2-3	농약·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		
	① 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	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	이행완료 이행완료 이행완료
	② 수의사 처방 항생제 확대	농식품부	이행완료
	③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1-3. 기술발전·기후변화 대비 사전대응			
1-3-1	유전자변형기술 응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		
	① 유전자변형식품(GMO) 안전성 심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② 유전자변형식품(GMO) 표시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1-3-2	최근 도입 신 기술 응용 식품 안전관리 토대 마련		
	① 유전자 가위기술 및 나노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
과 제 명		추진부처	추진상황
1-3-③	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대응 및 모델 개발		
①	폭염, 온난화에 따른 병원체 발생 대응체계 마련	식약처	이행완료
1-3-④	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		
①	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10개 과제	20개 세부과제		

전략 2. [생산·제조]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

2-1.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

2-1-①	(농산물) 농지·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		
①	농경지 오염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	농식품부 농진청	이행완료 이행완료
②	농업용수 모니터링체계 구축·운영	농식품부	이행완료
③	농자재 위해요소 실태 조사	농식품부	이행완료
④	친환경 인증 기준에 환경오염관리기준 마련	농식품부	이행완료
2-1-②	(축산물) 사료 안전관리 강화		
①	사료 내 잔류농약 잔류기준 및 검사 강화	농식품부	이행완료
2-1-③	(축산물)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		
①	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	농식품부 농진청	지연 이행완료
2-1-④	(축산물) 현장 맞춤형 방제·도축교육 강화		
①	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및 약제 오·남용 방지	농식품부	이행완료
②	도축장 오염 방지	농식품부	이행완료
③	현장 방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 확대	농식품부	이행완료
2-1-⑤	(수산물)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		
①	수산동식물 생산해역 환경 개선	해수부	이행완료
②	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	환경부	이행완료
2-1-⑥	(수산물)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		
①	사전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	해수부	이행완료
②	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	해수부	이행완료
2-1-⑦	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		
①	우수관리농산물(GAP) 생산 확대	농식품부 농진청	이행완료 이행완료

과 제 명		추진부처	추진상황
	②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	농식품부	이행완료
	③ HACCP 축산물 적용 확대	농식품부	이행완료
	④ HACCP 수산물 적용 확대	해수부	이행완료
2-2. 가공식품 제조 관리			
2-2-①	일반식품		
	① HACCP 적용 식품 지속 확대	식약처	이행완료
	② 단순처리 농·수산물 안전 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2-2-②	건강기능식품		
	① 제조기준 강화(GMP 적용 의무화)	식약처	이행완료
	② 기능성 검증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③ 이상사례 체계적 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2-2-③	주류(술)		
	① 주류업체 등급별 차등 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	② 주류업체 수질 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	③ 소규모업체 안전·품질 관리 지원	식약처	이행완료
2-3. 인증제도 개선			
2-3-①	친환경인증 기준 강화		
	① 심사기준 강화	농식품부	이행완료
	② 인증체계 개선	농식품부	지연
	③ 축산농장 HACCP 적용 확산	농식품부	이행완료
2-3-②	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		
	① 인증기관 공무원 취업 제한	농식품부	이행완료
	② 인증기관 반복 선정 제한	농식품부	지연
	③ 부실 친환경 인증기관 퇴출	농식품부	지연
	④ 인증기관 역량평가 강화	농식품부	이행완료
2-3-③	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		
	① 위반사항 처벌 강화	농식품부	지연
	② 축산농장 HACCP 위해요소 평가항목 개선	농식품부 식약처	이행완료 이행완료
	③ HACCP 양식장 안전성 검사 및 관리 강화	해수부	지연
13개 과제	39개 세부과제		

과 제 명		추진부처	추진상황
전략 3. [유통·수입] 과학적 유통관리·정보제공			
3-1. 유통 관리체계 개선			
3-1-①	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		
①	시스템 개선 및 정보 표준화	식약처	이행완료
②	이력추적 대상 품목 확대	식약처	이행완료
③	계란·닭·오리 이력추적제 도입	농식품부	이행완료
④	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	해수부	이행완료
3-1-②	위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 개선		
①	적용 대상 확대 및 종합관제시스템 구축	식약처	이행완료
3-1-③	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		
①	농산물 유통시설 개선	농식품부	이행완료
②	축산물 유통시설 개선	농식품부	이행완료
③	수산물 유통시설 개선	해수부	이행완료
3-1-④	잔류물질 검사 강화		
①	농산물 안전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②	축산물 안전관리 강화	농식품부 식약처	이행완료 이행완료
③	수산물 안전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3-1-⑤	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		
①	통합식품안전정보망 기반 유통 검사	식약처	이행완료
②	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근절	식약처	이행완료
3-2.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			
3-2-①	수입 전(前) 관리		
①	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②	축산물 수입위생평가 개선	식약처	이행완료
3-2-②	통관 단계 관리		
①	통관검사 및 감시 체계화	식약처 관세청	이행완료 이행완료
②	보세구역 등 제고조사 강화	관세청	이행완료
③	신고수리보류 제도 도입	식약처	이행완료
④	검사명령제 대상 확대	식약처	이행완료

과 제 명		추진부처	추진상황
3-2-③	수입 후(後) 관리		
①	거래내역 신고 강화	관세청	이행완료
②	유통 수입식품 수거·검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③	수입식품 영업자 지도·점검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3-2-④	소규모 반입물품 관리		
①	보따리상 등 휴대반입식품 관리 강화	식약처 관세청	이행완료 이행완료
②	해외직구제품 등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③	자가사용 위장 수입식품	관세청	이행완료
3-3.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			
3-3-①	식품 표시·광고 체계 개선		
①	영업자 실증(實證) 및 자율심의 제도 도입	식약처	이행완료
②	식품 표시 전달력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	식약처	이행완료
3-3-②	식품안전정보의 민간 확산		
①	민간 플랫폼 활용 식품안전정보 전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3-3-③	식품의 영양·위생 정보제공 확대		
①	알레르기·열량 등 국민 관심분야 정보제공 확충	식약처	이행완료
②	빅데이터 기반 대국민 농식품 영양 정보제공	농진청	이행완료
3-3-④	농축수산물의 생산·제조 정보제공 확대		
①	축산물 생산정보 제공 확충	식약처	이행완료
②	수산물 생산·제조 정보제공 확대	해수부	이행완료
③	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 전면 시행	식약처	이행완료
13개 과제	36개 세부과제		

전략 4. [소비·생활]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

4-1.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

4-1-①	나트륨·당류 섭취 저감화		
①	주요 저감대상 집중 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②	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개선	식약처	이행완료
③	범국민 참여 행사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	식약처	이행완료
④	학교 교육 강화	교육부	이행완료

과 제 명		추진부처	추진상황
4-1-②	가정간편식 위생·영양관리 강화		
①	성분 표시 및 품질·유통 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4-1-③	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		
①	(어린이) 식생활안전지수 조사·발표	식약처	이행완료
②	(어린이)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	식약처	이행완료
③	(어린이) 아동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	복지부	이행완료
④	(어린이)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	농식품부	이행완료
⑤	(청소년) 학교 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등 영양·안전 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⑥	(청소년)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등 강화	교육부	지연
⑦	(성인) 개인별 영양섭취관리 지원	식약처	이행완료
⑧	(고령자) 복지시설 급식 위생·영양 관리	식약처	이행완료
⑨	(저소득층 및 취약계층) 바우처 제도 도입	농식품부	이행완료
⑩	(저소득층 및 취약계층) 초중고 우유급식 지원	농식품부	이행완료
⑪	(저소득층 및 취약계층)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·보급	복지부	이행완료
4-2.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활동			
4-2-①	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		
①	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	식약처	미흡
②	배달음식 및 가정간편식 점검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4-2-②	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		
①	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	식약처	이행완료
②	연안 생산해역 및 패류 양식장 감시체계 운영	해수부	이행완료
③	범부처 관리 체계 구축·운영	식약처	미흡
4-2-③	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		
①	학교급식소 및 납품업체 점검	식약처	이행완료
②	학교급식소 관리책임 강화	교육부	이행완료
③	학교급식소 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	교육부	이행완료
4-2-④	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		
①	위생 사각지대 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②	식중독균 추적관리 기반 마련	식약처	이행완료

과 제 명		추진부처	추진상황
4-3. 생활 속 식생활 교육·홍보 강화			
4-3-①	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		
	① (학생) 식품 안전·영양 교육	교육부 식약처	이행완료 이행완료
	② (고령자)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	식약처	이행완료
4-3-②	지역 먹거리 통합관리		
	① 지역단위 푸드플랜 계획 수립	농식품부	이행완료
4-3-③	건강한 농산물 소비촉진		
	① GAP 농산물 소비 촉진	농식품부	이행완료
	②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	농식품부	이행완료
10개 과제	32개 세부과제		

전략 5. [관리 기반]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
5-1.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

5-1-①	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		
	① 부처간-지자체간 협업 활성화	식약처 해수부	이행완료 이행완료
	② 정보공유 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③ 지자체 역량 강화	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	이행완료 이행완료 이행완료
5-1-②	법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		
	① 식품 관련 법령체계 개편	식약처	이행완료
	②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마련	국조실	이행완료
	③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	국조실	이행완료
5-1-③	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		
	① 전문위원회 개편	국조실	이행완료
	② 민관 합동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	국조실	이행완료

5-2. 대내외 소통·협력 강화

5-2-①	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		
	① 부처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	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	이행완료 이행완료 이행완료

과 제 명		추진부처	추진상황
	② 국민청원 창구 마련	식약처	이행완료
5-2-②	국제 교류·협력 강화		
	① 국제식품 기준·규격 설정 대응	농식품부 식약처	이행완료 이행완료
	② 국제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5-3.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			
5-3-①	감시·감독 역량 강화		
	① 수사역량 강화	법무부	이행완료
	② 검사 권한 강화	식약처 관세청	이행완료 이행완료
	③ 감시기법의 과학화	식약처	이행완료
5-3-②	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		
	① 전통시장 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②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	③ 취약계층 보호	식약처	이행완료
	④ 수입식품 관리 강화	관세청	이행완료
5-3-③	소비자 피해구제 및 법 위반시 처벌 강화		
	① 소비자 피해구제	법무부 식약처	이행완료 이행완료
	② 불법영업자 처벌 강화	식약처	이행완료
5-3-④	농축수산물 생산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		
	① 농축수산물 생산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	농식품부	이행완료
	② 양식수산물 유해물질 불법사용 처분 강화	해수부	지연
9개 과제	31개 세부과제		
55개 과제	총 158개 세부과제 (식약처 76, 농식품부 38, 해수부 17, 관세청 7, 농진청 6, 교육부 5, 국조실 4, 법무부 2, 복지부 2, 환경부 1)		

Ⅲ. 분야별 추진 실적

1 [기준 관리]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

1-1 식품 등의 기준·규격 재평가

1-1-① 식품 위해요소 기준·규격 재평가

① 식품 기준·규격 재평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김용무 연구관 T.043-719-2422,
유해물질기준과 엄미옥·김진숙 연구관 T.043-719-3853,
첨가물기준과 김동규 연구관 T.043-719-2504

1. 과제내용

- 식습관 변화, 환경오염 등에 따른 오염물질·잔류물질 등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준·규격 개정 추진
 - * 오염물질(벤조피렌 등), 잔류물질(농약), 미생물(저위해성 식중독균), 식품원료(식약공용원료 등), 식품첨가물(산도조절제 등)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·규격 재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조피렌 기준·규격 재평가(1~10월) -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(4월) - 다이옥신, PCBs 인체 노출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해물질 기준·규격 재평가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조피렌 기준·규격 재평가(1~10월) 및 재평가 보고서 심의(11월) -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(4월), 고시(10월) - 다이옥신, PCBs 인체 노출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(11월)·보고서 공개(12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(1~6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평가 결과 부처협의(7월) -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(안) 행정 예고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약 40종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완료(1~6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평가 결과 농촌진흥청 협의(7월) -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(안) 행정 예고(43건 / 5, 6, 7, 8, 10, 11월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생물(저위해성 식중독균) 기준·규격 재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7년 위해평가 결과 반영 기준·규격 개정(안) 행정예고(10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생물 기준·규격 재평가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조저장육류, 아이스크림류 등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,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규격 도입을 위한 재평가(1~9월) - 위해평가 내부협의(6월) 및 전문가 자문회의(9월) * 위해도 증가 가능성, 소비현황, 식중독 사례 등 고려 현행 기준 유지 결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원료 기준·규격 재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평가 대상품목 제조현황 조사(6월) - 식용근거, 안전성 자료 조사 등을 통한 재평가 결과 도출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원료 기준·규격 재평가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약 공용·제한적 사용 원료에 대한 재평가 수행(3~12월) - 재평가 대상품목 생산·판매실적 등 조사(6월) - 식용근거, 안전성 자료 조사 등을 통한 재평가 결과 도출(12월) 및 재평가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(12월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첨가물 기준·규격 재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품목별 사용현황 조사, 유통식품의 식품첨가물 함량 모니터링 및 섭취량 평가(3~11월) -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적정성 검토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첨가물 기준·규격 재평가 완료(21품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용현황 조사, 모니터링(1,071건) 및 섭취량 평가 완료(11월) - 섭취량 평가결과, 현행 사용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(12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비의도적 유해물질 ¹⁾ (%)	63	63
○ 잔류물질(농약) ²⁾ (건)	40	43
○ 저위해성 식중독균 정량규격 설정 검토 ³⁾ (건)	5	12
○ 식품원료 ⁴⁾ (건)	190	189
○ 식품첨가물 기준·규격 재평가 품목수 ⁵⁾ (건)	21	21

1) (기준개선 유해물질 수/재평가 대상 유해물질 수)×100

2)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건수(행정예고)

3) 저위해성 식중독균 정량규격 개정 건수(행정예고)

4) 식품원료 기준·규격 재평가 건수(재평가 결과보고서)

5) 식품첨가물 기준·규격 재평가 건수(재평가 결과보고서)

3. 성과 및 한계

□ 식습관·환경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등 위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기준 정비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

- 국민 다소비·다빈도 식품을 대상으로 환경유래 오염물질인 다이옥신과 PCBs를 재평가하여 알류(달걀)의 관리방안 마련
- 국내 등록 농약의 사용방법, 잔류량, 노출량 등을 재평가하여 디디티 등 4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
- 식품의 제조·유통·소비 전 단계에 걸친 오염도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 재평가를 통한 미생물 기준·규격 설정
- 식약 공용원료 및 제한적 사용원료 189종에 대한 재평가를 기반으로 합리적 기준·규격 설정 추진
- 품목별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재평가를 통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기후변화, 환경오염, 식이패턴 변화 등에 따른 오염물질·잔류물질 등에 대한 기준·규격 재평가 지속 추진('19)

1-1-①	식품 위해요소 기준·규격 재평가
②	식품용 기구·용기·포장 기준·규격 재평가

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김동규 연구관, T.043-719-2504

1. 과제내용

- 기구·용기·포장 이행가능 반응생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기준·규격 적정성 재평가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구·용기·포장 유래 반응생성물질 모니터링(2~10월) 및 안전성 평가(11월) ○ 기구·용기·포장의 기준·규격 재평가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응생성물질(니트로사민류 6항목)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(10월, 기준·규격에 적합) 및 안전성 평가(11월, 이행량 안전한 수준) ○ 기구·용기·포장의 기준·규격 재평가 완료(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성 평가 및 국내·외 기준·규격 등 비교결과, 현행 기준 유지 타당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기구·용기·포장 이행물질(항목)	6	6

3. 성과 및 한계

- 기구·용기·포장 유래 이행가능 반응생성물질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기준·규격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

4. 향후 추진계획

- 기구·용기·포장 이행가능 오염물질(총용출량, 과망간산칼륨소비량, 형광증백제) 등 재평가 추진('19)

1-1-1	식품 위해요소 기준·규격 재평가
③	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 및 개선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김신희 연구관 T.043-719-4252
 미생물과 김미경·황진희 연구관 T.043-719-4304·4303
 첨가물포장과 최재천 연구관 T.043-719-4353
 영양기능연구팀 허수정 연구관 T.043-719-4403

1. 과제내용

-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법 마련 및 개선
 - 유해오염물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
 - 미생물 유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미생물 시험법 개선
 -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개발
 - 식품 등에 적용성 향상 및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식품공전,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선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생물독소, 자연독소, 환경유래 유기오염물질 시험법 마련(12월) ○ 공인 미생물 시험법 체계 개선 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양생물독소(시구아톡신 3종), 자연독소(포뮬신, 루핀알칼로이드 5종), 곰팡이독소(맥각알칼로이드 12종), 오염물질(PBBs), 무기비소 및 유해금속(니켈 등 5종) 시험법 마련 ○ 식품 매질별 중금속(납, 카드뮴, 수은) 시험법 개선 ○ 아이스크림류의 시험용액 제조법 등 시험법 개선안 마련(6건/ 10, 11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중독균 검출법 개선(12월) 및 자원센터 운영(상시) ○ 식품첨가물 및 기구·용기·포장 중 이행물질 분석법 개발(12월) ○ 식품 등의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식품공전 등 시험법 개선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포자충 등 식중독 원인 시험법 개선(6건) 및 시험법 개정판 배포(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중독균 자원센터 운영관리지침 마련(4월) 및 수집균주 자원화(상시) ○ 식품 중 피막제 5종, 미지정 착색료 5종 시험법 개발(11, 12월) ○ 기구 및 용기·포장 중 휘발성유기 화합물, 이행물질(미네랄오일) 분석법 확립(11, 12월) ○ 영양성분 시험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처리법 등 개선 시험법 마련(비타민 A·E 동시분석 등 4건) ○ 특이성·정확성 향상을 위한 건강 기능식품 지표성분 등 시험법 마련(키토산 등 20건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시험법 및 가이드라인 마련(건)	44	59

3. 성과 및 한계

□ 유해오염물질, 미생물,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과학적 시험법 마련으로 위해요소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

○ 해양생물독소, 자연독소, 환경유래 유기오염물질 등 시험법 마련(12월)

○ 아이스크림류 등 공인미생물 시험법 등 총 6건 개선안 마련(11월)

* 국내·외 공인미생물 시험법 비교·검증을 통해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미생물 시험법 개선(안) 제시

- 식중독균 검출법 개선(12월, 원포자충 등 6종) 및 식중독균 자원센터의 체계적·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운영규정 마련(4월)
- 식품 등의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식품공전 등 개선 시험법 마련
 - * 영양성분 개선 시험법 4건, 건강기능식품 지표성분 등 개선 시험법 20건

4. 향후 추진계획

-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법 확립 및 개선 지속
 -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해오염물질(자연독소, POPs 물질, 유해금속 등) 시험법 마련 및 실태조사(12월)
 - 공인미생물 시험법 개선(안) 마련(12월)
 - 식중독 미생물의 신속·정확한 검출을 위한 시험법 개선(11월)
 - 식품 중 산도조절제 5종 시험법 개발(11월)
 - 기구·용기·포장 중 비스페놀 F 및 방향족아민 분석법 확립(12월)
 - 영양성분 등 시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 시험법 마련(올리고당 등 13종)

1-1-2	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·규격 재평가
①	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·규격 재평가

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엄미옥·정지윤 연구관 T.043-719-3852

1. 과제내용

- 수산물의 중금속 노출 저감화를 위한 중금속 규격 강화
 - 환경과 식습관 변화에 따른 중금속 인체 노출량을 반영한 기준·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라 노출기여가 높은 중금속 규격 강화·신설
 - * 강화 : 오징어(납, 카드뮴), 갑각류(납) / 신설 : 미역(납, 카드뮴)
 - 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중 안전성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확대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오징어(납), 갑각류(납), 미역(납, 카드뮴) 규격 강화·신설 고시(7월)	○ 오징어(납), 갑각류(납), 미역(납, 카드뮴) 규격 강화·신설 고시(2월) - 미역귀를 포함한 미역의 규격(납, 카드뮴) 개정(행정예고 9월, 심의 11월)
○ 오징어(카드뮴) 규격 강화를 위한 부처 합동 오염도 조사(10월) * 관련부처 협의(4, 9월),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(11월), 고시('19)	○ 오징어(카드뮴) 규격 강화를 위한 부처 합동 오염도 조사(4~10월) * 부처협의회(4, 9월), 오염도 자료 공유(식약처 9월, 해수부 11월)
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사용금지 물질 추가(12월)	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사용금지 물질 5종* 확대 행정예고(11월) * 겐티안 바이올렛, 메틸렌블루, 노르플록사신, 페플록사신, 오픈플록사신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중금속 기준 개정 ¹⁾ (건)	4	4
○ 동물용의약품 금지 ²⁾ (건)	2	5

¹⁾ 수산물 품목별 중금속 기준강화(신설) 건수(고시)

²⁾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금지 조치 건수(고시)

3. 성과 및 한계

□ 수산물의 중금속 규격 강화 추진

- 오징어(납), 갑각류(납), 미역(납, 카드뮴) 규격 강화·신설 고시(2월)
- 미역귀를 포함한 미역의 중금속(납, 카드뮴) 규격 개정 추진
 - * 부처협의(6, 8월), 행정예고(9월), 심의(11월), 고시('19.1 예정)

□ 안전성 우려가 있는 겐티안 바이올렛 등 5종 사용금지 물질 확대 (행정예고, 11월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수산물(오징어)의 중금속(카드뮴) 규격 강화 추진

- 부처 합동 오염도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오징어 카드뮴 규격 재검토 및 고시 추진

□ 동물용의약품 중 사용금지 물질 확대

- 국내·외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록사손, 아르사닐산 등 2종

1-1-3	인체 위해물질에 대한 통합위해성 평가
①	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 평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연구관, T.043-719-4504

1. 과제내용

-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평가 체계 구축 및 평가
 -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·물질에 대한 사람 중심 통합위해성평가 추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체적용제품·물질 통합위해성 평가 기반정보 확보 및 기술개발 (11월) ○ 총 노출량 평가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종 유해물질 주요 노출원별 분석법 개발 및 모니터링('18~) - 인체바이오모니터링 자료 활용을 위한 DB 정보 입력(12월) - PBPK 핵심모델을 활용한 PBPK 모델 개발(11월) ○ 비스페놀류(3종) 통합위해성평가 ('18년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합위해성평가 부처협의회* 구성 (3월), 인체 통합 노출평가방법 확립 및 노출알고리즘 확보(1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식약처, 환경부, 해수부, 산업부 등 5개 부처 및 9개 기관 참여 ○ 총 노출량 평가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스페놀류(3종), 프탈레이트류(7종), 파라벤류(4종) 분석법 확립 및 모니터링 착수 - 인체바이오모니터링 DB 입력 시스템 개발 및 모니터링 자료 2천여 건 확보(12월) - 과불화화합물(3종), 환경성페놀류(파라벤류) PBPK 모델 개발(11월) ○ 다양한 노출매체를 고려한 비스페놀류 3종 통합위해성평가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해물질 인체노출허용량 평가 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강영향평가, 체내 노출수준, 주요 노출원 분석 등 자료 확보 등 통합위해성평가 진행 ○ 유해물질 인체노출허용량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스페놀A, S, F 및 니발레놀,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류 등 5종 인체노출허용량 평가완료(12월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유해물질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건수(건, 누계)	54	54

3. 성과 및 한계

- 사람 중심의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반 확보
 - 다양한 노출원을 통한 정보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
 - 평가대상물질 인체노출허용량, 노출계수 확보, 바이오모니터링 DB시스템 확립, PBPK 모델 개발 등 총 노출량 평가 체계 구축

4. 향후 추진계획

- 구축된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위해성평가 추진
 - 대상 물질별 모니터링 자료 등 추가정보 확보를 통한 평가 수행

1-2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

1-2-①	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
①	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김진숙 연구관 T.043-719-3854

1. 과제내용

- 수입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관리 강화 및 국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PLS 제도 전면 도입

*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: Positive List System, PLS

**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PLS 우선도입('16.12)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PLS 전면 시행대비 사전준비(~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- 정부·협회·업체 등의 PLS 준비 상황을 총괄 조정 - PLS 제도 Q&A 제공(5월) ○ 농산물 농약 PLS 전면 도입 고시(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PLS 전면 시행대비 사전준비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약 잔류허용기준 5,320건 신설 및 개정(2~11월) - 관련부처와 PLS 준비사항 및 보완 대책 마련회의(9회) 및 이해당사자 대상 간담회·설명회(28회) 개최 - 이해관계자 대상 Q&A 배포(5월) ○ 농산물 농약 PLS 전면 도입 고시(2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(건)	140	267

* PLS 대비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건수(행정예고)

3. 성과 및 한계

□ PLS 전면 시행('19.1) 대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(5,320건)

- (국내 신규·직권 등록) 농산물 사용 확대 포함 신규·직권 등록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1,408건 신설 및 개정(2~11월)
- (국내 그룹 잔류허용기준)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대한 그룹 잔류허용기준 67건 설정(6, 11월)
- (Import Tolerance, IT)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 267건 잔류허용기준 설정(2~11월)
- (잠정기준) 토양오염 농약, 연속재배로 인한 전이 농약, 국내 생산 및 식품 수입 시 필요한 농약에 대해 3,578건 기준 신설(2~11월)

□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국내 농약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PLS 전면 도입

-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 (0.01mg/kg)을 적용(2월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PLS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
- 이해관계자(농민, 식품업체, 외국 등) 대상 설명회, 간담회 개최
- 신문, SNS 등에 PLS 관련 홍보

농촌진흥청

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이경원 사무관 063-238-0824

1. 과제내용

- 농축산물 잔류물질에 대한 PLS 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
 -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이 미등록 되지 않도록 현장 파악 및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필요시 직권등록
- 재등록 농약 및 국제적 위해성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실시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권등록 : 1,670적용대상 * 누계 : ('17) 1,223 → ('18p) 2,893 * 일정 : 설계 심의('18.2.) → 직권시험 (~'18.10) → 등록(~'19.4) ○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('1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등록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'18) 167품목 → ('19) 108 → ('20) 144 - 국제적 위해성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권등록 : 1,670적용대상(~'18.12) * 누계 : ('17) 1,223 → ('18) 2,893 * 일정 : 설계 심의('18.2.), 직권시험 (~'18.11.), 등록(~'18.12.) - 잠정기준 설정 : 4,441건 완료(~18.12) ○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('1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등록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: 202품목 - 국제적 위해성 농약(꿀벌위해농약, 농작업자 안전성 문제 농약)에 대한 대응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농약직권등록 건수(건)	1,670	1,670
○ 재등록농약의 안전성평가 건수(건)	100	202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등록농약 확대 등을 통한 PLS 조기 정착 유도

○ (등록농약 확대) 사용실태·수요조사를 반영하여 7,018개 등록

* 직권등록 1,670개, 잠정 안전사용기준 4,441, 신청등록 907

* 작물별 사용가능 농약을 현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파('18.12월)

□ (성과) 국제 규제강화 및 위해가능 농약에 대한 대응 조치

○ 꿀벌 위해 우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(3종)에 대한 유럽연합 세부평가결과, 주요 국가별 동향 분석 후 관리방안 마련 및 농작업자 안전성 문제 농약(메탐소듐)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

* EU 사용규제(4.27.)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(5월), 유럽연합 세부평가결과 확보(7월),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안건보고(7월), 외국동향 파악** 및 관리방안 검토 중(농과원)

** 호주(리벨 강화 조치), 일본(정보공유로 예방 강화), 미국(등록제한 후 재평가 중)

□ (한계)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의 법적 유효기간('21.12.31) 내에 직권등록으로 전환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PLS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현안 대응 및 보완·발전과제 발굴을 통해 농산물 잔류물질의 체계적 관리

○ 잠정기준 설정농약의 3년간 직권등록 전환 추진('19~'21)

- 대상농약: 약 5천개('18년 설정 4,441개, '19년 설정 예정 약 500개)

○ 농식품부,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농업현장의 PLS 조기 정착 유도

1-2-2	축·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
①	농장단위 전수검사 및 축산물 잔류물질 PLS 제도 도입

농림축산식품부

담당자 :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.044-201-2987

1. 과제내용

- 농장단위 계란·산란노계 살충제 표본검사(8%)를 전수검사 추진하고 살충제 허용기준치 위반농장에 대한 검사 강화 및 축산물 잔류물질 PLS 제도 도입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생산단계 잔류물질 검사 계획 수립('18.1월)	○ 생산단계 잔류물질 검사 계획 수립('18.1월)
○ 계란, 산란노계 검사 추진('18.1~12월)	○ 생산단계 계란, 산란노계 전수 검사 완료('18.12월)
○ 축산물 잔류물질 PLS 제도 도입 로드맵 수립('18.12월)	○ 축산물 잔류물질 PLS 제도 도입 식약처 등과 협의(5회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산란계 농장의 계란검사 건수(건)	1,239	1,342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계란 안전성 검사는 종전 샘플 검사(산란계 농가의 8%)에서 전체 산란계 농가로 대상을 확대하고, 연 1회 이상 검사 완료
 - 산란계 농가에 진드기 방제 매뉴얼, 효과적인 방제약품 보급, 사육 환경 개선 지도·홍보로 계란 안전성 검사 부적합 농가 감소*

* 부적합농가 : ('17년) 78호 → ('18년) 9호

- (한계) 계란 및 산란노계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, 부적합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농가 대상 동물용의약품·농약 등 사용기준 지도·홍보 지속 필요
- 축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과 관련, 사료·환경으로부터의 비의도적 오염 우려, 생산자단체 반발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시급

4. 향후 추진계획

-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란과 산란노계에 대한 전수검사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 지속 추진('19년)
- 축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(식약처 주관) 대비,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설정 하고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조사, 연구조사사업과 함께 미설정된 잔류허용기준과 휴약기간 설정 등 추진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정지윤 연구관 T.043-719-3852,
농축수산물안전과 이영희 사무관 T.043-719-3259

1. 과제내용

- 동물용의약품 오·남용 방지를 위해 축·수산물 대상 잔류물질(농약·동물용의약품)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 도입
 - 국내·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중인 동물용의약품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, 그 외에는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PLS제도 도입
-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
 - 살충제 검출 등 잔류위반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즉시 출고보류하고 잔류물질 규제 검사를 강화*

* 규제검사 강화 : (현행) 1회 - 2주-1회 → (개선) 3회 - 2주-3회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동물용의약품 PLS 도입 종합계획 (안) 마련(6월)	○ 동물용의약품 PLS 도입 종합계획 (안) 마련 및 관련부처 협의(3회) * 국조실, 농식품부, 해수부 참석
○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(12월)	○ 국내·외 사용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대(행정예고) * 아미노피린 등 11종(7월),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(11월)
○ PLS 도입 대비 동시분석법 개발 확대(12월)	○ 축·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위한 동시시험법 확대 고시(5월)
○ 「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」 개정(10월) * 주요내용 : 검사항목 확대, 잔류물질 시료채취 대표성 확보,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, 잔류물질 규제검사 강화, 유통단계 검사결과 공유 등	○ 「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」 개정 완료(9월) - 계란 살충제 검출 등 잔류위반 농가에 대한 규제 검사 강화 * (현행) 1화-2주-1회 → (개선) 3화-2주-3회 - 식용란 검사 수거장소를 식용란 선별포장업소까지 확대 - 잔류물질 시료채취 대표성 확보 및 검사항목 확대(농약 추가) - 유통단계 수거·검사 결과 공유 및 조치 강화 등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건수*(건)	19	24
○ 식용란 검사강화	고시개정	고시개정

* 축·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건수(행정예고)

3. 성과 및 한계

- 축·수산물 농약·동물용의약품 PLS 도입 종합계획 수립
 - 동물용의약품 PLS 도입 종합계획(안) 마련(6월) 및 관련부처 공동 협의체에서 PLS 도입방안 협의(1, 3, 5월)
 - * (참석) 국조실, 농식품부, 해수부, 농림축산검역본부, 국립수산물과학원

- 국내·외 사용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
 - 국내 허가사항 변경사항을 반영한 아미노피린 등 24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
 - * 행정예고 : 아미노피린 등 11종(7월),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(11월)

- PLS 도입 대비 동시분석법 등 개발 확대
 - 축·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위한 동시시험법 확대 고시(5월)
 - * 축산물(90종), 수산물(50종)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확대
 - * 동물용의약품외품 등 살충제(스피노사드 등 26종) 시험법 신설
 - * 주요 수입국에서 사용하는(국내 미등록)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3종 신설

- 생산단계 식용란 규제검사 강화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
 - 계란 살충제 검출 등 잔류위반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로 부적합 계란의 유통 차단을 통한 생산·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

4. 향후 추진계획

- 축·수산물 농약·동물용의약품 PLS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(안) 추진
 -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축·수산물 PLS 도입 일정 등 세부계획 마련
 - 수입업체,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PLS 교육·홍보 추진

1-2-②	축·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
②	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수산물 모니터링 확대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.044-200-5622
어촌양식정책과 류성봉 사무관 T.044-200-5619

1. 과제내용

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(POPs)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생산단계 해면어류에 대한 PCBs, 다이옥신 조사 계획 수립(1월)	○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 수립(1월)
○ 패류에 대한 농약류 및 다이옥신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('17.12월)	○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사업 계획 수립 및 통보('17.12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(%)	100	100

* 측정산식 : [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건수/ 위생조사 목표 건수]×100

3. 성과 및 한계

- 패류에 대한 농약류 및 다이옥신류 조사 실시
 - 패류 생산해역 15개(지정해역 및 후보 지정해역)에서 생산되는 패류에 농약류 14종 및 다이옥신류 17종 조사 실시

- 패류 생산 일반해역 56개에 대해서도 농약류 14종 조사를 위한 '19년도 예산 확보
- 예산 및 인력 등을 감안, 일반해역 생산되는 패류에 대한 다이옥신류 조사는 예산 확보 후 '20년도부터 조사 추진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(POPs)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예산 등 확보 추진
- 다환방향족탄화수소(PAHs, 4종) 및 다이옥신(17종) 조사를 위한 예산 (436백만원) 확보 추진

1-2-3	농약·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
①	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·농촌진흥청

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돈환 사무관, T.044-201-2561
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효경 사무관 063-238-0830

1. 과제내용

- 미허가·미등록 농약·동물용의약품을 농가 등에서 제대로 알지 못해 사용하지 않도록 판매기록 관리대상을 확대('18.12)
 - 현재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인 고독성 또는 보통 독성 중 9종 이외 농약에 대하여 농약의 특성, 포장단위 등을 고려하여 확대
-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 방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등 판매관리 강화(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(농식품부령) 개정)
 - 동물약품 판매업소(도매상 365개소, 동물약국 4,100, 동물병원 4,174)에서 동물용 살충제 등 판매 시 거래기록 보관 의무화(안 제22조제3항)
 -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동물용살충제 등 판매 시 투약지도 의무 부여(안 제22조제4항)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선정('18.6) ○ 농진청 고시 「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」 개정('18.10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선정('18.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: 소포장 농약 제외한 모든 농약 * 박완주의원 입법발의(농약관리법) ○ 농진청 고시 「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」 개정('18.9.14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판매상 등 대상 교육·홍보 실시 ('18.10~) ○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시행('19.1) ○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(추진시한 : '18.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판매상 교육('18) : 10,694명 ○ 농약관리법 개정('18.12.3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행 : 판매기록 의무화('19.7.1) ○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('18.6.29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살충제 거래내역 기록보존 의무화 -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의무화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판매기록 대상 농약	9	모든 농약

- * 현 농촌진흥청 고시 '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대상 농약'에서 9종의 품목을 명시하였으나, 2018년 12월 31일 농약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모든농약으로 범위를 확장하였음
- * 판매업소 전수점검을 실시(5,579업소)한 결과 구매자 정보의 기록·보존 대상 농약 관리를 위반한 업소는 없었음

<참고.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대상 농약 목록 (2017. 4. 24시행) >

품목명	등록규격 (유효성분의 함유량)
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	98.5%
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	56%
사이안화수소 훈증제	98%
마그네슘포스파이드 관상훈증제	56%
헥사지논 입제	5%
카바릴 수화제 <2011.4.13. 추가>	50%
포레이트 입제 <2014.9.1. 추가>	5%
다이아지논.포레이트 입제 <2014.9.1 추가>	5(2.5+2.5)%
포레이트.터부포스 입제 <2014.9.1 추가>	4.5(2+2.5)%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를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('18.12.31.) 및 판매상 등 대상 교육·홍보 실시
 - 법 개정 : (기존) 고독성 농약 등 9종 → (개선) 모든 농약(소포장 농약 제외)
 - 교육·홍보: 판매상 교육 실시('18년, 10,694명)
- (성과)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의 투약지도 의무화로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
 - 대상 판매업소 : 동물약국 4,242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424
- (성과)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의 살충제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로 안전사고 발생 시 제품 회수 등 신속 대응 기반 마련
 - 대상 판매업소 : 동물병원 4,402, 동물약국 4,242 도매상 424
- (한계) 농약관리법 개정 지연에 따라 법안 시행일 지연
 - 의원입법발의('18.3.27) → 개정완료('18.12.31) → 시행일('19.7.1.)

4. 향후 추진계획

- 판매기록 의무화 시행예정에 따라 판매상, 제조업자 교육·홍보 강화
 - 농약관리인 교육을 통한 이력관리제 교육·홍보 강화(10천명)
 - * 실효성 확보를 위해 판매기록 의무화 관련 교육 농진청에서 직접 실시
- 농약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판매기록 의무화 효율성 제고
 - 기존 농약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·활용 등 단계적 추진('19~'21)
 - * 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한 예산(63억) 및 인력확보(5명) 병행
-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투약지도 및 살충제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 지속 홍보 및 준수여부 점검(약사감시 연 1회) 실시

1. 과제내용

- 동물용의약품등의 판매기록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
 - 약사법 제85조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
- 수산용의약품 판매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·홍보 추진
 - 양식생산자, 약품판매자 및 유통업자 등 대상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고시 개정 ○ 양식생산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·홍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고시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사용기준 유효성분 5종 → 11종 확대 ○ 양식생산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·홍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업인 방역교육 : 48회, 3,173명 -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: 3회, 107명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산용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고시 개정	고시개정	고시개정

3. 성과 및 한계

□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고시 개정

○ 「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」 개정으로 수산용의약품 성분추가 및 성분별 치료대상 어종 확대

- 맞춤형 수산용의약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사용 기준 유효 성분 추가(5종→11종) 및 품종별 사용기준 설정

4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 없음

1-2-3	농약·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
②	수의사 처방 항생제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돈환 사무관, T.044-201-2561

1. 과제내용

- 동물용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지정 품목(성분) 확대
 -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확대(20종 → 40종 이상, ~'20년)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- 20종 → 40종 이상, ~'20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(농식품부 고시) 개정 시행 - (종전) 20종 → ('17.11월) 25종 → ('18.5월) 32종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(종)	32	32

3. 성과 및 한계

- 동물용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 및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성분 단계적 확대
 - (종전 '13.8월) 20종 → ('17.11월) 25종 → ('18.5월) 32종(페니실린 등 7종 추가)

□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처방대상 항생제 지정 범위 확대 필요

○ '20년까지 인체(WHO) 및 동물(OIE)의 중요 항생제 전 성분에 대하여 처방대상 항생제 지정 추진

* (당초) '20년까지 40종 → (개선) '20년까지 61종(계획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“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” 개정 계획 보고('19.3월), 행정예고('19.5월) 및 개정 고시('19.6월)

○ ('18.5월) 32종 → ('19년) 61종

1-2-3	농약·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
③	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.044-200-5622

1. 과제내용

- 수산물 생산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계획 수립(2월)
-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및 재심사 실시
 - 수산용의약품의 재평가 및 재심사 실시
-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기준 설정 추진
 - 어종별 수산용의약품의 안전성·유효성 연구
-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지도 및 관리 체계 구축
 - 수산용의약품 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
 - 양식 수산물의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출하전 수산용의약품 사용 실태 조사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재심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성·유효성 평가를 통한 수산용 의약품 재평가 실시 - 수산용의약품 재심사(수시) 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 개정 및 관련 연구 수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및 재심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산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18년도 재평가 : 2종16제품의 안전성·유효성 검토 * '19년도 재평가 품목 공고/8종22제품 - 수산용의약품 재심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산용 백신(2건) 및 항생제(6건) 실시 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 개정 및 관련 연구 수행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 개정 - 어종별 맞춤형 수산용의약품 과제 수행 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산용의약품 제조(수입)업체 실사 및 수거·검정 실시 -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장 지도·점검 - 수산용의약품 제품요약 해설집 발간·보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산용의약품 관련 행정규칙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·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등 4건 실시 - 어종별 맞춤형 수산용의약품 과제 수행 완료 ○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체 약사감시 및 약품 수거·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조업체 실사 : 15개소 * 수거검정 : 9개 시·도 및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거한 102건 분석 -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장 지도·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8개 시·도 양식장 점검(845 개소) 및 시료 채취·분석(62개소) - 2018 수산용의약품 제품요약 해설집 발간·보급(5,000부), 머니투데이 등 3건 보도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산용의약품 수거검정 횟수(회)	100	102

3. 성과 및 한계

□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장 지도·점검

-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등 지도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
 - * 수산용 의약품 점검 시 시료채취 및 분석 양식장수(62개소)

□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수거·검정

- 제조업체 및 수산질병관리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분석(102점)

4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 없음

1-3 기술발전 · 기후변화 대비 사전대응

1-3-①	유전자변형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
①	유전자변형식품(GMO) 안전성 심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주인선 연구관 T.043-719-2359
 식품위해평가과 김순한 연구관 T.043-719-4503

1. 과제내용

-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기준정비 및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독성, 알레르기성 등 안전성 재심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확인 등 사전안전관리 강화(연중)	○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규정 개정*(1월), 승인 후 10년 경과품목 안전성 재심사(2건, 6월) 및 업계 간담회 개최(6월, 11월) * 재심사, 후대교배종 심사기준 및 수수료 개정 등 「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고시
○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개발 및 개선(11월)	○ 유전자변형 옥수수 양성대조물질 검증(9월) 및 옥수수, 면화 등 정성·정량시험법 확보(8월)
○ 유전자변형동물(GM동물) 안전성 심사 기준(안) 마련(12월)	○ 유전자변형동물(GM동물) 안전성 심사 규정 해설서 마련(12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심사 건수(건)	2	2

3. 성과 및 한계

EU, 일본 등과 국제 규제조화를 위한 심사 규정 개정(1월)

- * 재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염기서열 분석자료 등 심사항목 추가, 심사 수수료 개정(식약처 고시 제2018-6호)

승인 후 10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 재확인(2품목, 6월)

- * 유전자변형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자일라나아제 2품목(Sherzyme 및 Pentopan)

4. 향후 추진계획

승인 후 10년마다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심사 지속('19년)

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개발 및 개선 지속('19년)

1-3-①	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강화
②	유전자변형식품(GMO) 표시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포시인증과 남혜선 연구관 T.043-719-2185
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장미란 연구관 T.043-719-2352

1. 과제내용

- 유전자변형식품(GMO) 표시제도 개선 검토
 -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개선 검토
-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온라인 소통강화를 통한 GMO 인식 개선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GMO 표시제 개선 검토 협의체 운영(연중)	○ GMO 표시제 개선 협의회 회의 개최(3회/ 5, 12월)
○ GMO 표시제 개선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비용 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(5월~)	○ GMO 표시제 강화에 따른 비용·편익 분석 등 정책연구* 수행('18.5~'19.1) *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연구(식품안전정보원)
○ 소비자, 대학생, 급식관리자 등 대상별 GMO교육 확대 운영(연중)	○ 소비자, 대학생, 급식관리자 대상 교육(1~12월, 102회)
○ 지자체, 협회 등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(연중)	○ 지자체, 협회 등에 교육 콘텐츠(소책자) 지원 * 서울시 금천구 등 53개 지자체 및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배포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SNS 정보 제공 및 홍보 실시(연중)	○ 카드뉴스, 동영상, 웹툰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SNS 송출
○ '신소재식품 서포터즈' 구성·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(연중)	○ '신소재식품 서포터즈'를 통한 GMO 등 신소재식품 관련 정보 블로그 기사 작성 및 전파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GMO 교육 횟수(회)	95	102

3. 성과 및 한계

-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의 GMO 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객관성·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회 출범
 - 기존 협의회 운영을 종료(5월)하고, 중립적 갈등조정 전문기관을 통해 소비자·생산자·업계를 포함한 새로운 협의회 구성·운영(12월~)
 - GMO 표시제 강화는 그간 시민,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지속된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필요
- 유전자변형식품 교육 예산액(약 65,000천원) 부족으로 교육 대상자 확대 등 교육 수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

4. 향후 추진계획

- 『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』 지속 운영('19년)
- 대상 맞춤형 『유전자변형식품 바로알기』 교육 및 홍보 지속 실시

1-3-2	최근 도입 신 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토대 마련
①	유전자 가위기술 및 나노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장미란 연구관 T.043-719-2352
 식품위해평가과 김순한 연구관 T.043-719-4503

1. 과제내용

- 유전자가위기술 및 나노기술 등 신기술 이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 구축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전자가위기술 이용식품 안전관리 부처협의(2, 6, 10월) ○ 국내·외 나노기술응용식품에 대한 유통실태 및 현황조사(4월) ○ 나노기술 4개 유형에 대한 체내 흡수율 평가 시스템 검증(11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전자가위기술 이용식품 안전관리 방안 관계부처 협의(2, 10, 1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연구개발 동향 및 외국 규제현황 등 논의(산업부·과기정통부 등 8개 기관) ○ 국내·외 나노기술응용식품에 대한 유통실태 및 현황 조사(4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품목제조보고, 온라인마켓, 우드로윌슨센터DB를 활용(식품원료에 한함) ○ 체내흡수율 평가 대상 나노기술 제조·분리공정 확립(7월) ○ 나노기술 4개 유형에 대한 체내 흡수율 평가 시스템 검증(1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상 나노기술 유형: 이온겔화, O/W 에멀전화, 분무건조, 나노분쇄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체내흡수율 평가 시스템 검증 건수(건)	4	4

3. 성과 및 한계

- '인체 소화 및 체내 흡수 모방 시스템'을 이용한 4개 나노기술 유형*에 대하여 체내흡수율 평가 시스템 검증

* 이온겔화, O/W 에멀전화, 분무건조, 나노분쇄

4. 향후 추진계획

- 유전자가위기술 이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 지속('19년)

- 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성평가 기반 마련 지속('19.11월)

- 3개 나노기술 유형*에 대한 체내흡수율 평가 시스템 검증

* 층상자기조립법, 나노구조지질운반체, 3차원 인쇄

1-3-3	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대응 및 모델 마련
①	폭염·온난화에 따른 병원체 발생 대응체계 마련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사무관 T.043-719-3241
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김미경 연구관 T.043-719-4304

1. 과제내용

비브리오패혈증 예측시스템* 구축·운영

* 수온이 상승하거나 낮은 염분에서 활성화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인자(수온, 염분 등)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 예측

폭염,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병원체 발생 대응체계 마련

○ 기후변화에 따라 위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미생물*에 대한 생육예측모델**을 개발, 위해평가 기초자료로 활용

* 캄필로박터, 황색포도상구균,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

** 환경인자 및 식품특성에 따른 미생물 증식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는 모델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비브리오패혈증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 확대 구축(12월)	○ 전 해역에 대한 3일 예보 시스템 확대 구축 및 고도화(12월) * ('17) 당일 및 남해안 3일 예보 → ('18) 당일 및 전 해역 3일 예보
○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운영(4~10월)	○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지수 제공(4월~) 및 고위험지역(예보지수 경고, 심각)에 대한 집중관리(6~8월) * 횃집 등 698개소 점검(부적합 없음) 및 수족관물 등 594건 검사(검출 2)
○ 미생물 생육예측 모델 개발	○ 미생물 생육예측 모델 개발 - 건조저장육 등에서 캄필로박터 제주니 및 황색포도상구균 생육 예측모델 등 16건 개발 및 검증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비브리오패혈증시스템 구축	전 해역	전 해역
○ 지도·홍보 횡수(회)	100	108
○ 미생물 생육예측 모델 개발(건)	10	16

3. 성과 및 한계

-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예방관리 기반 구축 및 업무 효율성 제고
 - 비브리오패혈증균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 예방 활동을 통해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수산물 안전 강화
- 미생물 생육예측 모델 개발을 통한 병원체 발생 대응 기반마련
 - 건조저장육에서 캠필로박터 제주니 등 생육예측모델 개발로 기후 변화 대비 사전 예방적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

4. 향후 추진계획

- 비브리오패혈증균 관리 부처(부서) 및 대국민 예보지수 제공('19.3~)
 - * 식약처(식중독 예방), 질병관리본부(감염병 예방) 및 해수부(생산해역관리)
-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발생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자료 축적 및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
- 기후변화에 대비한 병원체 발생 대응체계 지속 마련('19~)
 - * 김치류에서 병원성대장균 등 미생물 생육예측 모델 개발

1-3-4	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
①	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

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유흥식 연구관 T.051-720-2630

1. 과제내용

- 연근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산물 중의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저감화
 - 패류(굴, 바지락 등) 중의 유해세균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
 - 수산물(해조류, 패류 등) 중 유해 중금속 저감화 및 관리방안 연구
- 온난화 대응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에 대한 분석법 확립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패류 중의 유해세균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품종 : 굴('17~'18년), 바지락('19~'20년) ○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 저감화 및 관리방안 연구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해 중금속(납, 카드뮴, 수은 등)의 모니터링 및 저감화 ○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에 대한 분석법 확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구아톡신, 팔리톡신, 브레비톡신 분석법 마련('18~'19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굴 중의 유해세균(대장균 등)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굴 대장균 인공정화 최적조건 구명(1품종) ○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 모니터링(194건) 및 저감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톳 중의 무기비소 저감 효과 구명(57.3~83.4%) ○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에 대한 분석법 확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LC-MS/MS를 이용한 시구아톡신 분석법 확립(1건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패류 정화 조건 구명(품종)	1	1
○ 중금속 저감화 및 관리방안 연구(건)	128	194
○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 분석법 확립(건)	1	1

3. 성과 및 한계

□ 굴 중의 유해세균(대장균 등)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

- 굴 인공정화 최적 정화조건 구명(대장균 2일 이내 기준치 이하 감소)

□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 저감화 및 관리방안 연구(연중)

- 전국 연안 패류생산 해역(64개소) 패류(128건) 및 다소비 해조류(미역 등 66건) 유해 중금속 모니터링
- 해조류(툰) 중의 유해 중금속(무기비소) 저감 효과 구명
 - * 툰 중의 무기비소는 활성탄 처리시 57.3~83.4% 저감

□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 분석법 확립

- 한·일 공동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(시구아톡신) 분석법 확립 및 기술 연수
 - * 일본 해양생물독소 전문가(2명) 초청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('18년3월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패류(바지락) 중의 유해세균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

□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(납, 카드뮴, 수은 등) 모니터링 지속 추진

□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(팔리톡신, 브레비톡신)에 대한 분석법 확립

2

[생산·제조]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

2-1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

2-1-1 (농산물) 농지·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

① 농경지 오염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조희윤 사무관 T.044-201-2362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이철호 사무관 T.054-429-4135

1. 과제내용

- 농산물 재배환경 관리를 통한 농산물의 유해물질 오염사전 차단
 - 폐광산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재배환경 중 유해물질 조사
- 양분관리 목적 및 대상물질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양분부하량 산정과 체계적인 양분관리대책 마련

2. 추진실적

- 중금속 오염우려지역 중금속 실태조사 및 '양분관리제 도입' 검토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배환경 중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- 공항, 고속도로 등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 중금속 실태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양오염이 우려지는 지역 주변 농경지 관리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- 전체 41지구 조사결과 16지구 오염확인 * 전체 5,714필지 중 69필지 오염확인 (기준 초과율 1.2%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경지 투입 양분의 총량을 관리하는 ‘양분관리제 도입’ 연구용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분부하계수 등 양분수지 산정방법을 표준화하여 지역별 가이드라인 제시 - 인센티브 제공으로 양분관리제 채택 유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부와 협업하여 ‘양분관리제 도입’ 연구용역 실시하고 양분관리 매뉴얼 개발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자체 도입 위한 시범사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개소 선정(경기도, 충북도) - 가축분뇨 자원화율 91.2% 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위탁처리(15.4%), 농가 자체 처리(75.8%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재배환경 잔류조사 추진실적(건)	6,000	5,714
○ 가축분뇨 자원화율(%)	91.2	91.2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양분관리 매뉴얼 개발 완료하였고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
 - 아울러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율 91.2% 달성
- (한계) 중금속 오염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며, 양분수지 산정방법에 대한 기관간 이견차이 발생
 - 토양오염우려기준(1지역)을 초과한 필지에서 재배하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, 1지역에 농경지 외 학교용지, 공원 등 농경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의 오염우려기준임
 - 농경지에서 작물흡수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령에 의한 오염기준관리 필요

- 양분관리제도 시행 방법론(양분수지 산정방법)에 대한 환경부와 이견 차이로 추가 협의 필요
 - * (Soil budget) 대기 휘산량을 제외하고 산정, 농가의 양분 삭감 노력 반영 (Land budget) OECD 산정방법, 토양 내 양분 삭감 노력 반영 안 됨
- 자원화시설 부족으로 퇴·액비 품질이 저하되고 관리의 한계점 노출

4. 향후 추진계획

- 폐광산 이외의 중금속 오염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(복토, 정화, 용도 전환 등)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 추진
- 환경부와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방법 설정
- 악취 개선 등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품질 관리 지속 추진

농촌진흥청

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박상원 농업연구사 T.063-238-3238
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정구복 농업연구관 T.063-238-2440

1. 과제내용

-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 및 관리기술 개발
 -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
 - 다사용 식물추출물 유효성분 안정성 검증
- 재배환경 및 농산물 중 중금속 안전관리 기술개발
 - 비소흡수특성 규명 및 저감화 기술 개발
 - 중금속 모니터링 및 노출평가

□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농약 안전관리 기술개발

- 다성분 검출 및 환경 중 농약 모니터링 기술 체계화

□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작업자 보호를 위한 농약 관리 기술 개발

- 농업인 농약 노출량 산정모델 및 저감기술 개발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 및 관리기술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- 다사용 식물추출물 유효성분 안정성 ○ 재배환경 및 농산물 중 중금속 안전관리 기술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소 등 중금속 모니터링 및 노출평가 - 비소 흡수특성 규명 및 저감화 기술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기농자재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백리향, 팔마로사, 시트로넬라 ○ 유효성분의 온도 안정성 검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나무(Tea tree oil), 유차나무 ○ 중금속 오염 복원 농경지 오염실태 조사 및 비소 저감화 기술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토양개량·복원 완료 농경지 중금속 오염도 조사(10폐광산 102필지) 및 사후관리 강화 건의(정책제안) - 쌀 등 식품 중 무기비소 분석법 개선(정책제안, 식약처 공동) - 비소 오염 취약지에서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한 물 관리기술 확립(영농활용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농약 안전 관리 기술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난분석 신규 등록농약 분석기술 개발·보급 - 다성분 검출 및 환경 중 농약 모니터링 기술 체계화 - 농업인 농약 노출량 산정모델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업환경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 검사용 잔류농약 분석법 보급 : Nereistoxin 등 3건(정책제안) - 유기염소계 토양잔류량 조사 - 전신복장노출시험법, 농작업자 노출량 산정 모델 확립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(종, 누적)	12	16
○ 일반/취약농경지 중금속 DB 구축 건수*(건)	2,070	2,970
○ 중금속 오염 농경지 저감화 기술개발(건, 누적)	2	4
○ 난분석 신규등록농약 분석법개발(건, 누적)	7	10

* 농업환경자원변동평가 사업을 통해 흙토람에 구축된 일반/취약 농경지 중금속의 DB를 구축함

3. 성과 및 한계

□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공정분석법 개발 및 가열 안정성 검증

- 분석법 개발 : 백리향(thymol 등), 팔마로사(geraiol 등), 시트로넬라 (citronellal 등)
- 가열안정성 확인 : 유차나무(oleic acid, linoleic acid), 티트리(4-terpeniol, α -terpenine, γ -terpenine)

□ 중금속 오염 복원 농경지 오염실태 조사 및 비소 저감화 기술 개발

- 토양개량·복원 완료 농경지 중금속 오염도 조사로 오염 재출현 확인
 - * 조사대상 10 폐광산 102필지 중 22필지
- 비소 오염 취약지에서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한 물 관리기술 확립
 - * 유수형성기 이후 물 공급을 줄여 비소 농도 약 40% 저감
- 1% 질산 추출법을 이용한 쌀 등 식품 중 무기비소 분석법 개선 (식약처 공동)
 - *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반영(식약처 고시, '18.7.13.)

□ 농산물 및 농업환경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

- 수출 검사용 잔류농약 분석법 보급: Nereistoxin 등 3건

- 표면증강라만산란(SERS)법을 이용한 농약성분 신속 검출 기술 개발
- 항공방제 농약 비산저감 안전 사용 매뉴얼 보급
- 유기염소계 농약의 토양잔류량 조사
 - * 과수원(300지역), 밭(141), 인삼밭(180) 방사장, 목축지(40)
- 전신복장노출시험법, 농작업자 노출량 산정 모델 확립
 - * 살포기(동력, SS), 작물(벼, 사과, 포도, 고추 등)

4. 향후 추진계획

- PLS 전면시행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예방기술 조기 개발 필요
 - 농약의 비의도적 오염 저감을 위한 신규 R&D 기획('20)
 - 농약비산·후작물 잔류 저감, 농약제형, 살포기술 및 살포장비 (노즐) 최적화 등
- 장기 잔류성 농약의 토양잔류 후속대책 마련 시급
 - 농경지 농약 잔류 조사 및 저감기술 등 개발 추진
 - 전국 농경지 토양 중 DDT 등 농약 잔류량 조사 지속 추진(4년1주기)
 - DDT의 작물흡수이행 조사 및 농자재 처리 저감기술 개발
 - 현장에서 적용되는 토양 중 오염물질 제거방법 개발
- 중금속 오염 복원 농경지 오염실태조사 및 비소 저감화 기술 개발
 - 토양개량·복원 완료 농경지 중금속 오염도 조사
 - 경남·북 및 충북 소재 10개 폐금속 광산 지역
 - 벼의 비소 흡수 저감을 위한 토양개량제 처리기술 개발

2-1-①	(농산물) 농지·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
②	농업용수 모니터링체계 구축·운영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강대일 사무관 T.044-201-1857

1. 과제내용

- 농업용수 수질 상시 모니터링 및 개선 시행
 -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(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)
 -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4회/년 수질 상시 모니터링 실시
 - 수질기준 IV등급 초과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추진(87개소)
- 폐광산 등 오염원 하류 저수지 중금속 모니터링 강화
 - 유역내 폐광산이 위치한 112개소에 대해 중금속모니터링 강화 (1회/년→4회)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업용수 수질 상시 모니터링 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질측정망(975개소) 수질조사 실시 (4회, 분기 1회) ○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87지구 중 '17년까지 25지구 완료, '18년 6지구 완료목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시설 수질조사(950개소 4회/년, 19개 항목)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측정망 975개소 중 25개소의 수질은 환경부 호소수질측정망자료 인용 - 측정망 대상 시설 상류 오염원 조사(975개소 1회/년) 완료 ○ 수질개선사업 '18년 공정 연내 마무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조사 7지구 및 시공 12지구 (신규 5, 계속 7) '18년 공정 완료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금속 기준치 초과 등 유해우려 저수지 중점 관리(연중) - 저수지 내 중금속 모니터링 실시 (연 4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질개선사업 7지구 준공(87지구 중 누적 32지구 준공) - 기 준공 17지구 사후모니터링 시행 ○ 중금속 오염 우려 저수지 수질 조사 완료 - 상류 폐금속광산 분포 저수지 중금속 조사(112개소, 4회/년, 수질 6개 항목 및 퇴적물 8개 항목) * 중금속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질측정망 수(개소)	975	975
○ 수질기준 IV등급 만족도(%)	95.0	88.8
○ 수질개선사업 추진율(%)	35.6	36.8

3. 성과 및 한계

-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을 통하여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구축 기여
 -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975개소(4회/년), 중금속 오염 우려저수지 112개소(4회/년) 조사 목표 달성, 수질개선사업 7지구 준공으로 목표(6지구) 초과 달성
 - 수질오염 근본 원인인 저수지 상류 오염원 관리 미흡 등으로 수질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수질기준 IV등급 만족도 목표 미달성

4. 향후 추진계획

-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저수지 상류 오염원 관리 강화
 - 저수지 상류 오염원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수질관리 MOU 체결 등 오염원 관리 협력체계 강화로 수질기준 IV등급 만족도 제고

2-1-①	(농산물) 농지·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
③	농자재 위해요소 실태 조사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손병철 사무관 T.054-429-4135

1. 과제내용

- 농산물 생산자재 관리를 통한 농산물의 유해물질 오염사전 차단
 - 농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자재에 대해 잔류농약, 중금속, 항생물질 등 위해요소 실태조사 실시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생산자재(벼섯배지, 일반퇴비 등)에 대한 잔류농약, 중금속, 항생물질 조사 100건	○ 퇴비(항생물질) 50건, 배지(잔류농약) 30건, 배지(중금속) 30건 조사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재배환경 잔류조사 추진실적(건)	100	110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재배환경에 대한 유해물질(잔류농약 등 3종) 관리를 통하여 생산기반이 되는 퇴비·배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
 - 잔류농약(320종), 중금속(8종), 항생물질(8종) 추적조사

- (한계) 농경지 중금속 분석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, 농경지에서 작물로 이행여부 등을 파악을 위하여 현재의 토양오염 우려기준과는 별도의 오염기준 설정 필요
- 농경지의 중금속 관리는 농지법에서 유해물질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하나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음
- 가축에게 투여된 항생제가 가축분뇨 등을 통하여 작물흡수이행 여부파악 등을 위한 확대조사 필요
 - (동물용항생제 8종) 설파디메톡신, 설파메라진, 설파메타진, 설파퀴녹살린, 설파티아졸, 테트라사이클린, 옥시테트라사이클린,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

4. 향후 추진계획

- 재배환경(농지·용수·자재 등)에 대한 별도의 오염관리 기준설정이 필요하며, 관련 제도정비 등 추진 필요
- 가축에게 투여된 항생제 작물흡수이행여부 지속 추진

2-1-①	(농산물) 농지·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
④	친환경 인증 기준에 환경오염관리기준 마련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진수 사무관 T.044-201-2432

1. 과제내용

- 살충제계란사건(17.8)으로 친환경 인증 계란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 심사 등 기준 강화 필요
 - 현재는 위생·안전분야 심사기준이 미흡하고, 갱신심사 과정에서의 잔류물질 검사도 소극적으로 실시(농약 사용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검사)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생·안전관리 심사기준 보완을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* (현행) 품질관리 중심 → (개선) 품질관리 + 위생·안전(GAP·HACCP) 추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장 주변 오염 방지, 수확작업 전후의 개인위생 및 작업장 등의 위생관리 인증기준 마련 * (현행) 품질관리 중심 → (개선) 품질관리 + 위생·안전(GAP·HACCP) 추가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	개정	개정완료

3. 성과 및 한계

- 위생·안전 분야 인증기준 보완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확산이 기대되나, 친환경농어업의 본질적 가치인 '과정중심'의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에는 한계

2-1-②	(축산물) 사료 안전관리 강화
①	사료 내 잔류농약 잔류기준 및 검사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김동일 사무관 T.044-201-2359

1. 과제내용

사료 내 잔류농약 잔류기준 및 검사 강화

- 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5개 살충제 성분*을 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 기준에 포함

* 플루페녹수론, 에톡사놀, 피리다벤, 클로르페나피르, 테트라코나졸

- 국내 유통 사료 검사·검정(3,950건),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(연 2회), 국내 유통·수입 사료 모니터링 실시(400건)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(고시)」 개정 추진	○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(고시)」 개정 완료('18.11월) - 5개 살충제 성분 관리대상 추가
○ 사료의 품질·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·검정 확대	○ 사료검사·검정 확대 : '18년 4,406건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사료검정건수(건)	4,350	4,406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사료의 관리대상 잔류농약에 미설정되었던 살충제 성분을 추가하는 한편, 사료검사 물량을 확대하여 사료 안전성 강화
 - 사료의 잔류농약 관리대상 : 현행 121종 → 개선 126종(5종 추가)
 - * 플루페녹수론, 에톡사놀, 피리다벤, 클로르페나피르, 테트라코나졸
 - 사료검사·검정 물량 : '17년 4,147건 → '18년 4,406건(6.2% ↑)
- (한계) 사료의 관리대상 잔류농약 성분을 추가했지만 아직도 축산물에는 설정되었으나 사료에는 미설정된 42성분 존재
 - 축산물에는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(99개)되어 있으나, 사료에는 설정되지 않은 42개 농약성분 존재
 - 미설정된 성분에 대해 사료를 통한 축산물로의 전달가능성 등을 검토하고, 필요시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사료 내 관리대상 잔류농약(146성분)이 축산물 관리 성분(99성분)과 연계되도록 잔류농약 기준 확대
 - 축산물에는 있지만 사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 농약 잔류특성을 조사하여 허용기준 설정 필요 여부 검토('19.상)
 - * 42성분의 경우 대부분 국제적으로 사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재배과정에서의 비산(飛散) 등 다양한 가능성 검토 필요
 - 검토결과, 전달 가능성이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 사료 잔류허용 기준 설정(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, '19년)
- '19년 사료검사·검정계획에 따라 사료검사 지속 추진

2-1-3	(축산물)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
①	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사무관, T.044-201-2336
 동물복지정책팀 이승환 사무관, T.044-201-2372
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황성철 사무관, T.044-201-2555

1. 과제내용

-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, 양질의 축산물 생산
 - 농장 간 500m 확보를 위한 농장 이전 지원, 사육기준 마련, 동물 복지인증 후 직불금 지원, CCTV 설치 의무화, 가금농장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을 추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(시범) 계획 마련	○ '18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 시범사업 지침 마련('17.11월) 및 축산개편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마련('18.9월)
○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(30%) 상향 지원(1월~)	○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금 보조 30% 지원(9,744백만원)
○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(안)과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('18)	○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로드맵 마련 ('17.12월), 축산농가 동물복지 실태 조사 완료('18.11월),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안 마련('18.12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물복지 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('18) ○ 가금 사육농장 CCTV 설치 의무화 ('18.7월 시행) ○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도입 * '18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 직불금 지급 규정(안) 마련('18.12월) ※ '19년 직불금 예산(19.5억원) 요구 하였으나 기재부 미반영 ○ 닭, 오리 사육농장과 부화장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('18.5.1 개정, '19.7.1 시행) ○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* 이며, '17.11월부터 행정지시를 통해 우선 시행 중 * '18.11.8,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, 상임위 계류중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(개소)	2	1(5호)
○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(개소)	169	198
○ 축산법 시행령 개정	개정완료	개정완료
○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	개정완료	국회 계류중

3. 성과 및 한계

□ '17. 12월 타국 사례 등을 검토하여 동물복지형 축산기준(안) 마련, 축산농가 동물복지 실태조사('18.7~11월), 관계기관(단체) 의견 수렴* 중

* 동물복지형 축산기준(안)을 바탕으로 산란계 사육밀도는 완화(0.05㎡/마리 → 0.075, '18.9월), 타 기준기준(안)에 대한 단체 간 입장차가 있어 의견수렴 (4회, '18.12월~)

-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은 전년(145농가) 대비 36% 증가한 198농가 인증하여 역대 최대치 실적 달성

* ('16) 114 개소 → ('17) 145 → ('18) 198

- 축산농가 동물복지 실태조사('18.7~11월)를 했으나, 계절적 요인(기온 등), 농가 지원방안, 유예기간 등 검토를 위해 실태조사의 정례화 필요

-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

- 축사신축, 개보수, 시설·장비 교체 등 320농가 선정 및 지원

- 입식 전 신고제 도입을 통해 가금농가 차단방역 강화

- 입식 전 농가 자체점검과 지자체의 농가단위 방역관리 강화로 AI 발생 예방에 기여

4. 향후 추진계획

- 축산물안전, 질병예방, 악취저감 등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속 지원

-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 마련 및 '20년도 예산 요구('19 상반기)

- 임신돈 스톨 사육제한, 강제환우 금지 등 동물복지형 기준안 확정, 동물보호법·축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

- 축산농가 동물복지 실태조사, 동물복지축산 인증 직불금·컨설팅 등 '20년도 예산 요구(기재부)

- 입식 전 신고 의무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('19)

1. 과제내용

-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동물복지형 축사관리 기술 개발
 - AI 접목 동물행동 및 생체정보 기반 동물복지 사양관리기술 개발
 - ICT 기반 동물복지사육시설 통합관리 및 생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
- 축사 내부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자동화 시스템 개발
 - 원격환기 제어, 액상사료급이기·착유시스템·축산분뇨처리 자동화 등
- 생체정보 및 성장모델 기반 미래형 양돈 스마트팜 모델 개발
 - 가축 질병발생징후 예측기술, 사육단계별 정밀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
 - ICT 기반 동물복지 사육시설 통합관리·생산시스템 개발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I 접목 동물행동 및 생체정보 기반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생체정보기반 동물복지 관리 기술 개발 : 젓소('18), 돼지('19) ○ 원격 환기제어, 액상사료급이기·착유시스템·축산분뇨처리 자동화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'18) 액상사료자동급이기 → ('19) 로봇착유시스템 → ('20) 축사분뇨 청소로봇 ○ 가축 질병발생 징후 예측기술, 사육단계별 정밀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I 접목 동물행동 및 생체정보 기반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생체정보기반 동물복지 관리 기술 개발 및 농식품부 브리핑 : 젓소('18) ○ 돼지 액상사료 자동급이기 개발 및 현장실증 : 부여 양돈농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.5톤 용량의 액상사료자동급이기 시작기 제작 및 농가현장 실증 ○ 돼지 사육단계별 정밀사양관리를 위한 성장모델 개발 : 1종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축산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 건수(건)	3	3
○ 축산 스마트팜 협업체계 강화 건수(건)	5	5

* 축산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 : 3건(젓소 생체정보 수집장치, 액상사료 자동급이기, 젓소 유두 자동인식장치 등)

* 축산 스마트팜 협업체계 강화 건수 : 5건(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술 지원(전남도청), 스마트팜 관련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세미나발표, 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지원, 사육환경표시제 정책 지원, 농생명 ICT 검인증 센터 구축 자문 등)

3. 성과 및 한계

□ AI 접목 동물행동 및 생체정보 기반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 개발

○ 생체정보기반 동물복지 관리 기술 개발 및 농식품부 브리핑 : 젓소(18)

* 젓소 생체정보 수집장치, 액상사료 자동급이기, 젓소유두 자동인식장치 등

□ 돼지 액상사료 자동급이기 개발 및 현장실증 : 부여 양돈농가 실증

* 2.5톤 용량의 액상사료자동급이기 시작기 제작 및 농가현장 실증

□ 돼지 사육단계별 정밀사양관리를 위한 성장모델 개발 : 1종

□ 협업체계 강화

○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술지원(전남도청)

○ 스마트팜 관련 소비자 공익네트워크 세미나 발표

○ 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지원

○ 사육환경표시제 정책 지원

○ 농생명 ICT 검인증 센터 구축 자문 등

4. 향후 추진계획

-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동물복지형 축사관리 기술 개발('18~19)
 - AI 접목 동물행동 및 생체정보 기반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 개발
 - * 생체정보기반 동물복지 관리 기술 개발 : 돼지('19)
 - ICT 기반 동물복지사육시설 통합관리 및 생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
- 축사 내부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자동화 시스템 개발('20)
 - 원격 환기제어, 액상사료급이기·착유시스템·축산분뇨처리 자동화 등
 - * ('19) 로봇착유시스템 → ('20) 축사분뇨청소로봇
- 생체정보 및 성장모델 기반 미래형 양돈 스마트팜 모델 개발('22)
 - 가축 질병발생 징후 예측기술, 사육단계별 정밀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
 - ICT 기반 동물복지 사육시설 통합관리·생산시스템 개발
 - * ('22) 한국형 스마트축사모델

2-1-4	(축산물) 현장 맞춤형 방제·도축·교육 강화
①	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및 약제 오·남용 방지

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준걸 사무관 T.044-201-2561
과학기술정책과 안형근 연구관, T.044-201-2457

1. 과제내용

-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·전문화를 위해 해충 전문방제업 제도 도입 추진
- 가축에 직접 살포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개발, 진드기 발생 조절용 위생관리기준 등 국내 방제기술 개발 지원
- 산란계 농장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약제 허가 신속 진행
 - 수입품(액졸트) 및 제조품목(와구방액제) 신규허가 절차 진행 중('17.11~)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개정(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제업(가축방역위생관리업) 신설 ○ 닭진드기 공동방제 시범사업 추진 (~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 방제업체를 활용한 청소·세척, 소독, 닭진드기 구제 및 사후 관리 지원(40개소) ○ 닭 진드기 방제 약품 신속 허가 심사 진행('17.11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축전염병예방방법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('18.12.7 국회본회의 의결) ○ 닭진드기 공동방제 시범사업 추진 (~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방제 등 지원(47개소) ○ 닭진드기 방제용 약제 3종 신속 허가심사 완료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닭진드기 방제 관련 연구개발사업 과제 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무형 2종(와구방, 일렉트PSP: '18. 5.10일 허가), 음수용 1종(엑졸트: '18.6.15일 허가)을 신규 사용허가 ○ 피프로닐 설폰 제거기술, 살충제 안전·유효성 평가 등 5개 신규 과제(5.6억원) 선정 및 연구 추진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지원대상농가 수(개소)	40	47

3. 성과 및 한계

□ (방역사업 개편) 기존 방제약품을 단순 지원하던 방식에서('17년 시범사업 3억원)에서 전문업체를 활용한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개편

○ '18년 시범사업(총사업비 7.5억원(40개소), 국비 40% : 지방비 40 : 자부담 20)으로 총 47개 농가 지원 실시하였고 효과 분석 후 지원사업 규모 확대

* 공동방제사업 확대 : ('18) 40호, 3억 → ('19) 100호, 7억

□ 닭 진드기 방제 기술 실용화 연구* 지원

* 피프로닐 대사산물 제거기술 개발,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, 종합방제전략 개발 등 5개 과제 진행(~'20, 13억원)

□ (전문방제업 신설)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·전문화를 위해 해충 전문방제업 제도를 도입

○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신설('17.12.29. 김한정의원 발의, '18.12.7. 국회본회의 의결)

* 신고업종으로 관리하고, 일정규모 이상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 등은 의무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의무화

- 산란계 사용가능한 닭진드기 방제용 약제 신규공급을 통해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
 - 분무형 2종(와구방, 일렉트 PSP : '18.5.10 허가), 음수용 1종(엑졸트 : '18.6.15 허가)을 신규 사용허가하고 안전사용기준 준수 철저 홍보(산란계 농가,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)
-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 현장 문제 해결 지원 추진
 - 닭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친환경 방제제 개발, 안전성 평가, 농가 위생관리기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방제전략 마련 추진

4. 향후 추진계획

-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, 방제기술 연구 및 가축방역위생 관리업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 예정

2-1-4	(축산물) 현장 맞춤형 방제·도축·교육 강화
②	도축장 오염방지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.044-201-2987

1. 과제내용

- 도축전 미생물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('18)하고 소규모 도축장, 문제 업소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위생상태 집중 점검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축장 미생물 오염방지 대책 (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) 수립 ('18.3~6월) ○ 도축장 위생점검('18.3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축장 미생물 오염방지 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('17.12월) ○ 도축장 위생감시 110건 실시 - 위반 14건 확인서 징구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율(%)	0.1	0.1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도축장 미생물 오염방지 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

□ 설·추석 명절, 하절기 등 성수기와, 위생 취약 우려 제기 도축장*에 대한 특별 위생감시를 추진하여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

* '18. 5월 소비자단체에서 닭고기 도축·유통·판매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요청

○ '18년 도축장 위생감시는 총 110건 실시하였으며,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 14건*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및 지자체 통보 조치

* (점검건수/위반건수) 포유류 : 63건/11건, 가금류 : 47건/3건

4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 없음

2-1-4	(축산물) 현장 맞춤형 방제·도축·교육 강화
③	현장 방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준걸 사무관 T.044-201-2561

1. 과제내용

- 닭진드기 관리 우수사례를 포함한 방제 매뉴얼을 제작·보급하고, 가금농가 대상 닭진드기 관리 교육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닭진드기 방제 매뉴얼」 제작·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소·세척 등 환경관리, 동물약품 사용요령 등 진드기 방제 표준지침 * 매뉴얼 제작, 농가 배부 및 관련 단체 홈페이지 게시 ○ 가금농가 대상 진드기 관리 교육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권역별 산란계 농가 순회교육 강화(연 1회 → 연 2회) - 닭진드기 방제 매뉴얼 및 동영상 등 다양한 교재 활용 * 농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제 매뉴얼과 동영상 자료를 집합 교육에 활용하고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닭진드기 방제 매뉴얼」 제작 및 배포('17.12.27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제 매뉴얼을 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('17.12.27) ○ 가금농가 및 진드기 방제업체 대상 진드기 관리 교육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닭진드기 방제업체에 대한 방역 및 방제 관련 교육 실시('18.2.28) - 닭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권역별 교육 2회 실시('18.6월, 9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닭진드기 방제 매뉴얼 제작·보급 및 교육	제작 및 교육	제작 및 교육

3. 성과 및 한계

- 닭진드기 방제 매뉴얼을 생산자단체, 가금농가, 시·도 방역기관 등에 제작·배포하여 위해요인 안전관리에 활용토록 조치('17.12.27)
 - * 양계협회, 육계협회, 토종닭협회, 오리협회, 수의사회, 지자체 및 지자체 등에 2,000부 배포

- 닭진드기 방제 매뉴얼을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토록 조치('17.12.27)

- 가금농가 및 진드기 방제업체 대상 진드기 관리 교육 실시
 - 닭진드기 방제업체에 대한 방역 및 방제 관련 교육 실시(2.28)
 - * 양계협회,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차단방역, 닭진드기 피해사례 및 관리대책, 축사 소독방법 등 교육

 - 닭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권역별 교육 2회 실시('18.6월, 9월)
 - * 상반기 권역별 교육('18.6.1,5,7,8) : 전국 산란계 농가 및 관련종사자 791명
 - * 하반기 권역별 교육('18.9.12,13) : 전국 산란계 농가 및 관련종사자 416명

4. 향후 추진계획

- 닭진드기 방제매뉴얼을 활용하여 가금농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지속 실시

2-1-5	(수산물)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
①	수산동식물 생산해역 환경 개선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류성봉 사무관 T.044-200-5618

1. 과제내용

- 수산물(패류)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
 - 일반해역(64개) 위생조사 항목을 지정해역(7개) 수준으로 관리 강화
 - * 일반해역은 16개 항목, 지정해역은 56개 항목 조사
 - ** 연도별 확대 : ('17) 16 → ('18) 18 → ('19) 64 → ('20) 64 → ('21) 81개 항목
 - 수산물(패류) 생산해역의 육·해상 오염원 조사 실시
 - * 패류 생산 64개 해역에 대해 3년에 걸쳐 조사('18 : 21, '19 : 24, '20 : 19개 해역)
- 생산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
 -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36개소 '22년까지 추가 확충
 - * 현재 패류 생산해역 주변 67개소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	○ 패류 생산해역(64개소)에 대한 위생조사(18개 항목) 실시
○ 패류 생산해역 육·해상 오염원 조사 실시	○ 위생조사 항목 추가(18종)를 위한 '19년도 예산 확보 * 병원성세균 2, 항생물질 2, 농약 14종
○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추진	○ 패류 생산해역 21개소에 대한 육·해상 오염원 조사 실시
	○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추진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(%)	104	132

* 측정산식 : [당해 연도 위생조사 건수/최근 3년간 평균 위생조사 건수]×100

3. 성과 및 한계

□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

- 일반해역(56개)에 대해서도 지정해역 수준의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 조사 항목 추가를 위한 예산 확보
 - '18년도 위생조사 항목 2종(일반세균 및 MSC) 추가 조사 실시
 - '19년 위생조사 항목 18종* 추가를 위한 예산(532백만원) 확보
- * 병원성세균 2종, 항생물질 2종, 농약 14종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지속 확보 추진

- 다환방향족탄화수소(PAHs, 4종) 및 다이옥신(17종) 조사를 위한 예산 (436백만원) 확보 추진

2-1-5	(수산물)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
②	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

환경부 생활하수과 성남준 사무관, T.044-201-7153

1. 과제내용

- 생산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
 -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36개소 '21년까지 추가 확충
 - * 현재 패류 생산해역 주변 67개소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패류 생산지역 인근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 - '18년 65억원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패류 생산지역 인근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 - '18년 77억원 지원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착수(개소)	15	16

3. 성과 및 한계

- 생산해역 주변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, 자외선 소독기 등을 활용한 방류수 관리 강화

4. 향후 추진계획

- 패류 생산해역 인근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
 - '22년까지 103개소 소규모하수처리장확충을 위한 예산 지속 투자

관련 사업	재원	'19년	'20년	'21년	'22년
소규모하수처리시설 확충	보조	95	331	318	230
합계		95	331	318	230

2-1-6	(수산물)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
①	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
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배준오 사무관 T.044-200-5633

1. 과제내용

- 무항생제·무병의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첨단·친환경 양식시스템 민간 보급 지원 및 배합사료 활성화
 - 바이오플락(미생물 정화) 및 순환여과, 용수정화(오존, 전기분해) 시설 등 양식수 정화·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
 - 질병에 강한 종자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수산종자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따른 종자생산업계 집중 육성
 - 고품질·저비용* 배합사료 지속 개발 및 배합사료 시범사업 확대
 - * 배합사료의 어분 사용률 저감을 위한 저어분 배합사료 개발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친환경 양식기술·시스템을 민간에 보급하기 위한 공모사업 추진	○ 5개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친환경 양식기술·시스템 민간 보급 추진 (96.8억원/19건)
○ 골든시드프로젝트(GSP) 추진 및 수산종자산업육성 방안 마련	○ 골든시드프로젝트(GSP) 추진(67.5억원/ 품종(브랜드) 출원 15건) 및 수산 종자산업육성 방안 마련('18.12)
○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시범사업 확대 추진	○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사용률 확대('17, 24.2% → '18, 24.5%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친환경 양식장 구축(개소)	15	19
○ 배합사료 사용률(%)	25	25
○ 신제품 종자 개발(개)	5	15

3. 성과 및 한계

□ 친환경 양식장 구축, 신제품 종자보급 개발 목표 초과 달성 및 지원사업 감액 등으로 배합사료 사용률 목표 달성

- 친환경 양식장 구축을 위해 양식수 정화·관리시스템 설치 지원
 - * 바이오플락 5개소, 순환여과 4개소, 용수정화 2개소, 신제품 및 스마트 양식 8개소
- 질병 및 고수온 등 환경내성에 강하고 성장이 빠른 신제품 종자 (브랜드) 개발(넙치 2품종, 바리과 11품종, 김 2품종)
-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사용률 확대
 - * 배합사료 사용률(%) : ('11) 19.8% → ('13) 20.1 → ('15) 23.1 → ('17) 24.2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수처리시설 확대 및 종자개발 등을 지속추진하고, 배합사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용률 향상 추진

- 양식수 정화·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및 종자생산업계 육성정책과 신제품 종자 개발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
-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변경(국비 30 → 20%) 하여 지원 대상 확대 추진

2-1-6	(수산물)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
②	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.044-200-5622

1. 과제내용

-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·공급
 - 생산·저장·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통한 불량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
 - 수산식품 안전관리 여건 등 환경변화에 효율적·적극적인 대응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 수립(1월)	○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 수립(1.12일)
○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(5월)	○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(5.15일)
○ 지자체 안전성조사 기관 분석장비 구축 추진상황 실태점검(7월)	○ 지자체 안전성조사 기관 분석장비 구축 추진상황 실태점검 * 경기(7.31), 충남(8.1), 전북(8.7), 인천(8.8), 충북(8.10), 제주(8.13), 부산(8.22), 경남(8.23) 경북(8.29), 전남(8.31)
○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업무 협의회(12월)	○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업무 협의회(11.20일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산물 안전기준 적합률(%)	98.50 이상	99.6

3. 성과 및 한계

-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지속 강화 및 지자체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 분석 장비 확대(6개소, 60억) 추진
 - 다소비·부적합 이력 품종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불량 수산물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
- 분석 장비구축으로 지자체의 분석 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, 지자체의 안전성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여 인원 확보 추가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19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('19년 1월)
 - 다소비·부적합 이력 품종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조사 지속 실시(연중)

2-1-7	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
①	우수관리농산물(GAP) 생산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김남진 농업사무관 T.044-201-2278

1. 과제내용

-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인 GAP* 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확대

* 농산물 생산·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의 위해요소를 적정 관리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양·용수 안전성분석 대상지 중심 교육·컨설팅 집중 지원 ○ GAP 시설기준에 적합한 위생 시설, 농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비용 지원을 통해 위생적인 처리시설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AP 교육·컨설팅 강화로 인증 확대 유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인증 컨설팅 5,429호, 생산자 교육 54,122명 * GAP 인증농가 : ('16) 75천호(6.9%) → ('18) 87(8.3) ○ 토양·용수 분석과 위생시설 보완 사업 지원으로 GAP 인증건수 및 생산계획량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인증건수/생산계획량 : ('06)220건/101천톤 → ('15)4,019/1,068천 → ('18)7,782/2,402천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GAP 인증 농가 비율(% , 전체 농가 대비)	9.1	8.3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GAP 제도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GAP 인증건수, 생산계획량 등이 꾸준히 증가하여 對 국민 안전 농산물 공급에 기여

* '18년 기준 GAP 인증건수는 7,782건('06년 220건, '17년 6,909건), 생산 계획량 2,402천톤('06년 101, '17년 2,036)으로 도입초기 대비 대폭 증가

□ (한계) 유통시장에서 GAP 농산물 판로 확보 문제, 일반 농산물과 가격 차별성 미흡 등으로 인증 증가속도 정체 추세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주산지 안전성 분석사업과(농식품부)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(농관원) 통합운영으로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적 운용 추진

* ('18) 농식품부(5,513백만원)·농관원(2,857백만원) → ('19) 농식품부 5,757백만원

○ 수확 후 관리시설의 개·보수 지원은 수요를 바탕으로 확대('20~)하여 GAP 농산물 위생관리 강화('19년 예산 10.5억)

농촌진흥청

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경열 농업연구관 T.063-238-3391

1. 과제내용

□ 식중독균, 곰팡이독소 등 유해생물 오염으로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GAP 실천기술 개발 및 대내외 협력강화

* 현장요구 GAP 실천기술 개발 및 조화로운 GAP 농산물 생산·소비체계 구축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AP 실천을 위한 현장 맞춤형 장비 개발 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장균 검출기 국제특허 출원 및 보급확산 ○ 농업인용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단계 「위생관리지침」 개발 ○ 농산물 위생 관련 정책·기술·현장 담당자간 정보교류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GAP현장 워크숍, 농산물안전위생 연구회 창립, 유통·소비단체와 농립농업과학원 간 MOU 체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AP 실천을 위한 현장 맞춤형 장비 개발 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허출원 3건 및 농업현장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미생물 검출장치 : ① 실시간 자동 유해 미생물검출장치(10-2018-0127206), ② 고감도 유해미생물 검출장치(PCT/KR2018/006154) * 버섯용 권지 세척장치(특허출원 10-2018-0092518) : 수출용 팡이버섯 업체에 현장실증 운용 중 ○ 위생관리지침 및 유해미생물 분석 매뉴얼 발간 보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산물의 위생관리지침 2종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GAP 배추 생산기술 1000부, 어린잎채소 위생관리 요령(PDF) - 농산물·농업환경의 미생물 및 곰팡이독소 분석 매뉴얼 4종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농업용수 미생물 분석 매뉴얼, 신선편이 농산물의 대장균 및 바실러스 세레우스 신속검출 매뉴얼, 신선편이 농산물의 장출혈성대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 신속검출 안내서, 맥류 붉은곰팡이병 및 곰팡이독소 관리 매뉴얼 ○ GAP·농산물 위생안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GAP활성화 현장 워크숍 2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GAP농산물 소비창출 현장 워크숍(1.31~2.1), 박과채소류 GAP 활성화 현장 워크숍(8.16~17) - 농산물안전위생연구회 창립 및 학술 심포지엄 2회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창립총회(5.24, 200여명 참석), 농산물 안전위생연구회 창립 심포지엄(5.24),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연계 농산물 안전위생 심포지엄(10.12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p>○ GAP 농산물 생산·소비 현장에 대한 컨설팅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립농업과학원과 유통-소비처간 MOU 및 후속사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MOU체결 : 농진청-금산 만인산농협 (1.25), 농진청-경남교육청(4.26) * 후속사업 : 만인산농협 공선출하회 초청 간담회(8.28), 경남교육청 영양(교)사 급식유통센터 방문(8.24) - 농산물 위생 안전성 향상을 위한 행사개최 및 관련 기관간 협업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농과원·식약처 평가원 유해미생물 안전 관리 심포지엄(6.29) * 팽이버섯 식중독세균 정밀진단 워크숍 (1.22~23) ○ GAP 농산물 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강화 및 현장 컨설팅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진청 구내식당에 인증농산물 공급방안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혁신도시 인근 4개 농협 및 도청과 업무 협의(4회). 농과원 구내식당부터 시범공급 추진('19.1~) - GAP 농산물 소비 촉진 토론회 및 컨퍼런스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GAP농산물 학교급식 연계 토론회(2.1) * 농업기술박람회 부대행사로 GAP 생산자-소비자 현장소통 컨퍼런스 개최(7.20, 창원) - 농산물안전 및 GAP 활성화를 위한 농업현장 컨설팅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어린잎채소 위생관리기술 현장지원 : 3회 * GAP생산 박과채소류 생산현장 기술지원 4회 * GAP농가 생산현장 위생관리기술 지원 4회 * 팽이버섯 미생물 오염 안전관리 및 고깔 세척장치 현장실증 지원 : 3회 * 잡곡재배농가 곰팡이독소 관리기술 지원 8회 * 쌀국수 생산업체 및 부추 생산농가 미생물 오염 관리 현장기술 지원 2회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생관리지침 개발 보급(건, 누적)	9	10
○ 농산물안전 및 GAP 현장 컨설팅(건, 누적)	10	24

- * 위생관리지침 개발보급 : 농산물의 위생관리지침 2종(2017년까지 누적 : 8종, GAP 배추 생산기술 1000부, 어린잎채소 위생관리 요령(PDF) 개발·보급 완료
- * 미생물 분석진단 매뉴얼 4건 추가 개발 보급 : ①농업용수 미생물 분석 매뉴얼, ② 신선편이 농산물의 대장균 및 바실러스 세레우스 신속검출 매뉴얼, ③신선편이 농산물의 장출혈성대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 신속검출 안내서, ④맥류 붉은곰팡이병 및 곰팡이독소 관리 매뉴얼
- * 농산물안전 및 GAP 생산현장 실천기술지도 등 현장기술지원 및 컨설팅 : 24회 (GAP 생산현장, 어린잎채소 재배농가, 팡이버섯 재배현장, 잡곡 재배현장, 농산물 가공현장 등)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농산물 수출지원 및 위생안전성 증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장비 개발 및 현장실증 추진

○ 팡이버섯용 고깔 세척장치 개발 및 현장 실증 추진

- * 특허출원(10-2018-0092518) 완료 및 수출농가에 설치하여 세척효과 실증 중
- ☞ 2019년 상반기에 현장연사회 및 기술이전 추진 예정

○ 농산물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 검출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

- * 특허출원(PTC포함) 완료 : 실시간 자동 유해미생물 검출장치(10-2018-0127206), 고감도 유해미생물 검출장치(PCT/KR2018/006154)
- * 전국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계획 : ('19) 70 → ('20) 140 → ('21) 210 개소
- ☞ 2018 과학기술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100대 우수성과에 선정

□ (성과) 위생관리지침 및 유해미생물 분석 매뉴얼 발간 보급

- 위생관리지침 2종 ① GAP 배추 생산기술 1000부, ② 어린잎채소 위생관리 요령(PDF)

○ 농산물·농업환경의 미생물 및 곰팡이독소 분석 매뉴얼 4종

- * ①농업용수 미생물 분석 매뉴얼, ②신선편이 농산물의 대장균 및 바실러스 세레우스 신속 검출 매뉴얼, ③신선편이 농산물의 장출혈성대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 신속 검출 안내서, ④맥류 붉은곰팡이병 및 곰팡이독소 관리 매뉴얼

☞ 위생관리지침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 보급하고, 분석법은 유관기관에 표준분석법으로 정책건의 함

□ (성과) GAP 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유통·소비 단체와 MOU 체결 및 농진청 구내식당에 인증농산물 공급 추진

○ MOU 체결 : 금산 만인산농협(1.25), 경남교육청(4.26)

- * 농업인 간담회 및 교육실시 2회, 학교 영양(교)사 급식업체 현장 및 농진청 방문 지원

○ 농진청 구내식당 인증농산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의 및 사업추진

- * 전북도청 및 혁신도시 인근 4개 농협과 업무 협의(4회) 완료 및 농과원 구내식당 부터 시범공급 추진('19.1~)

☞ GAP농산물 생산-소비 확대로 안전먹거리 공급 확대 기여

□ (한계) 팽이버섯용 고깔 세척장치 기술이전 및 현장보급 확산 미흡

○ 팽이버섯 대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깔이 식중독균에 오염되면 버섯까지 오염시켜 수출시 현지검역에서 리콜 발생

○ 식중독균에 오염된 고깔을 살균·세척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고 버섯수출업체 현장에서 실증을 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고깔 찌꺼기의 효과 저하 우려로 세척장치 활용이 미흡함

- * 고깔을 구연산 3%에 3~5분간 담갔다가 물로 세척하면 식중독균 살균효과 100% 및 인력절감 효과 우수(손세척 대비 1/6)

□ (한계) 수입 상토원료 전반에 대한 유해미생물 오염조사 미흡

○ 시중 유통 중 식중독균이 검출된 일부 어린잎채소에서 오염경로 조사 결과, 수입 상토원료 및 시판상토가 원인으로 밝혀짐

- 상토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의 명단 정보를 국립식물검역본부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명단 제공 곤란 통보
⇒ 상토원료 수출 국가별·수입 업체별로 원료 확보가 곤란하여 극히 일부 상토에 대해서만 미생물 검사를 수행하여 전반적인 미생물 오염 조사 미흡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성과 및 한계에서 제시된 한계의 보완방안

- 팡이버섯용 고깔 세척장치 기술이전 및 현장연시회로 보급 확산
 - 팡이버섯 고깔세척장치에 대한 버섯생산업체의 관심이 많음
 - 고깔 부착 찌찌이에 대한 구연산의 효과를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버섯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연시회를 실시하여 고깔 세척기의 성능 및 세척효과에 대한 홍보강화 및 공감대 형성
 - 고깔세척장치 기술이전 추진, 농진청 신기술시범사업(2020년)에 반영 등 세척장치의 보급 확산 노력 강화
- 수입 상토원료 전반에 대한 정보파악 및 위생안전성 조사 강화
 - 상토·위생 관련 전문가의 수출국 현지조사를 통한 상토원료 생산 및 위생관리에 대한 현지 정보파악('19년 현안대응 공무국외출장 반영)
 - 한국상토협회를 통한 소속 회원사와 주요 상토제조회사를 통한 상토원료 수입업체 현황파악 및 수입상토 식중독균 오염조사

2-1-7	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
②	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최병인 사무관, T.044-201-2443

1. 과제내용

친환경농업 지구의 조성·확충을 통해 생산기반 집단화·규모화

*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(누적) : ('17) 16개소 → ('20) 64 → ('22) 100

친환경 저투입 농법의 개발·보급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지속 실천 유도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농업지구 조성·확충(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친환경농업지구 신규 11개소, 보완 1개소 선정·지원 ○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(9월) 및 연구센터 1개소 건립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농업지구 조성·확충(15개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친환경농업지구 신규 14개소, 보완 1개소 선정·지원 ○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('18.10.29) 및 충남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개소('18.6월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친환경농업 지구수(개소, 누적)	28	31

3. 성과 및 한계

- 친환경농업지구 조성·확충으로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
 -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, 친환경농업지구·단지 내 친환경 인증면적 지속적으로 확대
 - * 지구·단지 친환경농업 이행률 : ('15) 29.9% → ('16) 32.0 → ('17) 32.8 → ('18) 33.3
-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의 친환경농업 확산
 -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·보급 등 연구센터
- 소규모·산재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으로,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의도적* 농약 혼입으로 인한 일부 피해 발생
 - * 항공(드론), 광역방제로 인한 비산 피해, 농업용수(하천수)로 인한 오염

4. 향후 추진계획

- 보완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
 - 기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·단지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구·단지에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보완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성과 제고
 - 지구·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이행률 제고
- 마을·들녘 단위 집적화가 가능한 지구 중심으로 생산기반 조성
 - 소규모·산재된 생산기반을 마을 중심형으로 집단화

2-1-7	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
③	HACCP 축산물 적용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.044-201-2987

1. 과제내용

- HACCP 농장표시제 도입('19), HACCP 인증 희망 축산농가 대상 컨설팅 실시, 인증 사후관리 미흡 농가 대상 기술지원
- * '22년까지 전업농 또는 생산물량 대비 50%까지 인증 확대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축산농가 농장표시제 도입 추진 (3~12월)	○ 관련 고시 개정(안) 마련 및 건의 ('18.2월, 12월)
○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사업, 인증 사업(3~12월)	○ HACCP 컨설팅 330개소 및 현장 기술지도 381개소 지원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HACCP 인증농가(개소)	7,500	7,642

3. 성과 및 한계

- HACCP 농장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(안) 마련하여 개정 추진('18.2월~, 식약처 협업)
- * (현재) HACCP 인증을 받은 도축·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인증마크 표시
→ (개정)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인증마크에 해당 도축·가공장, 농장명 표시

<도축·가공장 인증마크 표시>



<도축·가공장, 농장 HACCP 인증마크 표시(안)>



□ HACCP 인증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·작업장에 맞춤형 HACCP 전문 컨설팅 제공(330개소) 및 HACCP 운용이 미흡한 농장에 대한 현장기술지도 지원(381개소) 추진('18.3월~12월)

○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축산농장 HACCP 인증률 증가

* 인증률 현황 : ('16) 38% → ('17) 39% → ('18) 40% [인증대상농가(전업농) 19,080호]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HACCP 농장표시제 도입 및 축산농가에 전문 컨설팅 제공 및 현장 기술지도 확대 추진

○ 농장표시제 도입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(식약처와 협의)

2-1-7	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
④	HACCP 수산물 적용 확대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.044-200-5622

1. 과제내용

- 육상양식장의 잠재적 위해요소에 대해 사전 예방·관리 지속 강화
 - 항생제·용수 등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·관리하도록 위생·안전 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HACCP 등록 양식장 지속 확대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'18년도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	○ '18년도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(3.15일)
○ 사업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·실태 조사 실시('18.3월~)	○ 사업대상자 선정(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) 및 컨설팅·실태조사 실시('18.3~12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양식장 HACCP 등록(개소)	170	187

3. 성과 및 한계

- 101개소 양식장 HACCP 컨설팅 진행 후 36개소 HACCP 등록 완료
 - 인식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·워크숍 개최 및 HACCP 등록 수산물 시식회 개최 등 홍보 지원

- 등록 양식장에 대한 차별화 미정착 단계로 자발적 참여 유인책 한계 및 출하수산물에 대해 가격 우대 등 시장 경쟁력 부족

4. 향후 추진계획

-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('19.6월)
 - 수산물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('18.11월~'19.5월)

2-2 가공식품 제조 관리

2-2-①	일반식품
①	HACCP 적용 식품 지속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강승극 사무관, T.043-719-2854
 농축수산물정책과 설찬구 사무관, T.043-719-3204

1. 과제내용

- 식품안전관리인증(HACCP) 적용 지속 확대
 - 간편식(즉석섭취식품)·어린이기호식품*(20), 식육가공업(24) 및 식용란 선별포장업(18)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추진
 - * 과자·캔디류, 빵류·떡류, 초콜릿류, 어육소시지, 음료류, 즉석섭취식품, 유탕면류·국수, 특수용도식품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HACCP인증 지속 확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기호식품 등 3단계(984개소), 식육가공업 1단계(114개소) 추진(연중) -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의무화에 따른 평가표 마련(4월) - 산란계 농장 및 종축장 HACCP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(국회제출, 10월) ○ 소규모 영세업체 HACCP 인증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질 없는 HACCP인증 확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 984개소 및 축산물 114개소 HACCP인증 완료(9,163개소, 누계) * 목표대비 102.3%(목표 8,957개소) -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평가표 마련(고시개정, 4월) -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개정 추진 (개정안 복지위 상정, 8월) ○ 소규모 영세업체 517개소 재정 (시설개선자금, 컨설팅비) 지원 및 4,801개소 기술지원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HACCP제품 생산비율(%)	85.1	85.2*

* 성과지표 측정 : '16년 전체 제조업체 생산량 31,039천톤(식품 24,508, 축산물 6,531) 대비 HACCP인증 제조업체 생산량 26,458천톤 비율(%)

3. 성과 및 한계

□ 그간 사전안전관리시스템의 양적 확대에 집중,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

○ HACCP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대형 식중독 사고 시 HACCP 제품이 원인식품으로 확인되는 사례 증가

* ('18) 부산 등 12개 지역 학교 2,207명[원인 : 초코케익(살모넬라, 난백액)]

4. 향후 추진계획

○ HACCP 사후관리 대상을 연초에 일괄 공개하고 전면 불시평가 실시, 즉시평가* 및 즉시인증취소** 확대 추진('19.1~)

* (즉시평가 확대) 식중독 사고 시 → 식품안전기준 위반 시까지 확대

** (즉시인증취소 확대) 주요안전조항 위반 → HACCP 필수항목(CCP결정, 한계기준설정, 모니터링, 개선조치 등) 위반 시까지 확대

○ 소규모 및 축산물 의무작업장 HACCP 기준서 재검토 및 현장 기술지원 실시('19.1~, 300개소)

○ HACCP 인증 시 축산물 작업장별 HACCP 기준을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한 후 인증하는 사전 인증제 도입 추진('19.6~)

○ HACCP 기준 이행점검 기록을 상시 자동입력·관리하고 기록의 위·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('19.10~, 200개소 시범사업)

2-2-①	일반식품
②	단순처리 농·수산물 안전 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신향숙·김성희 사무관 T.043-719-3253·3241

1. 과제내용

단순처리 농·수산물 안전관리 강화

- 제조·가공 등 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단순처리 농·수산물 자율위생관리 강화

2. 추진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순처리 농·수산물 생산업체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(2, 11월) ○ 생산자 자율안전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등 지원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메기, 마른김, 절임배추 등 생산업체 위생점검 873개소(부적합 11) 및 수거·검사 422건(부적합 16건) ○ 생산자단체(농·수협) 실무협의회 개최(4회 / 1, 4, 9, 11월) ○ 생산자단체 자율 규제검사(4,964건) ○ '알기 쉬운 농축수산물 생산자 위생 관리 표준서' 배포(4월, 2천부) ○ 농·수협, 4H 등과 협업,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(5~12월) <p>* (농산물) 4,483명 (수산물) 3,192명</p>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생산자단체 자율검사 협의회(회)	4	4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위생교육 및 홍보를 통해 생산자 자율위생관리 능력 제고
- (한계)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제도권 내 관리를 위한 부처합의 필요
 - 생산관련 부처(농식품부, 해수부)에서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의견

4. 향후 추진계획

- 지자체와 협업하여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 등록(신고) 유도
- 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민간 자율규제검사 강화 및 분석교육 지원
-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·홍보(지속)

2-2-②	건강기능식품
①	제조기준 강화(GMP 적용 의무화)

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한규홍 연구관 T.043-719-2456

1. 과제내용

-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의 단계적 적용 의무화 통한 건강기능식품 품질 및 안전성 강화

* 의무화 대상('17년 기준 연매출액): '18년(20억이상) 92개소 → '19년(10억~20억) 42개소 → '20년(10억미만) 303개소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MP 적용 준비업체 대상 전문 컨설팅 실시(4~11월) ○ GMP 미적용 업체 대상 지도·홍보활동 지속 전개(3월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컨설팅 수행업체 20개소 선정(2월) 및 컨설팅 수행·평가(4~11월) ○ '18.12월 GMP 의무적용업체 개별 홍보*(3~12월) 및 미적용 업체에 대한 정기적 현장지도 등 집중 관리(3~11월, 183개소) <p>* GMP 의무적용대상 알림 공문발송(3월) 및 품질관리인 대상 GMP 운영 전체 교육 실시(8월)</p>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GMP 의무화 적용비율(%)	65	65

3. 성과 및 한계

- '18년 GMP 의무적용 대상 6개소 대비 6개소 적용으로 100% 달성
 - 의무대상 업소 92개소* 중 GMP 미적용 업소(6개소)에 대한 집중 컨설팅 및 관리로 92개소 모두 GMP 적용
 - * '17년 기준 연매출액 20억 이상 대상
 - 아울러 '18년 신규(21개소) 및 지정(16개소) 등 총 37개소가 GMP를 새롭게 지정받음으로써 GMP의 단계적 의무화 달성
- '19년~'20년 중소규모의 제조업소(345개소*)의 의무적용에 애로
 - GMP 적용에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·설비, 품질관리가 필요하여 중소규모 업소가 GMP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
 - * '17년 기준 연매출액 10~20억('19년 42개소), 20억 미만('20년 303개소)

4. 향후 추진계획

- '19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 맞춤형 컨설팅('19.3~11)
 - * 중소규모 건강기능식품업소 20개소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진행
- 소규모 GMP 미적용 업소 대상 시설개선자금 확보 추진('19.5)
 - * 10억 미만 영세업소(140개소)에 대한 시설개설자금 1,600백만원 확보
- GMP 평가매뉴얼 및 관리표준매뉴얼 제작 추진('19)

2-2-②	건강기능식품
②	기능성 검증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정형욱 연구관, T.043-719-2441
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 권용관 연구관, T.043-719-4421

1. 과제내용

-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검증 강화
 - 기능성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기능성 원료 재평가
 -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(주기적 재평가) 사회적 논란이 있는 (상시적 재평가) 기능성 원료에 대해 재평가 실시
 - * 주기적 재평가 : ('18) 19종 ('19) 8종 ('20) 54종
 - 상시적 재평가 : 매년 대상 사전검토 후 확정('18년 7종)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 수립 (2월)	○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 알립 (2월, 주기적·상시적 재평가 26종)
○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공고 (2월)	○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기능성 원료 공고(2월, 글루코사민 등 7종)
○ 기능성 자료 요건에 인체적용시험 계획(보고)서를 제출토록 규정 개정	○ 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」 개정(10월)
○ 주기적·상시적 재평가 결과 공시 (12월)	○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공시(12월)
	* 재평가 실시 16종, 재평가 보류 10종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재평가 원료(건)	26	26

3. 성과 및 한계

□ 2018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6종 재평가 실시

- 기능성 원료 16종*은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인정내역을 변경하고, 생산실적 등이 없는 기능성 원료 10종**은 재평가 보류

* 글루코사민, 비타민D, 쏘팔메토열매추출물, 프락토올리고당, EPA 및 DHA 함유유지, 정어리펩타이드SP100N,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, 폴리코사놀-사탕수수왁스알코올, 헤모힘당귀등혼합추출물, 자일리톨,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, 피크노제놀-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, 황금등복합물, 올리브잎주정추출물EFLA943, 백수오등복합추출물,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

** INM176(참당귀주정추출분말), 피브로인추출물BF-7, 끼꼬망포도종자추출물, 이소말토올리고당(3), 대두올리고당, 식물스타놀에스테르, 가쯔오부시올리고펩타이드, 카제인가수분해물

□ 건강기능식품 인정 심사 기준 개정

- 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·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」 제출 자료 요건 중 기능성 내용에 관한 자료 개정

* 식약처 고시 제2018-73호(2018.10.12.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'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후속조치('19.1~)

- 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변경
- 해당 영업자에게 재평가 보류 상황 통보 및 공문 발송

2-2-2	건강기능식품
③	이상사례 체계적 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한규홍 연구관 T.043-719-2456

1. 과제내용

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명령제 도입

- 건강기능식품 중 이상사례 등 위해정보가 확인되어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* 섭취 시 주의사항을 즉시 변경

* 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정보전달의 필요성 여부 확인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위해우려 시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명령제 도입(9월)	○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개정(6월)
○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·분석(연중)	○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·분석 실시 * 신고접수된 폴리코사놀 제품 등 964건 조사, 입원 치료 등 중증 이상사례가 발생한 홍삼제품 등 7건 분석
○ 외부전문가 자문 확대(1월~)	○ 이상사례 증상별 외부전문가의 자문 확대(1월~)
○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(6, 12월)	○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(5, 12월) * 중증 이상사례 인과관계가 밝혀진 가르 시니아캄보지아 및 녹차 추출물 제품 등 3건 정보 공개 및 경고장 발송 조치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기간 단축(개월)	1	1

3. 성과 및 한계

- 이상사례 등 위해정보가 확인된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건강 보호
- 이상사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통보 가능

4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 없음

2-2-3	주류(술)
①	주류업체 등급별 차등 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정책과 조강신 사무관, T.043-719-6052

1. 과제내용

- 주류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에 따른 차등 관리 강화
 - 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을 통해 자율·일반·중점등급으로 나누어 정기평가 실시
 -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기술지원
 - 설·추석 명절 대비 선물용·제수용 주류업체 점검 및 계절별 다소비 주류 제조업체 점검
 - 다소비 품목인 맥주의 자율 이취관리제 운영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을 위한 주류 제조업체 정기평가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생등급*에 따른 차등관리 및 위생미흡 업체 현장 기술지원(연중) * 위생수준에 따라 3개 등급(자율, 일반, 중점)으로 분류 ○ 위반율이 높거나, 사고 파급력이 큰 주류를 중심으로 제조업체 집중 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명절 및 계절을 고려한 다소비 주류, 소규모 주류업체 등 기획점검 ○ 맥주 제조업체 자율이취 관리제 운영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산화취, 일광취 등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을 위한 주류 제조업체 정기평가 실시(2~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체 주류업체(1,148개소) 대상 차등관리(자율점검, 공무원점검)로 주류 위생관리 준수율* (%) 향상 * ('17년) 90.0% → ('18년) 91.1% ○ 시기별·계절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주류 제조업체 기획점검 실시 (395개소 점검, 23개소 부적합) ○ 맥주 자율 이취관리제를 소규모 맥주업체로 확대하여 운영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율 이취관리제 운영 : ('17년) 8개소 → ('18년) 51개소 확대 운영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 준수율(%)	90.5	91.1

3. 성과 및 한계

- 위생수준의 편차가 큰 주류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류업체의 위생수준 향상
 -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고령화, 판매부진 등으로 위생관리 의식이 부족하고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음
- 주류 제조·소비시기와 소비 트렌트를 반영한 기획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 제조기반 마련
 - 수제주류(탁주, 맥주 등) 수요 증가에 따른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증가로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

4. 향후 추진계획

-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 참여, 신규업체 특별 교육 등을 통한 영세업체, 신규 소규모(수제) 제조업체 안전관리 강화

2-2-③	주류(술)
②	주류업체 수질 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정책과 조강신 사무관, T.043-719-6052

1. 과제내용

- 지하수 사용 주류업체 사전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 강화
 - 지하수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주변 가축매몰지 현황, 정수처리 시설 및 수질검사 현황 등 조사
 - 영업자가 검사주기에 맞추어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및 지하수 관리 매뉴얼 제작·배포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수 사용업체 실태조사(3월) 후 수질검사 알림서비스 제공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질검사 주기(반기별 1회 이상)에 따라 수질검사일 등 안전정보 제공 ○ 수질검사 부적합업체 점검(3월), 지하수 부적합 시 긴급조치(연중) ○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수질 관리 매뉴얼 제작·배포(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체 주류업체 중 지하수 사용 업체 실태 조사 실시 및 수질 검사 알림 서비스 제공(6월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질검사 사전 알림 문자(우편) 발송(238개소, 327회 발송) ○ 주류업체 지하수 안전관리를 위한 기획·점검 실시(3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7개소 점검, 1개소 부적합(수질검사 미실시) ○ 주류제조업 영업자를 위한 수질 관리 매뉴얼 제작·배포(5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하수 사용 관련 규정, 지하수 급수 시설 위생관리, 정수처리 방법 등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지하수 수질안전관리 정보 제공 건수(건)	322	327

3. 성과 및 한계

□ 지하수 사용 주류업체 안전관리 강화

- 지하수 사용 주류업체 수질관리 정보 제공 및 위반업체 점검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행정처분 감소('17년 13건 → '18년 5건)

□ 영업자가 부적합 지하수로 주류제조를 하지 않도록 지하수 오염 예측 정보 제공을 통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부적합 지하수 사용 예방을 위하여 주류제조업체 수질관리 정보 제공 강화

- 지하수 수질검사 정보를 활용하여 부적합 발생 시 인근 지역 주류 업체에 지하수 오염 주의 알림
-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수질관리 매뉴얼에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정보 보완 등 개정·배포

2-2-3	주류(술)
③	소규모업체 안전·품질 관리 지원

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정책과 김승환 연구관, T.043-719-6053

1. 과제내용

-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지원 강화
- 주류제조업체의 안전·품질관리 능력향상과 위법행위 사전예방 활동 등을 수행할 자율 '주류안전관리인' 도입 확대
- 수제맥주의 수요 증가, 다양한 제품 생산에 따른 고품질의 안전한 제조환경 구축으로 소상공인 지원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지정·운영(4~11월) * 위해예방관리계획 보급, 제조안전관리 및 애로사항 컨설팅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규모 주류업체 지원을 위해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선정·운영(수도권, 중부권, 호남권, 영남권 등 4개 센터) * 운영실적 : 242개업체 대상 위해예방 관리계획 보급 및 399회 컨설팅 실시 - 위생안전교육 및 분석실습(82개소, 94명), 우수제조업체 견학(74개소, 81명), 수제맥주 주입용기(KEG) 세척 유효성 모니터링(10개소) 실시 -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 참여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(4회) * '19년 주류안전관리 업무계획에 반영 ○ 소규모 HACCP 기술지원 연계 * HACCP 인증완료(1개소) 및 컨설팅 진행 중(19개소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실주, 증류주, 수제맥주 등 60개소 신규 선발 * 기존 주류안전관리인 대상 보수교육실시 ○ 수제맥주 기술지원 협의체 운영 (연중) ○ 수제맥주 기술지원 및 컨설팅 운영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율 주류안전관리로 위법행위 사전 예방 등을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류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과실주, 증류주, 수제맥주 제조업체 신규선발 * 주류안전관리인 : (17년) 총 125개소 → (18년) 총 187개소 - 주류안전관리인 대상으로 교육 실시(6, 12월) * 18년 신규교육 69개소, 보수교육 125개소 ○ 품질·안전향상 기술지원을 위한 관련 업체 및 협회 간담회 개최(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수제맥주 공급장치 세척·소독 매뉴얼' 작성 보급(5월) * 수제맥주의 위생적 제조 및 유통관리를 위한 KEG 및 공급장치 위생관리 ○ 수제맥주의 안전한 제조환경 구축 지원으로 산업 성장기반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제맥주 기술지원협의체(2월) 및 세미나 개최(4, 9월) * 총 69개소 81명 세미나 참석 -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컨설팅 (6, 10월) * 업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KEG 세척 유효성 모니터링 지원' 실시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주류안전관리인 도입 업체수(개소)	180	187

3. 성과 및 한계

□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

-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및 우수업체 견학 등 기술지원 참여업체의 만족도 조사*결과, 매우만족 비율 85%(보통 이상 99%)

* 5점 척도 : 1점(매우 불만족), 2점(불만족), 3점(보통), 4점(만족), 5점(매우 만족)

- 식품안전인식도(10점 만점)는 지원 전 6.5점에서 지원 후 8.8점으로 향상

- 주류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탁주업체의 영세성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술지원 참여업체 모집에 어려움 발생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 강화

- 신규 및 영세업체, 행정처분 업체에 대하여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지원 및 관리

- 안전(위생) 체크리스트 제작·보급 및 현장 애로사항 모음집 발간 등

2-3	인증제도 개선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2-3-1	친환경인증 기준 강화
①	심사기준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진수 사무관 T.044-201-2432

1. 과제내용

- 친환경 농축산물 안전성 심사기준 강화('18.6)
 - 친환경 인증이 안전을 우선 확보하도록 위생·안전관리기준* 보완
 - * (현행) 품질관리 중심 → (개선) 품질관리 + 위생·안전(GAP · HACCP) 추가
 - ** GAP(농산물), HACCP(축산물) 위생·안전 관리기준을 친환경 현실에 맞게 적용
 - 신규인증 신청 단계에서만 실시하던 잔류물질 검사를 갱신 주기별 (매년) 의무적으로 실시
 - * (현행) 단체(표본), 개인(신규) → (개선) 단체(표본), 개인(신규, 갱신)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	○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('18.1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농가 갱신 심사 시 잔류농약 검사 실시 규정 추가 * (현행) 단체(표본), 개인(신규) → (개선) 단체(표본), 개인(신규, 갱신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친환경 농축산물 안전성 심사기준 강화	시행규칙 개정	시행규칙 개정('18.12)

3. 성과 및 한계

-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('18.12)에 맞춰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세부실시요령(농관원 고시) 개정 추진 중
 -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반영(별표 2 개정)

4. 향후 추진계획

-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('18.12)에 맞춰 농관원 고시 추진 ('19.6)

2-3-①	친환경 인증 기준 강화
②	인증체계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남기현 사무관 T.044-201-2432)

1. 과제내용

-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적인 인증체계에 맞춰 '유기(Organic)'로 단일화('20)
 - '무항생제'는 친환경 인증제도에서 제외하되,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항생제 축산물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- 내부방침(6월) → 관계기관협의(7월) → 입법예고(7~8월) → 법제처 제출(10월) → 국회제출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9년 정부입법계획 반영('18.12.), 축산법 개정 중 - 축산법 개정안 부내 의견수렴('18.12) 및 법령정비협의회 완료 * '19.5 법제처 제출, '19.7 국회제출 예정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축산법 이관	국회제출	부내 법령정비 협의회 검토

3. 성과 및 한계

-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추진
 -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'19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고, 부내 의견수렴 및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완료
 -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친환경농어업의 조문(29개조)이 방대하여 축산법 이관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

4. 향후 추진계획

- 인증체계는 친환경농어업법을 인용하되, 기존 축산법과의 균형을 위해 축산법 조문 신설은 최소화하고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
 - 친환경농어업법 29개조를 축산법 13개조로 단순화
 - 인증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친환경농어업법 준용근거 마련
 - * 추진계획 : 개정안 확정(1월) → 입법예고(3월) → 법제처 제출(5월) → 국회 제출(7월)

2-3-①	친환경 인증 기준 강화
③	축산농장 HACCP 적용 확산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.044-201-2987

1. 과제내용

-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종을 단계적으로 확대, 일정 규모 이상 축산 전업농에 HACCP 의무 적용(소규모는 자율적용)
 - * '22년까지 전업농 또는 생산물량 대비 50%까지 인증 확대
- HACCP 농장표시제 도입('19), HACCP 인증 희망 축산농가 대상 컨설팅 실시, 인증 사후관리 미흡 농가 대상 기술지원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 전업농 HACCP 단계적 의무적용 추진(3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농장 HACCP 단계적 의무 적용 관련 연구용역 완료('18.7월) 및 생산자단체 협의회 개최('18.2~8월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사업, 인증 사업(3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HACCP 컨설팅 330개소 및 현장 기술지도 381개소 지원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HACCP 인증농가 개소	7,500	7,642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축산농장 HACCP 인증률 증가('17. 39% → '18. 40)

- * HACCP 인증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·작업장에 맞춤형 HACCP 전문 컨설팅 제공(330개소) 및 HACCP 운용이 미흡한 농장에 대한 현장기술지도 지원(381개소), 축종별 관련단체 협의회 개최(5회) 등

□ (한계) 축산농장 HACCP 단계적 의무적용에 생산자단체는 반대 의견

- 생산자단체는 의무적용이 아닌 농가 스스로 HACCP 적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정책 방향 요구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축산농가 HACCP 단계적 의무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단체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

- 축산단체,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시기·적용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

- * 축산농가 HACCP의무화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(안) 발의(국회 보건복지위 계류중)

2-3-2	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
①	인증기관 공무원 취업 제한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진수 사무관 T.044-201-2432

1. 과제내용

- 친환경 인증기관 공무원 취업 제한
 - 심사원 취업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만 인정, 공무원 경력 불인정
 - * (현행) 인증경력 5년 이상인 자, 자격증 소지자 → (개선) 자격증 소지자
 -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(2년) 권고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- 심사원 취업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만 인정, 공무원 경력 불인정 * (현행) 인증경력 5년 이상인 자, 자격증 소지자 → (개선) 자격증 소지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("18.12) - "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"의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삭제(별표 9의2 개정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친환경 인증기관 공무원 취업 제한	시행규칙 개정	시행규칙 개정("18.12)

3. 성과 및 한계

-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부실인증 가능성 사전 차단 기대

4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 없음

2-3-②	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
②	인증기관 반복 선정 제한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진수 사무관 T.044-201-2432

1. 과제내용

- 농가의 친환경 인증기관 반복 선정 제한
 - 농가가 친환경 인증심사 의뢰시, 동일기관 연속신청은 2회로 제한하여 엄정한 인증 실시 유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농어업법률 개정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가에서 동일기관에 연속 신청은 2회로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법예고(5.15~6.25), 법제처 심사(7.25~11.12), 차관회의(11.15), 국무회의(11.20), 국회제출(11.2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신청 횟수 등을 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마련(법 제20조제4항 개정) *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신청 횟수 등 제한은 부령에서 정함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친환경 인증기관 반복 선정 제한	법률개정	국회 계류중

3. 성과 및 한계

-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 간 유착근절 기대

4. 향후 추진계획

- 개정 법안 국회심의 통과 및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추진

2-3-2	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
③	부실 친환경 인증기관 퇴출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진수 사무관 T.044-201-2432

1. 과제내용

- 친환경인증기관 지정기준 위반에 대한 퇴출 규정('16.8~) 엄격 적용*
 - * 친환경 인증기관 일제점검(농관원, '17.9.18~10.17) : 62개 중 5개 지정 취소 행정처분(예정)
 - (집중관리) '미흡' 인증기관이 심사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감독기관(농관원)이 집중 지도·점검(15% 수준)
 - (지정취소) 3회 연속 '미흡'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'지정취소'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농어업법률 개정 추진 - 평가 결과 3회 연속 '미흡'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법예고(5.15~6.25), 법제처 심사(7.25~11.12), 차관회의(11.15), 국무회의(11.20), 국회제출(11.23) - 인증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'미흡' 평가를 받은 경우 '지정취소' 할 수 있는 규정 마련(법제29조제1항제10호 신설) *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연속하여 3회 최하위 등급 결정을 받은 경우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농축수산물 인증기관 부실 예방	법률개정	국회 계류중

3. 성과 및 한계

- 인증기관 평가를 통한 부실인증 기관 퇴출로 친환경인증 신뢰 회복 기대

4. 향후 추진계획

- 개정 법안 국회심의 통과 및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추진

2-3-2	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
④	인증기관 역량평가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진수 사무관 T.044-201-2432

1. 과제내용

- 친환경 인증기관 역량평가 세부지침*에 따라 매년 상반기 감독기관(농관원)이 평가기관(제3자 기관)을 선정하여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 확보
 - * 점검실적 등 24개 평가항목에 대해 절대평가 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(우수, 양호, 보통, 미흡) 결정
 - (지정취소) 3회 연속 '미흡'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'지정취소'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인증기관 역량평가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·등급제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인증기관 역량평가 도입 및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체 62개 친환경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평가·등급제 실시('18.9월) * 평가결과('18) : 우수(6개소), 양호(24), 보통(26), 미흡(6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친환경 인증기관 역량평가 강화	평가도입	평가도입 및 시행

3. 성과 및 한계

- 인증기관 평가를 통해 건설한 친환경 인증기관 육성 도모

4. 향후 추진계획

- 연속 3회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「친환경농어업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(~'19.12)

2-3-3	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
①	위반사항 처벌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진수 사무관 T.044-201-2432

1. 과제내용

- 위반사항 경중 및 반복 여부 등을 반영하여 처벌 강화
 - 축사에 농약 사용시(성분 함유 자재 포함), 축산물에서 농약 등 위해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인증취소로 강화
 - 3년간 2회 이상 농약 사용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신설
 - 인증취소 처분 3회 받은 경우 영구퇴출(삼진 아웃), 정부의 친환경 관련 정책자금(자재 지원 등) 지원 대상에서도 3년간 배제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법률 개정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률개정을 추진*하였으나, 국회에서 계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입법예고(5.15~6.25), 법제처 심사(7.25~11.12), 차관회의(11.15), 국무회의(11.20), 국회제출(11.23)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을 사용하여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, 10년 동안 인증취소 처분을 3회 받은 자는 친환경 인증 신청 5년간 제한(법 제20조제1항 개정) -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(법 제24조의2 신설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축사에 농약을 사용하여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	○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(12.31) *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‘인증취소’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인증농어가 인증기준 위반시 처벌 강화	법률개정	국회 계류중

3. 성과 및 한계

-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강화로 친환경인증제도 신뢰 제고

4. 향후 추진계획

- 친환경 인증 위반농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신청제한을 위하여 「친환경농어업법」 및 하위 법률(시행령, 시행규칙) 개정(~12월)

2-3-3	인증 농어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
②	축산농장 HACCP 위해요소 평가 항목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.044-201-2987

1. 과제내용

- 축산농장 HACCP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품(살충제 등) 및 농약(제초제 등) 추가 및 무작위 불시 조사 평가 추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농장 HACCP 위해요소 평가 항목에 동물용의약품(살충제 등) 및 농약(제초제 등) 추가(3~12월) ○ 연중 무작위 불시 조사·평가, 농약 등 잔류물질 위반농장에 대한 즉시 '인증취소'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도 강화(3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든 축종의 HACCP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품, 살충제, 농약 등 추가 적용을 위해 HACCP 평가표 개선(안) 마련(18.12월)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(현행) 닭·오리농장에 적용 → (개선안) 모든 축산농장에 확대 적용 ○ '18년 현장평가 대상 농가 5% 수준으로 불시 조사·평가(74개소) 추진 및 동물용의약품, 농약 등 잔류물질 위반 및 운영관리 미흡 농장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마련('18.4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무작위 불시 조사 비율(%)	5	5

* HACCP 인증 농장 대비 무작위 불시조사를 실시한 HACCP 인증농장 비율

3. 성과 및 한계

- 모든 축종에 동물용의약품, 살충제, 농약 등 잔류예방관리 평가 적용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평가표 개선(안) 마련
 - * (현행) 닭·오리농장에 적용 → (개선 안) 모든 축산농장에 확대 적용
- HACCP 인증농장에 대해 사전 고지를 통한 사후관리 제도 개선하여 불시점검 제도 도입 추진
 - '18년 현장평가 대상 농가 5% 수준으로 불시 조사·평가(74개소) 추진
- HACCP 농장의 인증취소 기준 강화
 - 동물용의약품, 농약 등 잔류물질 위반 및 운영관리 미흡 농장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마련
 - *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개정('18.4.25.)
- (한계) HACCP 인증농가 대상의 5% 수준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였으나, 상시 HACCP 인증 기준적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
4. 향후 추진계획

- 축산농장 HACCP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품(살충제 등) 및 농약(제초제 등) 추가(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, 식약처 협의)
- HACCP 기준을 상시 운용하도록 불시 조사·평가 확대(현행 5% → 잠정 10) 추진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강승극 사무관, T.043-719-2854

1. 과제내용

- 축산농장 HACCP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품(살충제 등) 및 농약(제초제 등) 추가

- 연중 무작위 불시 조사·평가*, 농약 등 잔류물질 위반농장에 대한 즉시 '인증취소'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도 강화

* 축종·지역 등 여건 감안, 전체 대상 농장의 5% 수준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잔류물질 위반농장에 대한 즉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(4월, 입법예고) ○ HACCP 축산농장 불시평가 도입 및 평가실시(10월~) * 불시평가 목표 : HACCP 인증 축산 농장 5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4월) ○ HACCP 축산농장 불시평가 도입 및 평가실시(10월~) * 불시평가 실적 : 6.1%(목표 대비 122% 달성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불시평가 비율(%)	5.0	6.1*

* '18년 HACCP 사후관리 대상 1,334개소 대비 82개소 실시 비율(%)

3. 성과 및 한계

- 불시평가 도입 및 잔류물질(살충제, 항생물질 등) 위반 농장 즉시 인증 취소 근거 마련 등 축산농장 HACCP 사후관리 강화

* 불시평가 결과 : ('17) 0 → ('18) 6.1%(목표 5%)

* 잔류물질 위반 농장 즉시인증취소(자진반납) 업체수 : ('18.4~) 4개소

4. 향후 추진계획

- 지속적인 축산농장 HACCP 평가관리 제도개선 및 추진('19~)

- (잔류물질) 살충제 등 잔류물질 관리여부 HACCP 평가대상 확대 (닭·오리→ 소·돼지 등 전 축종)를 위한 고시 개선 추진

- (평가항목) 중요도에 따라 평가배점 차등화(안전관련 배점 강화) 및 즉시인증취소* 평가항목 명확화, 평가표 개선(축종별→ 업종별)

* 잔류물질(살충제, 항생제 등) 관리기준 수립 및 잔류여부 확인

2-3-3	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
③	HACCP 양식장 안전성 검사 및 관리 강화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.044-200-5622

1. 과제내용

HACCP 양식장 위생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

- 양식장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안전성조사 확대(연 2회 이상) 및 유해물질 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(1회 위반 즉시 등록취소)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「생산·출하전 단계 수산물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」 고시 개정(6월)	○ 「생산·출하전 단계 수산물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」 고시 개정 완료(12월)
○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시행령 개정(11월)	○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시행령 개정 방침안 마련(12월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안전성 조사 확대	고시개정	고시개정
○ 안전성 검사 확대	시행령개정	개정 추진중

3. 성과 및 한계

- 양식장 HACCP 제도 확산을 위해 「생산·출하전단계 수산물의 HACCP」 고시 개정으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·공급 추진

- 등록신청 적용대상 확대(육상어류 양식장→ 육상양식장),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(안전성조사 매년 2회 이상 의무 실시 확대 등) 등

4. 향후 추진계획
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(19년)
 - 양식장 HACCP 등록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하여 조사·점검의 실효성 확보

3-1 유통 관리체계 개선

3-1-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

① 시스템 개선 및 정보 표준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류창희 사무관, T.043-719-2852

1. 과제내용

□ 부처 간 이력정보 연계 및 코드 표준화 등 시스템 개선

- 농식품부 농산물·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, 해수부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, 식약처 가공식품이력시스템간 정보연계 추진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처 간 이력정보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(2회) - 가공식품의 원재료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 및 시스템 개선(3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 원재료(농·축·수산물)까지 이력정보 연계를 위한 '이력추적실무 협의체' 개최(2회 / 4, 12월) * (농식품부) 가금류·돼지고기·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상황, (해수부) 생굴, 굴비 등 이력추적 의무화계획 등 공유 - 원재료(농·축·수산물) 이력정보가 링크방식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 구축·운영('17~'18년) * (축산물) 이력추적 의무등록 원재료인 쇠고기, 돼지고기(국내) 이력정보가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 연계 가능 ** (농·수산물) 자율 등록된 원재료 일부 품목(사과, 고등어 등)에 한해 식품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 가능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통·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정보가 연결되도록 물류단위에 표준화된 이력코드적용 추진 - 건강기능식품 대상 물류단위 표준코드(GTIN-13) 현장 시범적용(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부처 이력시스템과 연계 고도화 등을 위한 정보화 예산 확보(4억) ○ 중간물류 유통이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등 연구사업 수행('18.8~'19.1) - 건강기능식품 등 이력추적 의무화 대상업체의 현장 시범적용(12월) * 유통이력 모의적용 시뮬레이션 시범사업 수행(7개 업체, 10~11월) - 입출고 정보입력 코드 단일화 가능 여부 연구조사 진행 중 - 중간물류(유통)이력 연계를 위한 법적 의무부여 방안 등 연구

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원재료(농·축·수산물)의 이력의무 확대에 따른 정보연계 확대 필요
 - 가공식품의 원재료(국내 쇠고기·돼지고기) 이력정보 등 연계시스템 운영으로 원재료를 포함한 가공식품의 이력정보 대국민 제공
 - 부처별 이력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하였으나, 가공식품의 원재료 정보입력 활성화를 위한 입력방식 고도화 등 필요
 - 수입 돼지고기 등 이력제 의무화 추가 품목에 대하여 이력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 개선 필요
- 중간유통단계 이력정보 연계를 위한 표준코드 적용 방안을 검토 하였으나, 업계의 바코드 도입률이 낮아 적용에 어려움 발생
 - 영업자 비용부담으로 이력추적 등록업체 중 18%만 바코드 사용
 - ※ 입출고정보의 효율적 기록관리를 위한 표준코드 제시('15~'17년 연구과제)

4. 향후 추진계획

-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관리 연계 추진
 - 부처 간 이력정보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지속 운영, 수입 돼지고기 등 의무화 품목 연계 확대 및 시스템 보완
- '18년 연구사업* 결과를 토대로 단일코드체계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합리적 정책방향 결정
 - * 식품이력추적 확대 및 중간물류 유통이력 연계 연구('19.1 종료)
 - '19년 상반기 식품이력추적관리 발전협의체 개최 시 이력추적코드 단일화 관련 산업체 의견수렴

3-1-①	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
②	이력추적 대상 품목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류창희 사무관 T.043-719-2852
수입유통안전과 박진아 사무관 T.043-719-6256

1. 과제내용

- 위해도에 기반한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품목 지속 확대
 - 영유아식(17.12), 조제유류(18)는 우선 적용하고, 임산부식품·특수 의료용도식품·체중조절용 조제식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이력 의무품목 확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자용식품, 임산부식품,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이력의무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(12월) - 조제유류 제조·수입업소 의무적용 시행(6월, 연매출 1억원 미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, 「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(6, 12월) - 조제유류 제조·수입업소 261개소 의무적용 완료(6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수(개소, 누계)	6,900	7,341

3. 성과 및 한계

- '18년도 등록업소 목표(6,900개소) 대비 106%를 달성하여 이력관리 확대 로드맵상의 의무화 성공적 수행

- 다만, 취약계층 섭취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의무 적용 확대로 식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조치 등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
 - * 식품 전체 생산량 대비 식품이력 적용식품은 0.2% 수준('17년 생산실적 기준)

□ 수입식품 이력추적 의무등록 대상 업체 안전관리 지속 추진

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라 기 등록업체의 유통이력추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2년 주기로 조사·평가 완료(58개소)
- 수입축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결과 식약처 조회 기능 마련 추진(8월~)
 - * 유통현황, 거래량추적, 유통정보이력, 매입/매출, 재고·판매 현황 조회를 통한 회수업무 등 활용 가능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식품이력추적관리 확대를 위한 지원 지속 추진

- 의무 및 자율업소를 대상 제도설명, 교육 및 현장기술지원 추진

□ 식품이력 적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* 결과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섭취식품에 대한 이력 의무화 확대 등 검토

- * 식품이력추적 확대 및 중간물류 유통이력 연계 연구('19.1 종료)

□ 타 부처 관리시스템과의 연계·협조를 통해 수입축산물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

3-1-①	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
③	계란·닭·오리 이력추적제 도입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도재규 사무관 T.044-201-2346

1. 과제내용

- 가금 및 가금산물(계란·닭·오리)에 대한 이력추적제도 도입
 -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및 법률 개정
 -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가금이력제 추진계획안 마련(2월)	○ 가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계획(1.25)
○ 축산물이력법 개정법률안 상정(6월)	○ 축산물이력법 개정·공포(12.31)
○ 가금이력 시스템 구축(10월)	○ 시스템 구축(10.31) 및 운영(11월~)
○ 가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(11월)	○ 1차 시범사업 추진(11.20~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시범사업 참여율(사육, 도축)(%)	10	20

3. 성과 및 한계

- '20년부터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안 마련 및 관련 법률 개정(12.31)

- 가금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안 마련
 - * 1차 시범사업('18.11월, 전체 10%) → 2차('19.6월, 30%) → 3차('19.10월, 70%)
-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력제 추진 대상을 소·돼지에서 닭·오리·계란으로 확대
- 농가 현장조사, 가금이력 시스템 구축 및 유통단계 이력 표시장비 지원 등을 통한 이력제 운영의 안정성 확보
 - 전국 11,056농장 방문조사 후 7,408개 농장식별번호 부여(4~7월)
 - 지역·규모별 다양한 사업장의 참여 유도로 시범사업 내실화하고 목표 참여율(10%)을 초과한 20% 참여 유도
 - * 도축장 10개소, 계란GP 7개소, 산란계 부화장 7개소, 가금농장 약 2,360개소
 - 가금산물 이력표시기 지원으로 참여자 부담완화 및 제도 조기 정착 유도, 소·돼지 이력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가금시스템 구축·운영

4. 향후 추진계획

-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범사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
 - 2차 시범사업 추진('19.6월~, 유통단계) → 3차 시범사업('19.10월~, 판매단계) → 제도 시행('20.1월~)

3-1-①	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
④	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
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류선행 서기관, T.044-200-5447

1. 과제내용

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

-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대중성 품목을 선정하여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시범운영 추진('18.下)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품종 선정 및 시범운영 계획수립(6월)	○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(6.27일)
○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(12월)	○ 굴비·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이행방안 마련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(10.10일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산물이력제인지도(%)	40.3	41.1

3. 성과 및 한계

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

- 시범사업 대상품목 주요 권역별 설명회('18.11~12) 실시를 통해 관련 업·단체의 이해도 제고 및 시범사업 정착 기반 마련

4. 향후 추진계획

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협의체 구성·운영('19.1.~)

- 시범사업의무화 대상품목에 대해 실제 의무화 가능유통경로 및 제품 세부규격 등을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 추진

3-1-②	위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 개선
①	적용 대상 확대 및 종합관계시스템 구축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성준현 연구관 T.043-719-2055

1. 과제내용

- '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' 설치 확대 및 시스템 설치 매장을 사후 관리 할 수 있는 종합관계시스템 구축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매장 및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확대(~12월) ○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계시스템 구축(11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확대(~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매장용 무상 프로그램 개발 (대한상의) - 온라인 유통사, 식자재유통업체 등에까지 시스템 적용 확대 * ('17) 88,722개 → ('18) 119,338개 ○ 중소매장에 위해식품 정보의 정상 수신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계시스템 구축 완료(11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계시스템 구축	구축	구축

3. 성과 및 한계

-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매장 확대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안심쇼핑 환경 확산
- 시스템 설치 매장에 대하여 위해정보가 정상 수신 여부 등 확인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가능

4. 향후 추진계획

- 위해식품판매차단 관제시스템 통한 사후관리 지속
- '관제 시스템'을 통해 위해식품 정보 정상 수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, 장애 상담, 기술지원 등을 위한 콜센터 등을 운영
- * 콜센터 운영, 현장기술지원, 시스템고도화 등 사후관리 예산확보(455백만원)

3-1-3	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
①	농산물 유통시설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민호 사무관 T.044-201-2221

1. 과제내용

- 공영도매시장에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공판장까지 확대하고 공영도매시장·공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판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 확보 -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협의추진 ○ 공영도매시장·공판장에 공통으로 적용할 위생관리기준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판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확보 추진 중 - 신규사업 선정 및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지속적 협의추진 ○ 위생관리기준 수립 완료('18.11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공영도매시장·공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	완료	위생관리기준 수립 완료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공영도매시장 및 공판장 위생관리기준 수립 완료
 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1항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의 적절한 위생 및 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
 - * 공영도매시장 위생관리기준 조사용역 실시('18.8월~10월)

□ (한계) 공판장 시설현대화 신규사업 추진 난항

- 기존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유사하여 추가 신규사업 선정 및 예산확보가 어려움

* 공판장 시설현대화 사업 2020년 신규사업으로 제안('19.1월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 확인

- 위생관리기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 추진

□ 공판장 시설현대화 신규사업 지속 추진

- 노후화된 공판장을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시설을 현대화 하여 저온유통체계 구축 및 농산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지속적 추진

3-1-③	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
②	축산물 유통시설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상훈 사무관 T.044-201-2338

1. 과제내용

- 오염물과 깨진 계란이 선별·제거되어 유통되도록 ‘식용란선별포장업체(GP)’ 의무 유통제*를 도입

* '19년부터 가정용 계란에 우선 시행, 조리·가공용은 GP 인프라 확충 등 도입여건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

- GP 유통 의무화 시행에 대비, 농식품부 ‘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’ 신규 추진('18 : 신축 2개소, 증축 2개소) 및 운영자금* 지원

* 용자 40억원, 이자율 2.5~3.0%) 지원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계란유통센터(GP) 육성 계획 수립('17.11월)	○ GP 육성 계획 수립('17.11월)
○ '18년 GP 신·증축 사업대상자 선정(~'18.12월) - 대상 : 신축 2개소, 증축 2	○ '18년 GP지원사업 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('17.11월)
	○ '18년 사업대상자 선정('18.2월, 신축 2개소, 증축 1)
	○ 사업 시행지침 개정('18.5월)
	○ '18년 사업대상자 추가선정('18.12월, 증축 1개소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GP 유통실적(%)	50.0	51.3*

* 출처 : 2017 축산물 유통실태(축산물품질평가원)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계란의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해 새로 도입된 “식용란선별 포장업체(GP)”를 통한 계란유통 의무화를 위한 GP 신·증축 지원 (각 2개소)
- (한계) ‘19.1.16현재, 허가 GP는 24개소(일 788만개, 일 생산량의 19.7%)에 불과

4. 향후 추진계획

- 법 시행에 충분한 처리시설 확보하고, 부족 시 계도기간 연장 검토
 - 식약처 등과 협업을 통해 허가 의향업체의 조속한 허가 독려 및 법 시행 전 시뮬레이션(3.1~) 등을 통해 시장 준비상황 점검
 - 법 시행 후, 처리시설 부족은 공동 GP의 가정용 처리 비중 상향 및 계도기간 연장(6개월 → 1년) 등으로 해소

3-1-③	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
③	수산물 유통시설 개선
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양정규 서기관, T.044-200-5443

1. 과제내용

위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

- 위판장별 위판규모, 노후도 등을 감안한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시설현대화 계획 수립('18)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판장 위생기준 고시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판장 현황 조사 및 의견조회 ('18.3) - 위판장 위생기준 고시 제정 ('18.6) ○ 위판장 현대화 계획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판장 현대화 계획 현황 조사 ('18.3) - 위판장 현대화 계획 수립·배포 ('18.1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판장 위생기준 고시 제정·시행 ('18.9) ○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 계획 수립('18.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정위판장 조성 등 위판장 현대화 계획 포함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수립	고시제정	고시제정 (제정·시행, '18.9)

3. 성과 및 한계

위판장 위생기준(고시) 제정('18.9)으로 산지 위생·물류환경 조성
도모

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제1차 수산물
유통발전 기본계획*('18~'22)」 (국무회의 보고, '18.6.5) 수립

* (주요내용) 수산물 위생여건 개선, 신유통경로 확산,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

4. 향후 추진계획

청정위판장 건립 추진('19)

3-1-4	잔류물질 검사 강화
①	농산물 안전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신향숙 사무관 T.043-719-3253

1. 과제내용

□ 농산물 유통 길목인 전국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대 설치하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(~'20년)

* 농산물 취급 공영도매시장 32개소 중 16개소에 현장검사소 설치·운영 중

□ 식품 사용불가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

○ 약령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사용불가 농산물(등축 등) 안전관리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관리 및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수거·검사(연중) -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방안 마련 - 현장검사소 확대 설치를 위한 시·도 의견수렴(2월) ○ 식품 사용불가 농산물 안전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대상 지도·점검(4, 10월) - 식약공용 농산물 수거·검사(4, 10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관리 및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수거·검사(26,422건) -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방안 마련·시행(6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19년 예산(49억원) 및 인력(56명) 확보 - 현장검사소 확대 설치를 위한 시·도 회의 개최(3회/2, 4, 7월) ○ 식품 사용불가 농산물 안전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대상 지도·점검(2회/4, 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85개소 점검, 홍보브로마이드 배포(1,400부) - 식약공용 농산물 수거·검사(2회/4, 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구기자, 오미자, 산약 등 767건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식품판매업체 지도·점검(회)	2	2

3. 성과 및 한계

□ 농산물 유통 길목인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경매 전 검사를 통한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

○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확대 설치를 위한 '19년 예산 및 인력 확보

* (예산) 49억원(신규 7개소), (인력) 56명(신규·기존 12개소)

** 현장검사소 설치(누계) : ('18) 17개소 → ('19) 24개소

□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농산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

○ 식품 사용불가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한 농산물 안전인식 확산

* 지도·점검 결과 부적합률 감소: ('16) 8.6% → ('17) 3.3% → ('18) 0%

** 점검 및 홍보 대상 확대: ('16~'17) 5개 약령시장 → ('18) 8개 약령시장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확대 설치를 통한 유통 전 농산물 안전 관리 지속 추진

□ 농산물 관리 취약 분야 지속 발굴을 통한 사각지대 관리 강화

3-1-4	잔류물질 검사 강화
②	축산물 안전관리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.044-201-2987

1. 과제내용

- 축산 농장 등 생산단계에서 잔류물질 검사 강화
 - 농장 원유(原乳) 잔류물질 검사 계획 개선 추진(4~11월, 식약처 협업)
 - 원유(原乳) 잔류물질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시범조사사업 추진
 - 농가, 도축장 식육, 식용란 잔류물질* 및 미생물** 검사(1~12월)
 - * 식육 175종 120천건, 식용란 79종 6.5천건 ** 3종 103천건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원유 잔류물질 검사 계획 개선 추진('18.4~11월)	○ 원유 잔류물질 시범조사 추진 ('18.7월~'19.3월) * 원유 안전관리 T/F 구성·운영('18.4월~)
○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추진('18.1~12월)	○ 농가, 도축장 식육, 식용란 잔류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추진(계획대비 128.0%) * (잔류물질) 177천건 실시(계획대비 140.1%) * (미생물) 116천건 실시(계획대비 113.1%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검사건수 목표 대비 완수율(%)	100	128

* 잔류물질 및 미생물 연간 검사 건수 목표대비 완수율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조사와, 생산 단계 축산물(식육·식용란) 안전성 검사
 - 원유 안전관리 T/F(방역정책국장 주관)를 구성·운영하여 전체 낙농가 대상 위해요인별 사전점검 및 대책 마련 추진('18.4월~)
 - 식육·식용란 등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*·미생물** 검사 정상 추진('18년 계획 대비 잔류물질 238.6%, 미생물 116.9% 달성)

4. 향후 추진계획

- 원유 검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·업계 등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,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여 사전 차단
 - 시범조사 이후 원유 검사체계 개편에 대비, 해외사례 분석과 업계·생산자 의견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 마련('19.12월)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이영희 사무관 T.043-719-3259

1. 과제내용

- 원유 등 유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 검사
 - 현행 민간 집유장에서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에 추가하여 정부 차원의 국가잔류물질관리프로그램(NRP) 도입 운영
- 생산~유통까지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확대 실시
 - 생산단계(농가, 도축장 식육, 식용란) 및 유통단계(계란, 닭고기 등)에서 이중 점검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성 확보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유 등 유제품 잔류물질 조사 세부계획 수립·시행(3월) ○ 농가, 도축장 식육, 식용란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계획 수립 및 시행(1월) ○ 전통시장·인터넷 등 유통 취약지대 축산물 수거·검사 세부계획 수립(1월) ○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여 등 관련규정 개정(8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8년 우유 잔류물질 시범조사 계획 수립·시행(3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유 잔류물질 오염실태 조사 및 국가잔류물질검사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조사 사업 추진(6월~) * 동물용의약품 등 67항목/336건 검사 ○ '18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(1월 지방청, 농식품부, 지자체) ○ '18년 유통단계 축산물(계란, 닭고기, 알가공품) 수거·검사 계획 수립(1월) 및 통보(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생 취약지대(전통시장, 인터넷 등) 계란 등 수거·검사 실시 * 계란 2,325건 검사, 부적합 5건(4개 농가) ** 닭고기 300건, 알가공품 100건 모두 적합 ○ 「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 규정」 개정 완료(5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자가품질 검사항목, 주기 등 세부기준 마련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강화	계획수립운영	계획수립운영
○ 식용란수집판매업 자가품질검사 강화	고시개정	고시개정(5월)

3. 성과 및 한계

-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(NRP)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원유 잔류물질 검사기반 구축 및 안전관리 환경 조성
- 생산·유통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부적합 축산물 유통·판매 차단 및 사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
 - 식육·식용란 등 생산단계 안전성검사 및 계란 살충제 수거·검사 등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불안 감소
 -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로 영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

4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 없음

3-1-4	잔류물질 검사 강화
③	수산물 안전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사무관 T.043-719-3241
 농축수산물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T.043-719-3206

1. 과제내용

- 수산물 유해물질 국가관리시스템(NRP) 체계 구축·운영
 - 동물용의약품, 중금속 등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위해우려 수산물 유통 사전차단
- 수산물 운반차량(활어차)에 대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
 - 수산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활수산물 운반차량*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를 통해 수산물 안심 제고

* 영업등록(신고)없이 자동차 등록 시 운반가능, 사용 해수에 대한 관리법령 없음

2. 추진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산물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위험평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	○ 실태조사 및 위험평가 대상에 수산물을 포함하도록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개정(12월 시행)
○ 수산물 유해물질 국가관리시스템 잔류조사 실시(5~11월)	○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(5~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소비·생산 수산물 18품목 540건 동물용의약품, 중금속 등 조사 - 잔류조사 결과보고서 작성(12월)
○ 수산물 운반차량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(11월)	○ 활어 운반차량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(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어 운반차량 시설 및 운영 기준, 자율점검표 등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	개정완료	개정완료
○ 수산물 국가잔류물질 조사건수(건)	540	540
○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	배포	배포

3. 성과 및 한계

- 수산물 유해물질 국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 - 수산물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위험평가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,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「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」 고시 제정('19.11)
 - *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(동의대, '18.8~12월)

3-1-5

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

①

통합식품안전정보망 기반 유통 검사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성준현 연구관 T. 043-719-2055

1. 과제내용

- 통합망 통계를 기반으로 활용한 과학적 유통 검사 실시
 - ‘단속대상선별시스템’을 활용하여 위반 및 미점검 이력 등 단속 필요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 실시
 - 통합망 통계를 기반으로 식품유형별 안전관리 영향요인에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이 높은 식품유형을 집중 수거·검사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속대상 선별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대상 필요성이 높은 업체 선정 및 집중 점검(연중) ○ 통합망 자료를 활용, 안전관리 영향 요인을 고려한 식품유형 수거·검사 실시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스템을 통해 단속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음료류,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등 합동 점검(7회) ○ 특별관리 식품유형 30개를 지정하여 집중 수거검사(23,444건 검사, 157건 부적합) <p>* 발렌타인데이(2월), 하절기(6월), 가을 행락철(9월), 김장철(10월) 등 시기별·테마별 지도점검 시 수거·검사 병행</p>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유통식품 수거검사 건수(건)	62,200	76,635

3. 성과 및 한계

- 국내 유통 중인 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조치 등 안전관리로 소비자 피해 예방
- 혼밥, 외식 증가 등 식품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수거·검사 항목 선정 등 효율적인 수거·검사

4. 향후 추진계획

- 통합망 통계 활용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선택과 집종의 수거·검사 강화

3-1-5	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
②	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근절

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임창근 사무관 T.043-719-1453

식품안전관리과 성준현 사무관 T.043-719-2055

1. 과제내용

- 「사이버조사단」 구성·운영으로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
 - 분야별로 분산된 사이버 감시기능을 통합·운영하여 온라인 상의 불법 판매 방지와 허위·과대광고 점검의 시너지 효과 창출
 - 온라인 업체와의 정례협의체 개최 및 관계기관(방심위·관세청 등) 위반사례 공유 및 불법정보 신속차단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기본계획 수립·시행(4월)	○ 사이버조사단 업무계획 수립 및 「식품·의약품 사이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정(4월)
○ 관계기관 및 온라인 업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(5월)	○ 온라인쇼핑몰, 홈쇼핑협회 및 회원사와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(9월)
○ 식품·의약품 등 분야별 허위·과대 광고 판단매뉴얼 개발(6월~)	○ 온라인모니터링 판단·조치 일반 원칙, 식품·의료제품 분야별 규정 및 위반사례 등 매뉴얼 개발(12월)
○ 안전한 온라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대국민 홍보(상시)	○ 25초 영화제, 대국민 공모전 및 SNS·KTX·전광판·홈쇼핑 등 활용 홍보영상 송출 등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온라인 불법제품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강화(상시)	○ 온라인 불법유통 기획점검,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홈페이지, SNS 통해 공개 * 해독주스, 다이어트 음료 점검 후 유사 음료 비교 등 효과검증 결과 제공
○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식품 등 수거검사 실시(연중)	○ 가정간편식 4,622건(12건 부적합), 온라인 쇼핑몰 판매식품 등 965건(10건 부적합) 수거검사 실시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사이버조사단 구성·운영 근거규정 마련	훈령제정	훈령제정
○ 온라인 불법제품 기획조사(회)	10	10

3. 성과 및 한계

□ 국민생활 밀접 제품 및 사각지대 점검 강화

- 생활밀접제품 및 건강표방제품 집중점검으로 허위광고·불법유통 사이트 총 95,789건 차단 등 조치

* 클렌즈 주스, 곤약젤리 등 생활밀접제품 중점점검 및 해외위해정보 제품 167개, 3,817건 판매사이트 점검·차단조치

□ 국민 공감대 확대를 위한 감시·홍보 방식 변화

- 점검 발표 시 국민이 궁금해 하는 효능·효과,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함께 공개하여 국민 의구심 해소

* 클렌즈주스, 곤약젤리 등 다이어트 표방 제품의 실제, 성분 등

- 국민 관심이 높은 '25초 영화제'를 식약처 최초로 개최하여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

* 소비자 경험을 초단편 영화로 공유하고, 페이스북을 통해 시상식 생중계

- 온라인 관리 대상은 무한히 증가하나, 관리 인력은 한정적으로 근원적 해결에 한계

- 개별판매자, 해외소재 판매자 및 국가별 규제 차이, 보안 사이트 등으로 실효적 제제에 어려움

4. 향후 추진계획

- 지자체, 민간기관과 공조·협력을 통한 온라인 감시역량 집중

- 고의·상습 위반제품(지자체), SNS 가짜 체험기·허위광고(소비자원, 인터넷광고재단), 불법사이트 게시글 신속 차단(방심위) 등

-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건강표방제품 검증 및 공개

- 온라인에서 새롭게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, 화장품의 표시·광고 내용을 관련기관, 전문가 등과 검증하여 공개

3-2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

3-2-1 수입 전(前) 관리

①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정영애 사무관 T. 043-719-6210

1. 과제내용

- 수출국 현지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한 위해 우려 수입식품 사전 차단
 - 등록정보,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 우려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수입 전 안전관리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실사 계획 수립(2월) ○ 현지실사 대상업소 선별 체계 구축(안) 마련(~12월) ○ 유관기관 합동 실사 등 부처 협업을 위한 협의회 개최(1월) ○ 신규 축산물 작업장 및 수산물 약정국 합동 현지실사 실시(상시) ○ 현지실사 점검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(3회, 2·3분기) ○ 현지실사 매뉴얼 제작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8년도 사전안전관리계획 수립(1월) ○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운영개선(안) 마련(4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, 국내외 위해정보, 다소비식품 등을 고려한 위해도에 따른 자체와 위탁으로 구분 수행 ○ 수산물 해외제조업소(식약처-해수부) 현지실사 관계기관 협의(1월) ○ 수산물(6개국 52개소), 축산물(10개국 84개소) 현지실사 완료 ○ 현지실사 실무과정 교육완료(4, 5, 9월) ○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사이버 전문 역량교육 개설(11월) *매뉴얼 대체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(%)	3.22	3.31

3. 성과 및 한계

□ 위해발생 제조업소 제품의 국내 유입 사전 차단

○ 현지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수입중단 등 조치

* ('17) 234개소 중 수입중단 15개소(부적합 14, 실사거부 1), 개선필요 27개소
→ ('18) 237개소 중 수입중단 32개소(부적합 23, 실사거부 9), 개선필요 30개소

○ 현지실사를 실시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·안전관리 수준 향상

* '17년 현지실사업소 제품 부적합률 감소 : 실사이전 1.15% → 실사이후 0.22%

○ 현지실사 결과 위생관리 미흡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

- 검사 강화되어 수입되고 있는 업소의 시정기한 신설*('17.10월)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소의 조속한 개선 또는 수입중단 조치**

* 시정기한 :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, 1회에 한해 30일 이내 기간연장 가능

** 시정완료 업소/시정대상업소: ('16) 0개소/7개소 → ('17) 4개소/37개소 → ('18) 42개소('17년 시정대상 18개소 포함)/37개소

□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된 제품 수입률 제고

○ 영업자 책임으로 사전 안전관리 되는 우수수입업소 및 현지실사 확대에 사전 안전관리 된 제품의 수입률 지속 증가

*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: ('17) 2.84% → ('18) 3.31%

□ 해외 현지실사 실효성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

○ 현지실사 계획에 대한 무응답 등 기피한 제조업소에 대해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 미흡

4. 향후 추진계획

- 위해우려업소 및 기피업소 집중관리로 잠재적 위해식품 차단
 - 전년도 통관검사 부적합 상위 국가(5개국)의 주요 부적합 품목(9개 품목) 업소 중 부적합 이력 있는 업소는 전수점검
 - 위생·안전문제로 언론 또는 국회 관심 품목에 대한 중점 점검
 - 최근 3년간 수입실적 있는 모든 중국산 김치 제조업소 위생점검
- 현지실사 무응답·기피·방해한 모든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
 - 수입자 및 수출국 정부기관 등을 통해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여 위생관리 확인이 필요한 무응답 등 업소의 전수 점검

3-2-①	수입 전(前) 관리
②	축산물 수입위생평가 개선

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최충렬 사무관 T. 043-719-6202
수입식품정책과 기용기 사무관, T. 043-719-2162

1. 과제내용

- 제품 유형별로 세분화된 축산가공품 위생평가를 원료와 공정이 유사한 분류로 묶어 평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('18)
- 축산물 위생평가 실적 등을 토대로 축산물 위생평가기준을 표준화 하여 위생관리 동등성 평가기준*을 마련('19)
 - * WTO·SPS 협정으로 국가간 식품안전시스템의 동등성 인정, 절차 투명성 등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물가공품의 수입위생평가 대상 품목의 효율적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원료와 공정이 유사한 유형에 대하여 동시 진행 근거 마련 ○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(12월) ○ 단계적으로 주요 품목별 국가 동등성 등 위생평가 매뉴얼 마련('1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축산물 중 식육에 대한 동등성 평가 기준 정책연구 용역(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」(식약처 예규) 제정(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알가공품(3그룹) 및 유가공품(7그룹)을 그룹화하여 효율성 마련 ○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(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농식품부 위험평가와 식약처 위생평가 동시 진행 가능 ○ 식육의 동등성 기준에 대한 정책 연구실시(5월~8월) 및 위생평가 매뉴얼 마련(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입위생평가의 개요 및 각 절차 별 추진사항 표준화

-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철저한 평가 절차를 통한 축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
 - 수출국 위생관리에 대한 서면답변서 및 현지조사, 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등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
 - * (설문서 송부) 14개국 34품목, (답변서 검토) 13개국 40품목, (현지조사) 5개국 16품목, (수입허용) 10개국 31품목 등

-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 통일성 기반 마련
 -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(식약처 예규)을 제정하여 사례별로 진행하던 절차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
 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(12월)으로 농식품부 위험평가와 식약처 위생평가 동시 진행 가능
 - ‘수입위생평가 매뉴얼’을 통하여 각 단계별 평가절차에 대한 이해와 평가자간 평가 역량 표준화 추진

- 수입위생평가 수요 급증에 따른 업무 효율성 및 평가인력의 전문성 마련 필요
 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신규 수입허용 요청 건의 증가에 비하여 평가 처리 건 수 미비
 - * (신규신청) ('16) 14개국 17건→ ('17) 22개국 34건→ ('18) 9개국 14건
 - * (평가완료) ('16) - → ('17) 3개국 3건→ ('18) 10개국 12건

4. 향후 추진계획

- 위생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성 방안 마련
 - 수입위생평가 설문방식 개선 및 평가 체계 전환

- 동등성 입증의 주체를 수출국이 증명하도록 식육에 대한 국가 동등성을 반영한 설문서를 마련하여 자료 정리·분석 시간 단축
- '18년 식육에 이어 유가공, 알가공, 식육 가공품에 대한 동등성 기준 마련 정책연구 실시('19년)

□ 평가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

- 수입위생평가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평가자 간 업무정보 교류 및 평가 능력 상호 증진 도모

□ 수출위생증명서 의무화로 수출국 위생증명 강화

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수출위생증명서 적용례 개정('19.12월)

3-2-2	통관 단계 관리
①	통관검사 및 감시 체계화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장화중 사무관 T.043-719-2210
수입검사관리과 강성필 사무관 T.043-719-2220
수입검사관리과 가정훈 사무관 T.043-719-2230)

1. 과제내용

-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 강화
 - 국가·품목·유해물질 검출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
 - 국내·외 부적합항목을 검토하여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 선정
 -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 (OPERA)을 무작위표본검사에 확대적용 및 개선 추진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반기별 계획 수립(1, 7월)	○ 최초 수입식품 중점검사항목 선정(1월) 및 무작위표본검사 중점검사항목 선정(1, 7월)
○ 위해우려 수입식품 집중검사를 위한 '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(OPERA)' 활용	○ 최근 3년간('15~'17) 수입현황 분석, 주요 기준항목(국가·품목 중심) 설정, 부적합현황을 가중치 두어 선정
○ 지방청 수입식품담당공무원 대상 시스템 운용 재교육(하반기)	○ 지방청 수입식품 담당공무원 대상 시스템 운용 재교육 실시(9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입식품 등 수입검사 부적합률(%)	0.8	0.8

3. 성과 및 한계

- 부적합 이력 및 불성실 영업자 등에 대한 무작위검사 강화
 - 국가·품목·유해물질 검출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
- 최초수입식품의 중점검사항목 선정(1월)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중점검사항목 선정·시행(1, 7월)

4. 향후 추진계획

- 무작위 중점관리대상 품목 선정 시기 조정
 - 수입식품등(식품등*·축산물·수산물 등) 일관성 있는 무작위 검사 운영을 위해 연 2회(1, 7월) 무작위 검사 계획을 수립·운영
 - * 농·임산물, 가공식품, 건강기능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·용기 및 포장 등
-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(OPERA)과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('19.12. 신규구축 예정)을 활용, 위해정도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

관세청

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허범석 사무관, T.042-481-3243

1. 과제내용

- 기존 건별로 전자문서를 통해 공유해오던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식약처-관세청 간 시스템 직접 연계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활용
- 식품의 부정수입 사전차단을 위한 우범업체·품목정보 공유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 행정정보 공유망을 통한 기관간 정보연계 ○ 수신된 정보의 활용을 위해 IRM - PASS* 메뉴 신설 및 프로세스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 ○ 식품 부정수입 차단을 위한 우범 업체 · 품목정보 교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약처-관세청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 활용제고 및 부처협업 증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동 협업사례가 ‘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우수사례’ 로 선정 → ‘행안부 장관상’ 수상 ○ 기관 간 전산연계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유대상 항목의 조정을 통한 표준안 도출 및 품목분류 관련 교육 실시* * 식약처 직원 대상 선별에 필수요소인 품목코드(HS Code) 관련 교육 제공 ○ 행정정보공유망을 이용해 식약처로부터 직구 위해식품 통관보류 요청품목 정보 1,702건 수신('18.12.20일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선별기준 운영 : 식약처 EDA 협업 기준 856개 운영 중('18.12.20일 기준) ○ 식약처 '식품정보활용시스템'에서 수입식품 관련법규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1,162개 업체 정보입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015~2018.12.20 현재

□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부처 간 정보공유 프로세스 개선(공문→전산시스템 연결)에 따라 급증하는 해외 직구를 통한 무분별한 위해식품 반입 차단
 - 식약처가 관리하는 위해식품 정보를 통관단계에서의 반입 차단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
 - 해외직구로 반입될 우려가 있는 위해 물품 차단의 부처 간 표준 협업모델 도출하여 수입품에 대한 통합국경관리 기반 강화

- (한계) 공유 정보를 보다 직접적으로 선별·차단에 활용하기 위해 '식품정보활용시스템' 내 우범업체 정보수집 및 연결 키값 설정 필요
 - 위 시스템은 수입식품안전법 위반업체 제재 이력을 '인허가번호' 기준으로 관리하여 관세청의 선별·차단 업무에 즉각 활용 불가
 - * 현재 식약처에서는 국세청에서 보유 중인 인허가번호에 대응되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정보입수 추진 중 (~'19년)
 - ** '18.11.8.~9. 개최된 식약처 주관 「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토론회」에 참가하여 식약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'사업자등록번호' 반영 요청

4. 향후 추진계획

- 관세청-식약처 간 공유대상 정보의 정제·고도화 및 의약품 등으로 확대
 - 제공정보를 활용한 적발실적 검토, 보완요소 도출 등 프로세스 개선('19년)
 - 공문으로 공유되는 통관보류 의약품 등 정보의 추가 전산연계 진행('19년)

3-2-②	통관 단계 관리
②	보세구역 등 제고조사 강화

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이의상 사무관, T.042-481-7821

1. 과제내용

- 국민건강·사회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고세율 농수산물(생강, 다대기 등)의 무단반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
 - 검역·검사기관의 '정밀검역 지정 화물' 등 고위험 보세화물은 무단 반출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집중감시 실시
- 식품류 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요건을 강화하고, 우범 보세구역(C등급 이하)을 별도 관리하는 DB 구축
 - 보세창고 신규 및 갱신평형 심사시 보세화물 관리역량에 대한 심사 및 법규준수도 미흡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수산물 등 보세화물 장치 및 관리방법 지침 시달 ○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패류 등 활수산물 특허의 경우에도 '수입활어 보세창고 심사 체크리스트'를 적용토록 특허심사가이드라인(지침) 시달 ○ 보세화물 장치방법, 화물포 부착 방법 등을 보세창고 법규수행능력 평가 현장점검 지표로 운영 ○ 보세구역 위험정보 분석시스템 개발하여 고위험 농산물·식품류 보관창고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실태 점검 강화

-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검역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「고위험 보세화물(정밀검역대상) 실시간 조회 시스템」 구축으로 국민안전 보호 기여
 - 일선현장의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본청의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국민먹거리 수입화물의 검역회피 불법반출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차단
 - 계속 증가하는 업무량 환경속에 위험관리 Tool이 마련되어 만성적인 인원부족에도 불구하고 효율적·효과적인 보세화물 위험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

- (한계) 보세화물 위험정보 활용 한계
 - 현재 시범운영(부산세관) 중인 보세구역 차등관리 시스템은 독립적인 인터넷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의 호환 불가로 보세화물 정보 수작업으로 업데이트

4. 향후 추진계획

- 보세구역 종합감시 시스템 구축
 - 별도 서버로 운영중인 보세구역 차등관리 시스템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이관하여 보세화물 감시단속에 활용

3-2-②	통관 단계 관리
③	신고수리보류 제도 도입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기용기 사무관 T.043-719-2162

1. 과제내용

- 신고수리 보류조치(무검사 역류제) 도입 추진
 -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신속히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 마련
 - * 입법예고('17.7.12~8.22), 규제심사(9.18), 법제심사(12.13), 국회제출(12.29)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중대한 위해 우려 수입식품 등의 국내유입 원천차단을 위한 신고수리 보류조치 도입(12월)	○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·공포(12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입식품안전 특별법 개정	개정	개정·공포(12월)

3. 성과 및 한계

- 수입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방문 설명
 - 국회 상임위 의원실 및 전문위원 대상 법률안 설명·협조요청
 - * 국회 입법조사관실 및 법안소위 의원실 등 방문·설명 14회

□ 신고수리 보류조치 확산 유도를 위한 설명회 등 개최

○ 주한 재외공관 대상 설명회(2회 /3, 9월) 및 민원설명회* 개최(4회)

* 서울·경인 4, 11월, 부산 5월, 경인 6월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신고수리 보류조치 도입·시행

○ 중대한 위해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없이 해당 식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무검사 억류제 지속 추진

3-2-②	통관 단계 강화
④	검사명령제 대상 확대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장화중 사무관 T.043-719-2210

1. 과제내용

- 위해우려 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확대 실시
 - 위해우려 식품 등에 대한 수입단계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영업자 책임의식 고취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신규 검사명령제 대상 선정 - 위해우려식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검사명령제 운영(연중) * 연간 4품목 신규 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검사명령 대상품목 확대(4품목 추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히비스커스분말(금속성이물, 4월), 향미유(벤젠, 6월), 베리류(방사능, 10월), 노니분말(금속성이물, 12월) 4품목 신규 지정 * ('17년) 8품목 → ('18년) 11품목 ** 검사명령 기간 만료로 1품목(망고) 종료 ○ 이해관계인 홍보 및 수출국 통보 (4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입업체 및 대행업체 대상 간담회 (12월), 우편·PCRM 발송, 홈페이지 공지 등 사전 홍보 - 해당 제품 수출국 서면 통보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검사명령 대상 품목 추가(품목)	4	4

3. 성과 및 한계

- 부적합이 반복되는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 책임강화
 - 위해우려 수입식품은 영업자가 사전에 검사하고, 적합한 식품만 수입하도록 하는 검사명령 확대로 부적합 수입식품 등 사전 차단
 - '18년도 4건의 검사명령을 신규로 추가 지정·시행
 - * 1) 히비스커스 분말(금속성이물), 2) 중국산 향미유(벤젠), 3) 베리류(블루베리, 빌베리, 링곤베리) 및 가공품(방사능), 4) 노니 분말(금속성이물)
- 검사명령 신규지정에 따른 영업자 혼란 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
 - (이해관계인) 수입업체 및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* 개최
 - 우편, PCRM(팩스, 이메일 등 전자발송), 홈페이지(홈페이지, 식품안전나라) 공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홍보 실시(4회)
 - * 노니분말 검사명령 시행관련, 영업자 대상 간담회 실시(12월)
 - (수출국) 검사명령 대상제품 수출국에 서면으로 검사명령 실시를 사전 알림(4회)

4. 향후 추진계획

- 부적합 반복되는 수입식품은 검사명령 확대 시행
 - 부적합이 반복되는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명령 확대로 부적합 수입식품 사전 차단
 - 매년 4건의 검사명령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여 검사명령 지속 확대
 - 검사명령 확대에 따른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절차 등 개선
 - 검사명령대상 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구체화·간소화하여 부적합 발생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

3-2-③	수입 후(後) 관리
①	거래내역 신고 강화

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사무관, T.042-481-7851

1. 과제내용

- 수입 후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사후 신고하는 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확대
 -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 확보 강화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을 확대하여 수입물품 유통이력관에 관한 고시 개정 등 관리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통이력대상품목 확대 및 유통이력고시 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부처 대상으로 유통이력 대상 품목 수요조사 실시('18.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사능 수산물 등 국가적 이슈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 등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요청한 품목 조정 및 신규지정 요청 품목 검토 * (요청기관) 농림부, 해수부, 산자부 ○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개최('18.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정기간 만료품목 재지정 및 신규 품목 지정 여부 심의 ○ 유통이력대상품목 조정 및 확대하여 유통이력고시 개정('18.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8개 품목 → 39개 품목(농산물 18개, 수산물 20개, 공산품 1개) * 수산물 : 6개(재지정), ±4개(품목조정), 농산물 : 1개(재지정), 공산품 : 1개(신규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통이력대상물품 현장 집중 점검 및 신고제도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통이력 현장 집중점검(점검업체 5,014곳) 등을 통해 유통이력 신고 위반 및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단속 실시('1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통이력 신고위반 적발 55건, (과태료 3,450만원 부과) - 원산지위반 적발 19건(6,411백만원) ○ 유통이력제도 설명 홍보물품 및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(4·8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리플릿 1만부, 홍보물품 4,000개

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(성과) 「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('18.8.1시행)

- 방사능 수산물 등 국가적 이슈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 등을 위해 관계부처의 일부 품목 조정 및 신규지정 요청을 수용하여 품목 확대

* (개정前) 38개 품목 → (개정後) 39개 품목(농산물18개, 수산물20개, 공산품1개)

(한계) 지속적인 유통이력대상물품 확대에 의해 관리·감독 부실화 우려

* 유통이력신고 건수 : ('16) 738만건 → ('17) 942만건 → ('18) 1,130만건

4. 향후 추진계획

농·수산물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국내산과 통합한 유통이력관리 요청

3-2-③	수입 후(後) 관리
②	유통 수입식품 수거·검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마정애 사무관 T.043-719-6257

1. 과제내용

- 유통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
 -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수거·검사 추진

2. 추진계획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입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유통 식품 수거 검사 강화(연중)	○ 국민다소비식품, 장기간 서류통관, 부적합 이력,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품목 등 수거·검사(연중)
○ 잠재적인 이슈관리를 위한 수거 검사(연중)	○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제품 420건 및 소비자 희망품목 480건 검사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유통 수입식품 수거 검사 건수(건)	5,000	7,128

3. 성과 및 한계

- 유통 다소비 수입식품 일상 수거·검사
 - 국민 다소비 수입(농·축·수산물 포함), 장기간 서류통관 제품, 최근 4년간 부적합 이력 제품,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품목 등 수거·검사
 - 설, 추석 대비 성수식품 수거·검사(1, 9월)

-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성수 수입식품 수거·검사(2월)
- 가정의 달 선물용 성수 수입식품 수거·검사(5월)
- 하절기 대비, 가을철 나들이객 대상 수입식품 수거·검사(7, 9월)
- 김장철 대비 주요 김장재료 집중 수거·검사(11월)

□ 해외 위해정보 관련 수거·검사

- 위해정보 분석을 통해 품목별·위해도별(회수등급) 검사범위(3개월 ~2년) 조정 등 합리적 검사방안 마련·시행(4월~)
 - 시행('18.4월) 후 검사 비율은 50% 감소, 부적합률은 2배 이상* 증가
 - * ('17) 810건(2,255개 지시, 2건 부적합) → ('18) 420건(1,600개 지시, 5건 부적합)

□ 소비자 참여형 수입식품 등 수거·검사

- 소비자가 선택한 유통 수입식품 안전성 검사 희망품목 선정을 위한 수거·검사(7, 11월)
 - * 과일류, 견과류, 곡류, 수산물, 유제품, 소스류, 주류, 커피류, 과자류, 음료류 등
 - ** (검사결과) 총 480건 중 477건 적합, 3건 부적합(회수조치 및 홈페이지 공개)

4. 향후 추진계획

-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 및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사회적 이슈제품 등 지속 수거·검사 추진
- 소비자 참여형 수입식품등 수거·검사 지속 추진
 -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

3-2-③	수입 후(後) 관리
③	수입식품 영업자 지도·점검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마정애 사무관 T.043-719-6257
수입유통안전과 박진아 사무관 T.043-719-6256
수입식품정책과 기용기 사무관 T.043-719-6162

1. 과제내용

- 인터넷 불법 판매행위, 무신고 수입 행위, 수입신고 오류행위 등 위반 사례별로 중점 지도·점검하여 재발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반행위별 선제적 지도 점검 (연중) - 위해정보 등 이슈 발생에 따른 신속한 지도 점검 실시 ○ 수입식품 유통이력 추적관리 강화 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반사례 및 업종별 지도·점검 실시(연중) -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우려 업체, 부적합 이력업체, 신설 업종별 등 업체 지도·점검 * 지도·점검실적(부적합) : '17년 574건 (14건) → '18년 782개소(10건) ○ 수입식품 유통이력추적 신규등록 업체 지도·점검 * (신규) 건강기능식품 및 조제유류 수입 업체 139개소, (조사·평가) 등록 후 2년 경과업체 58개소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점검업소 수(개소)	661	782

* 전년도 대상업체(601개소) + 이슈관리 필요업체 등(60개소)

3. 성과 및 한계

- 유통단계별 수입판매업소 지도·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
 - 「수입식품법」 위반(행정처분 이력) 업체 등에 대한 일상 지도·점검 실시
 - * 지도·점검 : '17년 (574건, 14건 부적합) → '18년(782개소, 10건 부적합)
 - ** 업종 :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·인터넷구매대행업·신고대행업·보관업
 -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(자유업, 300㎡미만) 실태조사 및 무신고(무표시) 제품 판매행위 등 지도·점검
 - * 1,047개소 점검, 1차 위반업소(290개소) 계도 후 재점검 실시(11개소 행정조치)
 - 합리적 이물관리를 위한 '수입식품 이물관리 개선방안' 마련·시행(9월)
 - * 국내에서도 이물혼입 확인 시 즉시 행정조치 등 원인조사 효율적 개선
 - ** 유리조각 등 위해 이물질 검출 제조업소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
- 위해정보 등 이슈 발생에 따른 신속한 지도 점검 실시
 - 담배모양 사탕, 이케아 이물, 폴란드산 베리류 방사능 검사 등 수입 업체 특별 지도·점검 실시(74건)
- 수입식품 유통이력 추적관리 강화
 - 임산부식품,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에 대한 유통이력 추적관리 단계적 확대 추진
 - *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(12월)

4. 향후 추진계획

- 위반업소 재발방지 및 수입식품 관리 사각지대 지속 추진
 - 행정처분 다빈도 업체 점검,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(면세점 포함)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건강 보호
- 의무등록 업체의 이력추적 등록 추진을 통한 관리강화
 - * 등록대상('19.1월 기준) : 체중조절용 식품 수입업체 1개소

3-2-4	소규모 반입물품 관리
①	보따리상 등 휴대반입식품 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마정애 사무관 T.043-719-6257

1. 과제내용

-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 구매·검사 실시로 유해 반입식품 차단
 - 중국, 일본 등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항구별로 휴대반입식품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통해 위해 우려 차단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기적 현황 파악 및 구매 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만별 주2회 주기적인 구매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동일제조사 동일제품 3개월간 반입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따리상 반입 물품 각 항구별(인천·평택·군산항) 주 2회 구매·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8년 「식품안전관리지침」에 '휴대 반입식품 안전관리계획'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구매·검사 실적(부적합 건수) : '17년 1,166건(22) → '18년 1,168건(15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화객선 휴대반입식품 수거 검사 건수(건)	1,130	1,168

3. 성과 및 한계

- 주기적 수거·검사를 통한 휴대반입식품 안전관리 실시
 - 중국 및 일본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3항구(인천, 평택, 군산) 보따리상(개인휴대품) 반입제품 주 2회 구매·검사*
 - * ('17년) 1,166건 → ('18년) 1,168건

- 부적합 제품은 관할 세관에 통보하여 3개월 간 통관금지 조치, 이후 재검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통관금지 해제(반입허용)

4. 향후 추진계획

- 보따리상 개인휴대반입품 등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식품 등의 안전관리 지속 추진
 - 휴대반입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로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안심 제고

관세청

관세청 특수통관과 박시원 사무관, T.042-481-7831

1. 과제내용

-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
 - 여행자 휴대품 반입 기준 엄격 적용 등 유해식품 반입 차단
 - 부적합 물품 및 우범여행자 집중 관리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축수산물 총량(40kg) 초과반입 방지를 위한 통관관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량·품목별 반입 기준 엄격 적용 ○ 휴대 반입 식품 안전성 검사 합격 여부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 ○ 휴대식품 빈번 반입 지역 여행자 휴대품 전량 X-ray검사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8.1.1일 면세범위 축소시행 조기 정착 및 반입 기준 초과시 전량 유치 등 통관 강화 조치 ○ 식약처 부적합 물품 통보 시 동일 제품 3개월 반입금지 조치 ○ 중국 위해, 연태 등 유해식품 반입지역 여행자 휴대품 전량 X-ray검사 시행

-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보따리상 농산물 면세범위 축소시행 조기 정착 및 통관관리 강화
 - '18.1.1일 면세범위 축소(50→40kg)시행하고 면세범위 엄격 적용 등 검사 강화를 통해 농산물의 국내 과다 반입을 차단
 - * 항만여행자 농산물 반입실적(톤,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) : ('17.11) 18,843 → ('18.11) 17,065 (전년동기대비 9.4%↓)
 - 휴대 반입 농산물 총량(40kg)·품목별(5kg 등) 반입 기준을 엄격 적용하고 초과 반입 시 전량 유치 등 검사 강화
- 보따리상 휴대 반입 물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강화
 - 식약처 식품안전성 검사 합격 여부 철저 확인 및 주2회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통보 시 동일제품 3개월 반입금지 실시
- 유해 식품 반입 차단을 위해 휴대품 검사 강화
 - 중국 위해, 연태 등 유해 식품 빈번 반입 지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전량 X-ray 검사 실시
- 면세한도 축소 시행에도 불구하고, 선사의 대형 선박 교체 등에 따라 보따리상수 증가 추세로 추후 농산물 반입량의 재 증가 우려
 - * 보따리상수(명) : ('15) 3,782 → ('16) 3,814 → ('17) 4,463 → ('18.11) 4,551

4. 향후 추진계획

- 보따리상 농산물 통관관리 강화 지속 시행
 - 면세범위 엄격 적용을 통한 농산물 과다 반입 방지
- 보따리상 휴대반입 물품 검사 및 농산물 식품안전관리 강화
 - 법규준수도 낮은 보따리상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및 부적합 식품에 대한 국내 유입 철저 차단

3-2-4	소규모 반입물품 관리
②	해외직구제품 등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박진아 사무관 T.043-719-6256

1. 과제내용

- 인터넷 등의 발달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소비·영유아 식품 등에 대한 구매·검사를 통해 유해우려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 인터넷사이트 판매제품 구매 검사 및 관리강화(연중) ○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 위해 해외직구식품 유입 차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기능개선·근육강화·다이어트 표방 제품 및 소비자 희망 제품 구매·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,300건의 검사(부적합 107건) - 식품안전나라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 검사희망제품 100건 구매·검사 - 식품안전나라 전용 창구를 통한 소비자 궁금증 실시간 해소 * 해외직구식품 질의응답방 운영(186건) ○ 관세청(인천세관)과 협업검사*를 통한 위해우려식품 적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선별검사 18,507건 중 9,608건 차단(12월) - 식약처-관세청간 포털사이트 연계를 통한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(218건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해외직구식품 구매·검사 건수(건)	1,300	1,300

3. 성과 및 한계

□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유입차단

- 해외위해정보 및 구매·검사 결과에 따라 위해우려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제품의 국내 통관금지 요청(관세청)

* 총 218건(위해정보 111건, 부적합제품 107건) 통관금지(관세청) 요청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해외직구식품 구매·검사 효율화

- 기 통관 금지 조치된 제품 중 원료변경 등 재출시 제품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품목*의 구매·검사('19.1월~)

* 우피유래 젤라틴 캡슐에서 식물성 유래 젤라틴 등으로 변경된 제품 및 과거('08~'11년)에 검사한 제품 중 오랜 기간이 지나 재평가가 필요한 제품

3-2-4	소규모 반입물품 관리
③	자가사용 위장 수입식품

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 윤주현, T.042-481-7835

1. 과제내용

- 건강기능식품 등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상용수입 단속 강화
 - 국제특송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배송지가 수입신고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, 특송업체가 배송지 변경정보를 세관장에 제출하도록 의무화
 - 배송지 변경정보를 분석하여 수입식품 검사 회피, 세금 탈루 등을 위해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상용수입을 차단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송 수입신고 배송지 정보제출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명의 수입신고건을 대상으로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가 다른 경우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시행 지침 수립(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방법 및 세관 운영방안 시달 - 시스템 개선 등 준비기간 고려 시범운영(7~9월) 후 본 시행(10월) ○ 특송업체 대상 목록통관 배송지 정보 제출 자료 분석(분기별)

-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특송화물 통해 반입되는 위해물품 함유 불법식품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통관대책 추진

○ 특송화물로 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한 '화물 반입 예정 정보 분석'으로 우범화물 선별집중 검사*

* 우범화물 선별검사 : 2,731건 검사, 1,814건 적발(적발률 66.4%)

- 특송물품 목록통관 배송지 정보 분석 등 사후 심사 강화를 통해 불법 식품의 상용 물품으로 분산반입, 품명 허위 신고 등 적발

* 배송지 정보분석 총 116개社(116,336건) 실시, 배송지 과태료 14개社(68건) 부과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배송지 정보제출 대상 수입신고건 확대에 따른 정보분석 본격 시행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관리 강화

○ 수입신고 건 배송지 정보제출('18년 4분기)에 따라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는 특송업체 대상 분산반입 등 불법행위 여부 집중 점검

3-3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

3-3-1 식품 표시·광고 체계 개선

① 영업자 실증(實證) 및 자율심의 제도 도입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대훈 연구관, T.043-719-2853

1. 과제내용

- 식품 표시·광고 영업자 실증(實證) 및 민간자율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(19)
 - (영업자 실증제도) 영업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식품 표시·광고를 하도록 하고, 실증자료가 없는 표시·광고는 금지
 - (자율심의제도) 표시·광고 자율심의기구 설립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협회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·광고 심의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정(3월)에 따른 하위 법령 마련(7월, 입법예고)	○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(10월) * 영업자 및 관련 부처 의견 수렴(5~9월)

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(10~12월)

- 시행령·시행규칙 입법추진 원칙 마련 및 적용
 - * (상향 입법) 「식품위생법」 등 각 법률의 시행규칙, 고시로 운영 중인 표시·광고 관련 사항을 이 법률의 시행령,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
 - * (현행제도 보완) 표시기준 이외에 각 법률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포함된 표시·광고 내용을 모으고, 일부 내용은 개선·보완 추진
 - * (신설제도 마련) 유사입법례 등의 조사·분석을 토대로 입법안 마련
- 법률에 위임된 자율심의기구, 실증제도, 소비자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시행령(총16조), 시행규칙(총17조) 마련
- 합리적이고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·부처 협의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, 예산 및 인력 확보
 - * 부처 내 관련 부서 및 농림축산식품부,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조회(5~6월, 9월)
 - * 업계·학계·소비자단체 등 대상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설명회(3회, 5~8월)
 - * 소비자 교육·홍보를 위한 예산 확보(참여예산, 3억 확보) 및 하위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(5급, 1명 확보)
-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(안)에 대한 영업자·공무원 교육(16회, 약3,600명) 및 언론 홍보(10월)

영업자·공무원 교육(6, 7, 8월)			언론홍보(10월)
			

4. 향후 추진계획

-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(19.3월)
 - 실증제도, 자율심의기구 제도, 소비자 교육·홍보 등 시행

3-3-①	식품 표시·광고 체계 개선
②	식품 표시 전달력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대훈 연구관 T.043-719-2853

1. 과제내용

식품 표시 전달력 강화

- 식품표시 글자크기 확대 통일(8 → 10pt) 시행('18.1.1~)
- 식품과 축산물의 상이한 표시규정을 통합,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
 - 질소가스 충전 시 표시, 방사선조사처리 식품 표시방법 등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개정 고시 (4월)	○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개정 고시 (4월)
○ 「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고시(11월)	* 소비자 안전 강화,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, 영업자 규제 개선
	○ 「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고시(12월)
	*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과학적·합리적 표시기준 개정 건수(건)	15	32

3. 성과 및 한계

-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, 영업자 규제 개선을 위한 「식품 등의 표시기준」 개정 고시(4월)
 - 알레르기 표시 대상 확대(21종→22종, 잣 추가) 및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한 액체질소 등 주의표시 확대로 소비자 안전 강화
 - 식품 포장지의 사진과 실제 내용물이 다른 경우 연출 이미지에 “조리예” 표시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
 - 단일 원재료로 제조·가공한 식품의 ‘제품명’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 알레르기 표시생략 등 영업자 규제 개선
 - * 알레르기 표시대상 생략가능 제품(예시) : 자숙대두 100%, 볶은땅콩 100%
-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전부개정고시 고시(12월)
 -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과 「축산물의 표시기준」에 분산된 표시규정을 통합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일관된 기준 제공

4. 향후 추진계획

- 영업자,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선 추진
 - 소비자건의, 규제개선 건의 내용 검토 및 발굴

3-3-2	식품안전정보의 민간 확산
①	민간 플랫폼 활용 식품안전정보 전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황인영 연구관 T.043-719-4052

1. 과제내용

-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식품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식품안전 신뢰도 제고

* 네이버 플레이스 등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국내 맛집정보 제공 포털사이트를 통한 식품안전정보 제공(5월)	○ '네이버플레이스'를 통한 식품안전 정보 대국민 연계·제공(5월) * 음식점 인허가 및 행정처분 정보
○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확대(9월)	○ '우버이츠, 네이버주문하기' 등을 통한 위생정보 추가 연계 확대(9월) * 음식점 인허가 및 행정처분 정보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민간플랫폼 연계 건수(건)	3	3

3. 성과 및 한계

- 배달앱, 맛집정보 제공 사이트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식품안전 정보(인허가, 행정처분 정보 등) 제공으로 대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

* ('17) 7개(배달앱, 네이버, 가전3사) → ('18) 10개(맛집 정보제공 사이트 등)

- 식품안전정보 연계 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인허가 정보로 매칭하고 있으나, 현장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연계에 어려움 발생

4. 향후 추진계획

- 맛집정보 제공사이트 등 대국민 접점에서 맞춤형 식품안전정보 제공 확대

* ('18) 배달의 민족, 배달통·요기요 등 10개 → ('19) 카카오 주문하기, 망고프레이트 등 13개

3-3-3	식품의 영양·위해 정보제공 확대
①	알레르기·열량 등 국민 관심분야 정보제공 확충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대훈 연구관 T.043-719-2853
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이성규 사무관 T.043-719-4056
 위해정보과 박성국 연구관 T.043-719-1762

1. 과제내용

-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제공 확대 및 재평가
 -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 확대(21→22종), 식생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물질 조사 및 기존물질 재평가
- 통합망에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를 입력하면 고열량·저영양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축
- 국민 관심이 높은 해외 위해식품 관련 정보를 연령대별로 분석·제공하는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(다모아) 운영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확대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(4월)	○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개정 고시(4월, 알레르기 유발물질 '잿' 추가)
○ '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조사 및 재평가' 연구사업 실시(5~12월)	○ '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조사 및 재평가' 연구사업 완료(5~12월)
○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고열량·저영양 여부 확인기능 구축(11월)	○ 고열량·저영양 식품 자동 판별 체계 구축(10월) * 품목제조보고 민원 편의성 제고
○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를 통한 정보이용·활용성 강화	○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를 통한 정보이용·활용성 강화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, 임산부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(연중) - 다모아 사이트 개설에 따른 위해 정보제공 홍보(2월) -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이트 개선(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, 임산부, 산업체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11,392건 제공 - 식품산업협회 등에 다모아 사이트 홍보(2월), 다모아 홍보 인포그래픽 소비자단체 등 17개 기관 배포(5월) 및 SNS 송출(5, 8, 11월) - 전용사이트 활용성 개선(5월) *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간 탭 추가 등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과학적·합리적 표시기준 개정 건수(건)	2	2
○ 식품위해정보 조치율(%)	82.0	85.6

3. 성과 및 한계

□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*를 위한 「식품 등의 표시기준」 개정 고시(4월)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조사 및 재평가 연구사업** 완료(12월)

* (기존) 식품 알레르기 물질 21종 → (개선) 22종(‘젓’ 추가)

** 식생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임상조사 및 현행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(22종) 재평가

□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* 정보 입력을 통한 고열량·저영양 자동 판별 기능 구축

* 영양성분 : 식품유형, 제품명, 열량, 당, 나트륨, 단백질, 포화지방 등

□ 식품 위해정보 전용사이트(다모아)를 통해 어린이, 임산부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*으로 활용성·편의성 제고

* 유아 119건, 어린이 210건, 임산부 370건, 산업체 10,432건 등 11,392건 제공

4. 향후 추진계획

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 대국민 홍보

* 서울정부청사 영상 송출 및 SNS, 카드뉴스, 포스터 등 홍보

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배포를 통해 고열량·저영양 자동 판별기능 사용방법 안내

제외국 식품 위해정보 및 식중독 예방 등 생활밀착형 정보 지속적 제공

* 식의약위해정보 전용사이트(다모아) / <http://mfds.go.kr/riskinfo.do>

3-3-3	식품의 영양·위해 정보제공 확대
②	빅데이터 기반 대국민 농식품 영양 정보제공

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최용민 연구사 T.063-238-3561

1. 과제내용

-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영양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
 - 범부처 성분벨트 구축을 통한 국가 농축수산식품의 영양·기능성 정보 통합 DB(공공데이터명 : 국가표준식품성분 DB) 구축 진행
 - * ‘국가표준식품성분표’ 발간 및 대국민 공개(5년 주기, 근거:식품산업진흥법)

< 보유 DB 현황 >

- 국가표준식품성분 DB : 식품 3,000종, 성분 43종 *제9개정('16)
 - * DB 개방 :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,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(koreanfood.rda.go.kr)
- 기능성 성분 DB : 플라보노이드(286품목, '17) ⇒ 페놀화합물(308 품목, '18)
 - * DB 공개 :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(koreanfood.rda.go.kr)
- 맞춤형영양정보 : 생애주기별(어린이, 성인, 노인) 1인 1회 섭취분량 기준 DB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영양정보 다양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식품 확장, 영양정보 세분화 ○ DB 갱신주기 단축 및 정보 접근성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영양정보 다양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DB 확대 구축('18) : 식품 200점 - 식품 소비단위 정보 DB 구축('18) : 과채류 200점 ○ DB 갱신주기 단축 및 정보 접근성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갱신주기 : 5년→1년 - 제공 채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공데이터포털,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공공데이터 제공수(건)	100	2,713

- * 공공데이터 제공수 : 공공데이터포털 및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‘국가표준식품 성분 DB’ 제공건수, '16년(45건)과 '17년 (160건)실적 평균 유지
- * 기존 공공데이터신청서 요청→검토→제공을 공문으로 처리하였으나, 2018년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

3. 성과 및 한계

□ 대국민 대상 신뢰성 있는 식품 영양·기능성 정보 제공

- (식품영양정보 DB 구축) 영양정보 확장 및 국민 체감 실용성 증대
 - 영양성분 분석항목확대(43→105종) 및 식품 소비단위 부피/중량 DB 구축
 - * ‘국가표준식품성분 DB’ 구축량은 선진국 대비 38% 수준, 20년 이상의 노후 데이터 19%
- (정보제공방식 개선) DB 제공 채널 다양화로 다분야 활용확대
 - (기존) 공공데이터포털, 1주 소요 → (개선)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, 즉시 다운로드
 - * 공공데이터 제공 2,713건('18, '17년 대비 960% 증가)
 - 국가표준식품성분 DB 데이터 공개주기 단축 : 5년 → 1년
 - * 원두커피, 한우 등 식품 68점 신규데이터 추가(19년 초, 농식품종합정보 시스템 탑재 예정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영양정보 DB 확대 구축 및 서비스 **데이터 양은 선진국 대비 38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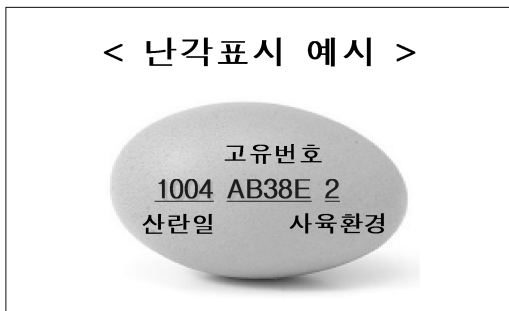
- 분석품목 확대 : ('18) 식품 200점 → ('19) 400점
- 알기쉬운 영양정보 대국민 서비스('21) : 한국인 다소비식품 100종
 - * (목표) 100g 중 함량 → 유통단위 및 상용섭취 기준 적용(예: 사과 1개의 비타민 C 함량)

3-3-4	농축수산물의 생산·제조 정보제공 확대
①	축산물 생산정보 제공 확충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대훈 연구관 T.043-719-2853
 농축수산물정책과 설찬구 사무관 T.043-719-3204

1. 과제내용

- 산란일자·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및 ‘생산자명 등’(종전 4가지) 대신에 ‘생산자 고유번호’로 난각표시 방법 개선
 -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·산란일자·사육환경 등 미표시(1차 경고 → 영업정지 15일) 및 허위표시(1차 경고 → 영업소 폐쇄) 행정처분 강화



< 난각표시 내용 >

- 산란일 : 산란월일
- 고유번호 : 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시 부여된 5자리 고유번호
- 사육환경 : 방사(1), 축사내 평사(2), 개선된 케이지(3), 기존 케이지(4)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난각표시 개선을 위한 「축산물의 표시기준」 개정 고시(2월) ○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축산물의 표시기준」 개정 고시(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난각에 산란일자, 생산자 고유번호,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토록 개선 * 시행일 : 생산자 고유번호('18.4월), 사육환경번호('18.8월), 산란일자('19.2월) ○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 완료(4월, 개정·시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난각 표시사항(산란일, 고유번호, 사육환경) 위·변조 : 영업소 폐쇄 - 산란일, 고유번호 미표시 : 영업정지 15일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산란일자 표시제도 도입	기준개정	기준개정(2월)

3. 성과 및 한계

- 계란의 산란일자·사육환경 등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, 난각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로 이행강제력 제고
- 난각 표시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지속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난각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실시('19년)

3-3-4	농축수산물의 생산·제조 정보제공 확대
②	수산물 생산·제조 정보제공 확대
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류선행 서기관, T.044-200-5447

1. 과제내용

- 날것으로 소비하는 수산물 중 소비량이 많고 위생·안전 문제발생 우려가 큰 수산물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
- 김치류와 절임류 등 가공품에 대한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대상 품목 발굴 -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후보군 중 우선순위 설정 ○ 김치류와 절임류 등 가공품에 대한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특례 신설을 위한 「원산지 표시법」 시행령 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추가를 위한 「원산지 표시법」 시행령 개정안 방침 완료('18.12.26) -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우선순위 설정 완료('18.11.19) ○ 김치류와 절임류 등 가공품에 대한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특례 신설을 위한 「원산지 표시법」 시행령 개정('18.12.11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(품목)	12	12

3. 성과 및 한계

□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추가

- 대상품목 추가를 위한 「원산지 표시법」 시행령 개정안 방침 완료
 - 기존 12개 품목에서 3개 품목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마련
 - * (기존)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 → (추가) 다랑어, 아귀, 주꾸미

□ 김치류와 절임류 등 가공품에 대한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

- 김치류·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된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위한 「원산지 표시법」 시행령 개정 완료
 - * 김치류·절임류에 사용된 원료 중 고춧가루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추가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

-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('19.1~3월),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('19.3~5월)
-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('19.6월),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('19.7월)

3-3-4	농축수산물의 생산·제조 정보제공 확대
③	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 전면 시행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대훈 연구관 T.043-719-2853

1. 과제내용

-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 전면 시행 및 홍보
 - 식품 조리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(주걱 등)에 식품용 기구 표시를 하도록 하여, 식품 조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
 - 영업자, 공무원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(5회 이상/연)하고, TV 광고 등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생활 속 확산 유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 홍보(연중)	○ 오송역(1월), 아파트 및 대형마트(4월), TV 동영상 송출(5월, JTBC 등 4개), 일간지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홍보*(연중)
○ 식품 등의 표시기준 설명회(10월)	○ 식품 등의 표시기준 설명회(9월) - 총 5회(서울, 대전, 부산, 광주, 대구)

-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

4. 향후 추진계획

-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 홍보 지속 실시('19년)

4-1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

4-1-① 나트륨·당류 섭취 저감화

① 주요 저감대상 집중 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윤은경 연구관 T.043-719-2262
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 허수정 연구관 T.043-719-4403

1. 과제내용

- 식품으로 인한 나트륨·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공급단계 저감 추진
 - 가공식품·외식·급식에서의 분야별 나트륨·당류 저감화 지원 확대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공식품, 외식, 급식 등의 나트륨·당류 저감화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랜차이즈 대상 당류 저감 실천 확대(연중) - 영화관 대상 영양성분 함량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 마련(12월) - 가정간편식의 나트륨 저감 기술 가이드 마련(12월) - 외식·급식의 나트륨 저감 사업 지속 확대 운영(연중) ○ 당류저감 사업정책 효과 분석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공식품, 외식, 급식 등의 나트륨·당류 저감화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랜차이즈 대상 당류 저감 실천 매장 확대 운영(9~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커피, 햄버거, 피자 유형 실천가이드 제공(11월, 188개소) - 팝콘 등 영화관 조리식품의 자율 영양표시 가이드 마련(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영양성분 함량 규격화 및 영양표시 가독성 향상 - 즉석조리식품(국·탕)의 나트륨 저감 기술가이드 마련(12월) -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지속 운영(연중) ○ 당류 저감 정책의 비용-효과 평가 등 과학적 근거 마련 연구(3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나트륨 저감 참여 음식점·급식소(개소)	600	738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가공식품, 프랜차이즈의 당·나트륨 저감 체계 구축
 - 가정간편식 소비 증가에 따른 대형마트, 편의점 등 유통업체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 기술 가이드 제시
 - (1단계) 소금 및 (2단계) 나트륨 대체소재 적용한 저감 가능성 제시
 - * 대상 : ('17) 즉석섭취식품(도시락 등), ('18) 즉석조리식품(국, 탕)
 -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당류 저감 실천가이드 제시 및 현장적용 확대
 - 당류 저감 정책에 대한 비용·편익 분석 등 과학적 근거 마련
- (한계) 메뉴변경, 염도관리 부담 등으로 음식점·급식소의 나트륨 저감 신규 참여 및 운영 유지가 어려워, 확대 한계
 - 매출 부진 불안감, 정기적 염도관리 등 추가 업무부담 및 서류 기록 등 운영관리지침의 지속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

4. 향후 추진계획

- 음식점 및 급식소 나트륨 저감 매장 운영 관리 체계 개선 추진
 -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업체 유형별 맞춤형 실천 위주로 지침을 전면 개정('19~)
 - * (주요 개정방향) 나트륨 함량 기준(1,300mg) 대신 저감을 반영, 현실적 염도 관리 및 실천방법 도입, 지역 자체 운영사업과 연계 등
 - * (1차) 개정안 마련 및 실무회의 → (2차) 전문가 회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 → (3차) 개정(안) 확정 및 시행
- 가공식품, 외식프랜차이즈 등 분야별 당·나트륨 저감 지속 추진('19~)
 - 가정간편식 유형별 나트륨 저감 기술 가이드 마련 및 커피 프랜차이즈 중심 당류 저감 실천 운동 및 자율영양표시 확대

4-1-①	나트륨·당류 섭취 저감화
②	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개선

식품안전표시인증과 신영희 사무관, T.043-719-2187

1. 과제내용

□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개선

-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타제품 대비 비율 표시에서 1일 나트륨 권장량(2,000mg) 대비 비율로 표시 개선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개선 용역 사업 추진(~7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관련 실태 조사 등 현행 제도 진단 - 소비자 친화적 디자인을 반영한 기준 개선안 마련 * 소비자 대상 선호도 조사를 통해 도안 개발 및 개선(안) 제시 ○ 비교 표시 세부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추진(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디자인 확정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고시 개정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개선 용역사업 추진(1~8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2,000mg 기준 대비 단계 구분 및 함량 표시 - 소금통형, 반원형, 원형 등 다양한 디자인 및 표시방법 검토 * 나트륨 함량표시 세부방법 및 디자인 선호도 조사(8월, 1,052명 대상, (사)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) ○ 「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」 개정안 행정예고(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안 조정 (9~12월) - 1일 나트륨 권장량(2,000mg)을 기준으로 8개 구간으로 구분하고, 해당 구간은 황색 또는 적색(2000mg 이하 또는 초과)으로 표시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인지도(%)	7.0	35.5

3. 성과 및 한계

-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안 마련
 -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2000mg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섭취 기준량과 비교가 용이하며,
 -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 기반 마련
 -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사업 결과와 산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이해관계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

4. 향후 추진계획

- 「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」 최종 개정 고시(19.3월)
 - 국·내외 의견수렴 결과 반영 후 최종 개정 고시

4-1-①	나트륨·당류 섭취 저감화
③	범국민 참여 행사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반경녀 연구관 T.043-719-2279

1. 과제내용

- 나트륨·당류 저감 국민 인식 공감대 및 자율적인 실천 확산을 위한 범국민 참여 행사 개최 및 국민 참여프로그램 등 운영 확대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트륨·당류 줄이기 콘텐츠 공모전 개최(3~10월) ○ 당류 줄이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 배포 및 교육(5월~) ○ 나트륨·당류 줄이기 범국민 참여 행사 개최(5~9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 포스터(3~4월, 1,320점 응모), 당류 저감 UCC(5~8월, 60점 응모), 나트륨·당류 저감 캘리그라피(7~9월, 614점 응모) 공모전 개최 ○ 당류 줄이기 실습 및 카드교구 제작·배포(5월, 6천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만캠프 연계 당류 줄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(7~8월, 7회) ○ 나트륨·당류 줄이기 범국민 참여 행사 개최(5월) 및 지역 캠페인 운영(7~11월, 11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소년박람회 식품영양·안전 홍보관 운영(5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범국민 참여행사 개최	개최	개최(13회)

3. 성과 및 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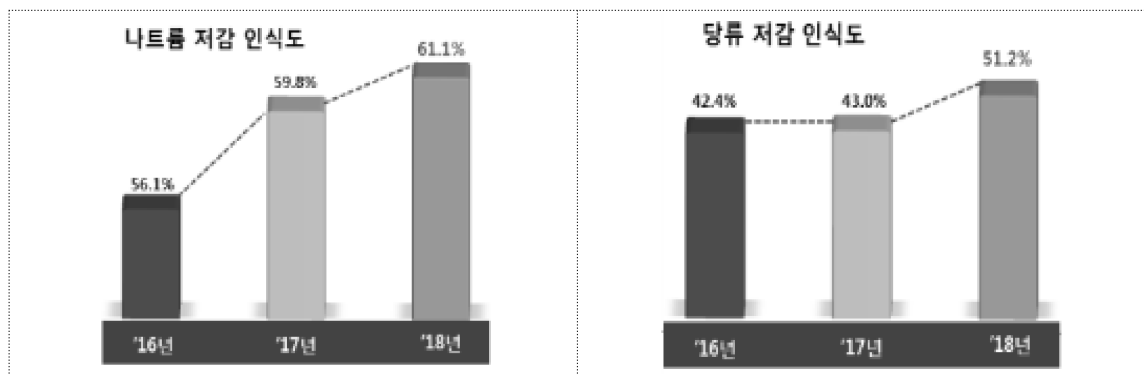
□ 나트륨·당류 줄이기 범국민 참여행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 식생활 확산 및 저감 인식도 개선

○ 나트륨·당류 저감 소비자 인식도 지속 증가 추세

- 설문조사 결과, 나트륨·당류 적정 섭취량 인지, 덜짜게 덜달게 먹기 실천 노력 등 소비자 인식도 매년 상승

* 나트륨 저감 인식도(%) : ('16) 56.1→('17) 59.8→('18) 61.1 (1.3%p 증가)

* 당류 저감 인식도(%) : ('16) 42.4→('17) 43.0%→('18) 51.2% (8.2% 증가)

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대상별·테마별 나트륨·당류 줄이기 국민 참여 행사 운영

○ 범국민 참여행사 개최(5월) 및 지역 캠페인 수행(8월~)

○ 나트륨·당류 줄이기 콘텐츠 공모전(4월~) 및 요리경연대회(9월) 개최

4-1-①	나트륨·당류 섭취 저감화
④	학교 교육 강화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, T.044-203-6543

1. 과제내용

나트륨·당류 저감 실천 환경 개선

-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나트륨 저감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청 운영평가 시 반영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지침’ 시달(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, 영양·식생활교육 강화, 염분·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등 영양관리 강화 등 ○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수립(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반영·수립하고 학교급식 운영 평가 시 학교별 계획 수립·이행 여부 확인(9월~) ○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(3월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지침’ 시행(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, 영양·식생활교육 강화, 염분·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등 영양관리 강화(2018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, '18.1.16) ○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수립(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반영 및 이행 -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계획 수립·이행 여부 확인토록 안내 (2018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, '18.1.16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'NEIS 급식시스템'의 나트륨 함유량 산출 기능 개발('18.하)	○ 'NEIS 급식시스템'의 나트륨 함유량 산출 기능 개발('18.12) - 식재료 공통코드를 구축하고 영양 정보에 나트륨을 등록하여 식단 표시
○ 학교 나트륨 저감화 추진실적 점검(12월)	○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 - 나트륨 저감화 시행 학교수(11,655개교, 98.8%) - 당류 저감화 운영계획 수립 학교수(11,304개교, 95.9%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나트륨 저감화 시행 학교수*(%)	96	98.8
○ 당류 저감화 운영계획 수립 학교수**(%)	94	95.9

*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학교단위 계획 수립 하에 전년도 대비 사용량을 줄인 학교수를 기재

**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당류 저감화 계획을 반영한 학교수를 기재

3. 성과 및 한계

□ 급식종사자 교육 활성화 및 교육 강사 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나트륨·당류 저감화 노력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나트륨·당류 섭취 실태 및 저감화 실천도 조사 등을 통해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지속 추진(계속)

4-1-2	가정간편식 위생·영양관리 강화
①	성분 표시 및 품질·유통 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윤상현 연구관 043-719-2414

1. 과제내용

□ 가정간편식의 위생관리 기준 마련

-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제품은 다양한 신선재료가 사용되고 반조리제품, 즉석섭취식품 등이 많아 위생에 민감
- 가정간편식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조·가공, 조리기준 등 개선

□ 냉동식품의 택배배송시 보존·유통기준 준수 방안 마련

- 냉동식품의 택배배송시, -18℃ 이하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녹아 있는 부분이 없으면 보존·유통 가능(고시, '17.12)
- 개정 보존·유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품별 냉동상태 유지를 위한 포장 재료, 방법, 취급요령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의점 도시락 등 즉석섭취식품의 기준·규격 개선 - 도시락 제조업소 위생관리 포인트 정비(4월) -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(5월) - 가정간편식 기준규격 개정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의점 도시락 등 즉석섭취식품의 기준·규격 개선 - 업계 현장방문(4회/1, 2, 3, 8월) 및 관련자료 수집 - 개선(안) 업계 의견수렴(6, 9월) 및 전문가 검토(9월) - 가정간편식 기준·규격 신설(11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락 제조 시 위생관리 가이드 배포(12월) ○ 냉동식품의 택배배송 가이드라인 발간(10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락 제조 시 위생관리 가이드 배포(10월) ○ 냉동식품의 포장 및 취급방법 가이드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(6~10월), 전문가 검토(10월) 및 가이드라인 발간(12월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기준·규격 고시(회)	1	1
○ 가이드라인 발간(회)	1	2

3. 성과 및 한계

- 대표적인 가정간편식인 도시락의 제조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락 제조·가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
- 안전을 담보한 합리적인 보존·유통기준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,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

4. 향후 추진계획

- 냉동식품의 택배배송 가이드라인 홍보('19.5)

* 기온상승으로 냉동식품의 택배배송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는 시기에 배포하여 가이드라인의 활용성 증대

4-1-3	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①	(어린이) 식생활안전지수 조사·발표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상록 사무관, T.043-719-2257

1. 과제내용

-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」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수행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 환경개선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
 -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인구규모 및 생활여건에 따른 식생활 안전·영양수준 평가 실시하고 식생활 개선 유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결과 심의(2월) 및 공표(3월) ○ 식생활 안전·영양수준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(5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·도 합동 교육 등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수준 개선 유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 결과 공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종 결과 산출 및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(2, 3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어린이 식생활 안전·영양수준 공표 방식 변경(80점 이상 우수지자체 공표) - 지자체 평가결과 통보·공포(3월) 및 나라통계 시스템 등재(4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결과 : 평균 73.27점('14년 대비 5.73 상승) ○ 권역별 우수지자체 포상(5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8개 지자체 포상(최우수 3, 우수 3, 장려 3) 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이해 등 관계 법령 교육(3, 9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7개 시·도, 236명 참여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(점)	70	73.3

3. 성과 및 한계

-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수준을 확인·평가
 - 지자체의 노력 및 환경수준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·평가하고, 결과물인 「식생활 안전지수」 공표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에 환류
 - * 전국 228개 지자체(대도시 69, 중소도시 77, 농어촌 82) 구분하여 평가, '17년 안전지수 평균 73.27점('14년 67.54점 대비 5.73점 상승)
 - ** 어린이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정책의 수행정도, 인지·실천수준,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공급 환경 개선정도

4. 향후 추진계획

- '20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·평가 실시('20년 2월~)
- '20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·평가 결과 공표('21년 3월)

4-1-3	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②	(어린이)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규호 사무관 T.043-719-2275

1. 과제내용

-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모든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·영양관리 지원

* 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지원율 : ('18) 60% → ('20) 100%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으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원 강화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양사 등 전문인력 일자리 확대 ○ 효율적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율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 급식시설 34,292개소 및 어린이 124만명 급식관리 지원 확대 *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(5개소) 및 사업규모(43개소) 확대 - 영양사, 위생사 등 전문인력 일자리 124개 창출(1,637명) ○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 관리 위하여 중앙관리지원센터 운영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연령별 맞춤형 식단 11종 보급(132건), 신규 레시피 보급(12건), 어린이 대상 교육 자료집(1건), 교사·부모 대상 교육자료(9건), 가정통신문(12건) 개발 ○ 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17개 지역 거점센터 지정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거점센터 정기 협의회(4회/3, 5, 9, 11월) ○ 지역센터 운영 성과 측정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(9~12월, 215개소)

추진계획	추진실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정책 설명회 개최(1월, 185명 참석) ○ 직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(4월, 955명 수료) ○ 부모 현장참관 프로그램 운영(1,141회, 10,678명 참여) ○ '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개정(12월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 지원율(%)	60	64

3. 성과 및 한계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급식관리 지원 수혜율 확대

- '17년 대비 지원 어린이 7만명(124만명), 급식소 2,199개소 증가(34,292개소)
- * 급식관리 시설 지원율 : ('17) 59(32,093/54,469) → ('18) 64%(34,292/53,665개소)

영양사, 위생사 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

- * 일자리 창출 : ('17) 1,513 → ('18) 1,637명

4. 향후 추진계획

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(7개소) 및 사업규모 확대(29개소)를 통한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을 확대 추진

4-1-③	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③	(어린이) 아동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
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배철희 사무관, 윤미라 주무관 T.044-202-2821, 2835

1. 과제내용

- 생활터 중심의 아동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
 -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량 증진 도모를 통한 비만예방관리 실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동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 확대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설명회 및 지도자 교육(2~3월) 실시 - 교육매체 추가개발 등 사업운영 지원(연중) ○ 성과평가 및 결과 홍보를 통한 사업 확대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과평가 실시(4월/11월), 일괄분석 및 지자체 활용 지원(9~12월) - 사업 결과보고 및 설명회 개최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동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 확대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권역별 사업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(2월, 총 4회) - 프로그램 수행강사 역량교육 실시(3~4월, 총 6회) - 교육매체 고도화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영양 12차시, 신체활동 32차시 → 영양 16차시, 신체활동 64차시 - 현장방문 모니터링(6회),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(2회) 등 사업운영지원 ○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확대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효과평가 결과분석(9~12월) 및 지자체 환류(12월) - 결과보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(12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프로그램 참여 아동 비만율	유지	유지

* 프로그램 전·후 참여 아동 체중 및 신장 실측 비교

3. 성과 및 한계

□ 아동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전국 확대 운영

- ('17년) 23개 지자체, 61개 초교 → ('18년) 93개 지자체, 305개 초교 및 32개 지역아동센터

□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비만율 변화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

- 사업 대표 성과지표인 ‘아동의 비만율 유지’ 목표 달성
 - 과체중·비만 아동비율 1.8% 감소(사전 20.3% → 사후 18.5%)
- 영양·식생활 지식 및 행태 개선, 신체활동량 증가
- 학부모 및 사업관계자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83.6% 달성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사업 운영기간, 대상 등 확대

- 프로그램 운영기간 확대(3개월 → 1학기)를 통한 효과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
 - 운영기간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고도화 추진
 - * (기존) 영양16차시, 신체활동 64차시 → (변경) 영양 24차시, 신체활동 96차시
-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까지 사업대상으로 포함*
 - *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('18.7월) 내 반영(추진과제 1-①-④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에 대한 비만예방관리 강화)

4-1-③	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④	(어린이)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최종순 사무관, T.044-201-2254

1. 과제내용

-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
 - 아동·청소년기에 다양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유도하고, 국산과일의 안정적 소비와 저변 확대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과일간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준비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제정(2월) -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선정(3월) -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수요조사 실시(지자체, 3~4월) - 과일간식 가공업체 공급계약 체결 및 공급(지자체, 4월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과일간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제정(2.5) -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선정(3.2) -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수요조사 실시(1차 3월, 2차 9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과일간식 수요조사 결과 5,363개교 228,225명 신청 - 과일간식 가공업체 공급계약 체결 및 공급(지자체, 4~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시작(5.4, 충북 영동), 10월 228개 전 지자체 공급(5,337개교, 23만명) * 과일간식 가공업체 등 공급현장 위생·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추진(8.27~9.6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학교 과일간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(12월)	○ 학교 과일간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(9.18)

□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228개 지자체, 5,342개교 약 23만명에게 과일간식 제공

- 1인당 150g의 조각과일을 컵과일 등 형태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에 따른 시설에서 가공·공급(학생 1인당 주 1회 이상, 연간 30회)
- 빵, 핫도그 등의 간식을 과일로 대체하여 어린이 식습관 개선 기여
- * 전국 과일간식 사업 참여 학교, 학생,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96.0% 긍정적 평가*, 학생 90.2% 지속적인 공급 필요 응답('18.12월)

□ (한계) 신선편이 형태로 과일간식이 공급되어 위생·안전 우려, 1회용 컵용기 사용에 따른 환경부담 발생 우려됨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과일간식의 공급안전성, 환경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여 지침 보완

- 과일간식 공급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체로 제한하며 가공업체 현장 점검 추진
- 학교 내 과일간식 수령자를 지정하여 배송 직후 냉장보관(학교 내 과일간식 수령자 미지정시 공급 중단)
- 과일간식을 신선편이 형태 또는 원물형태로도 공급가능하게 열어 두고, 장기적으로 친환경용기 사용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

4-1-3

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
⑤

(청소년) 학교 내 고카페인 판매 금지 등 영양·안전 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상록 사무관, T.043-719-2257
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반경녀 연구관, T.043-719-2279

1. 과제내용

- 청소년 대상 식품안전·영양교육 교재 지원
 - 카페인, 식중독 예방 교육 등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중·고등학생용 식생활 교육 교재 지원
- 당류 줄이기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
 -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의 적정 섭취 유도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당류 줄이기 영양이론, 조리실습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
-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
 - 어린이들을 카페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모든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청소년 식품안전·영양교육 지원 (연중)	○ 청소년 식품안전·영양교육 지원 - 식품안전·영양교육 계획 수립(1월) - 중·고등학교 대상 수요조사(2월) 및 사업 설명회 개최(2월) - 교재·교구 등 교육콘텐츠 배포 및 교육운영(3월~) - 영양(교)사 대상 전문과정 운영(8~9월, 125명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 대상 당류 줄이기 체험 프로그램 시범운영(7월~) ○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추진(법령개정, 3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안전·영양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(11월) ○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, 당류 줄이기 UCC 공모전 등 참여 유도(8월~11월, 12개교, 1,506명) ○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(3월)·시행(9월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식품안전·영양교육 지원	지원	지원
○ 법률 개정*	개정	개정

*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

3. 성과 및 한계

-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품선택 유도를 위한 식생활 교육 활성화로 어린이·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
-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카페인 과잉섭취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 유도 및 사전예방 효과
- 어린이의 건전한 식품구매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 모니터링 및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당·나트륨 저감 집중교육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2019년도 중·고등학교 대상 식품안전·영양교육 지원
 - * (주제) 카페인, 식품첨가물, 식중독, 영양과 식사, 비만과 식이장애, 영양표시
-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·점검 강화
 - * 전담관리원 교육 강화 및 홍보, 지도·점검(월1회)

4-1-3	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⑥	(청소년)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등 강화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, T.044-203-6543

1. 과제내용

- 학교급식에 대한 영양관리기준 등 강화
 -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 및 체위 변화를 고려하여,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개정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발 정책 연구(~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현황과 국제적 동향을 조사·고찰하여 새로운 영양관리기준 개발 방향 설정 및 기준(안) 개발·제시 ○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(안)에 대한 의견수렴(~6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(안)에 대한 현장전문가 및 관련학과 교수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자문회의 개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발’ 연구(‘17.12.15~’18.2.1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국내 및 국외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(안) 개발 완료 * 연구책임자 : 서울대학교 윤지현 ○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발 결과 및 활용 계획 보고(‘18.5.2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(안)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차원으로 시범적용 사업 추진 ○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(안) 시범적용 계획 수립(‘18.5.2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5교 대상 시범적용 사업 추진 및 학교급식 연수회(‘18.7.12~7.12)를 통해 관련 연구결과 등 공유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개정 계획 수립(7월) 및 개정 추진(~9월)	○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(안) 시범 적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 변경('18.7.24) ○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(안) 시범 적용('18.11~12월) 및 적용 타당성 평가 실시(~'19.1월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학교급식법 시행규칙* 개정 * 별표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	개정완료	개정 추진중

3. 성과 및 한계

-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개발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(안)의 학교현장 전면 적용에 앞서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,
-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시범적용 사업을 추가하여 현장에 최적화된 기준안으로 보완하는 과정을 추진 중이며, 추후 동 결과에 근거하여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

4. 향후 추진계획

-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개정 완료(~'19년)

4-1-3

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
⑦

(성인) 개인별 영양섭취관리 지원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윤은경 연구관 T.043-719-2262
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 허수정 연구관 T.043-719-4403)

1. 과제내용

식품 영양성분DB 내실화를 통해 개인 영양관리 앱* 등에 활용 확대

* 칼로리코디(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)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양성분DB 현행화 및 시스템 안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공식품 영양성분 함량 등 자료 업데이트(연중) - 시스템 안정화 추진(연중) - 민간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개선 방안 마련(11월) ○ 칼로리코디를 통한 적색·가공육 섭취량 산출 서비스 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WHO 및 국내 섭취가이드 발표 시기 반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양성분 DB 현행화 및 시스템 안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양성분DB 중 당류함량 최신정보 반영(3월, 가공식품 10,749건) - 유지보수사업 및 보안취약점 개선 등 시스템 안정화(연중) - 영양성분DB 정보공유가이드 마련 및 정보서비스 보강(1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DB 다운로드 방법 및 활용 주의사항 등 ○ 칼로리코디를 통한 적색·가공육 섭취량 산출 서비스 개시(3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WHO/IARC 전문보고서 공개(3월), 열린포럼 개최 및 보도자료를 통한 대국민 홍보(6월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칼로리코디 다운로드수(건, 누적)	560,000	564,850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영양성분DB 내실화 및 활용 확대
 - 영양성분DB 자료 확충 및 시스템 안정화
 - 영양성분DB 중 당류함량 정보 반영 및 대국민 공개
 - * 가공식품 10,749건의 당류함량 자료 업데이트 및 식품별 정보 제공
 - 유지보수사업 및 영양관리 앱의 웹 전환을 통한 시스템 보완
 - 영양성분DB 정보공유 가이드 마련 및 정보서비스 보장
 - DB 다운로드 활용방법 등 식품안전나라에 게시
 - 개인 영양관리 앱에 영양성분DB 연동 및 영양성분 콘텐츠 추가
 - * DB 검색·다운로드, 외식영양성분자료집 총 6권 다운로드 기능 탑재
- (한계) 국가주도의 단방향성 영양성분DB 정보제공으로 정보 확산 및 활용속도가 느림
 - 수요자 및 사용자의 니즈를 고려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, 기존 정보의 재정비를 통한 프로그램 신뢰성 확보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영양성분DB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사업 추진('19~)
 - 영양성분DB 등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
 - DB 이용기관·업체 의견수렴(상반기) 및 DB 활용 확대
 - HMR을 포함한 가공식품(50품목) 등의 단백질, 지방산 등 80종의 영양성분 분석 자료 확보(12월)

4-1-3	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⑧	(고령자) 복지시설 급식 위생·영양 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반경녀 연구관 T.043-719-2279
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규호 사무관 T.043-719-2275
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T.043-719-2255

1. 과제내용

-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대상 영양·식생활 교육 실시
 -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식생활 교육지원을 위해 어르신을 방문 관리하는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영양·식생활 교육 실시
- 노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 지원
 - 노인 급식안전관리 현장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및 법적 근거 마련

2. 추진계획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거노인 및 생활관리사 대상 영양·식생활 교육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별 교육 수요조사 실시(5월) -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대상 식품 안전·영양교육 수행(6~9월) -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식생활 교육 및 지도(7~10월) ○ 노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 현장컨설팅 지원(4~10월) -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안전·영양 지원 근거 마련 추진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거노인 및 생활관리사 대상 영양·식생활 교육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거노인생활관리사(10회 461명), 노인 대상 교육(13회, 446명) - 어르신 대상 미니튼튼 교육차량 활용 식생활 교육 실시(8월) * 경로당, 노인정 어르신 대상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체험교육(20회, 658명) ○ 노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 지원(5~1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 현장컨설팅 지원(171개소) - 「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(8월, 상임위 회부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생활관리사 교육 수행(회)	4	10

*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대상 식품안전·영양교육 수행 횟수

3. 성과 및 한계

□ 노인 등 취약계층까지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원 확대 추진

* 현장컨설팅 170곳, 급식관리지침서 개발, 독거노인 식생활 교육 실시 등

□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 안전관리 지원 근거 법률 제정 지연

○ 「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국회계류 중(8월)

* 공청회 미개최 등 절차적 문제로 법안심사 지연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건강한 어르신 식생활을 위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원 확대

○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('19.1월~)

* 「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→ 「(가제)사회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」

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규모(50인 미만) 노인
요양시설 등 방문 위생·영양관리 지도, 식단제공 등 지원('19.7월~)

- 노인 위생·영양관리 지침서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(280개소)

*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'20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

4-1-③	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⑨	(저소득층 등 취약계층) 바우처 제도 도입

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광병배 사무관 T.044-201-2274

1. 과제내용

-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‘바우처’ 제도 도입 추진
 - 현금부조가 아닌 실제 식품구입비와 목표 식품비를 고려한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되, 특정품목 구매제한 및 식생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올바른 식품선택환경 조성
 - * 사업추진체계 설계를 위한 실증연구 실시('18)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증연구 계획수립·추진('18) ○ 실증연구 결과 타당성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('1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개 지자체 총 1,600가구 대상 ○ 도입 필요성 4.7점(5점 만점), 식품비 지출 평균 증가율 38%

-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- * 실증연구('18) 및 시범사업('20) 추진과정에서 성과지표를 도출 후 본사업 추진시 성과지표 설정
 - 시범사업시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를 대상으로 제도도입 및 필요성,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성과측정 계획

3. 성과 및 한계

-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효과분석('18.10)
 -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성 : 4.7점(5점 만점)
 - 도입 필요성은 매우 긍정적. 4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
 - 식품비 지출 평균 증가율 : 38%
 - 지원 전 평균 139천원을 지출, 지원받은 후에는 평균 192천원 지출, 평균 37천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여 평균 52천원의 지출 증가
 - 지원 전 대비 식품비 지출 증가율은 38%, 구축효과는 140%
 - 균형 잡힌 식사와 가족의 건강에 도움 정도에 대해서도 79.2점으로 상당히 긍정적
 - 병행 추진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는 77.8점으로 지급된 교육자료가 식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
- 시범사업 타당성, 중복성, 사업계획에 대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규도입 심의*를 완료('18.11월)하여 추후 정책 추진동력 확보
 - * (심의의견) 취약계층에 대한 현물지원 방식의 농식품바우처를 통해 농식품 소비를 확대하고 영양섭취 및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 인정
 - 단,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에 따른 '20년 시범사업 재원 확보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'18년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('20)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설계 및 관련 재원 확보
 - 기존 복지부 운영 전달체계(복지정보시스템)와 통합·연계하고, 식생활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식생활·영양 교육 병행하는 방안 검토
 -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,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실증연구결과 기획기사 등으로 제도도입 공감대 형성 추진

4-1-3

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
⑩

(저소득층 등 취약계층) 초·중·고 우유급식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임지현 사무관 T.044-201-2340

1. 과제내용

- (저소득층 자료 우유급식 지원)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 발달 및 건강 증진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·중·고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급식하는 우유 지원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8년 학교우유급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안내 - 2018년 학교우유급식 국비 보조금 배정(2월, 5월, 8월, 11월) - 2018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(6월) - 2019년 학교우유급식 수요조사 및 신청(9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8년 학교우유급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안내 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무상우유급식 지원(17개 시도, 566천명) - 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시·도별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대상 시범사업 추진(전국 223개 학교, 9천명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지원대상 학생수(천명)	575	575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'18년 하반기 국정과제로 시·도별 10개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대상 시범사업 추진

※ 소요예산 : 350,880천원 = 20,640천원[10개교 × 100명/개교 × 80일(등교일) × 430원/200ml(지원한도) × 60%*] × 17개 시·도

-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과 시·군·구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학교 선정 추진(223개 학교, 9,094명)
- (한계) 학교우유급식 매뉴얼 분량이 많아 학교 일선 행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

4. 향후 추진계획

- 교육부와 협의하여 매뉴얼 간소화로 학교행정 부담 완화('19.상)
-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
 -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 연 2회 점검(최소 1회 이상 방학기간 중 점검 포함)
- 공급품목 다양화
 - 현재 백색 우유 외에 치즈, 발효유 등을 주 1회 공급이 가능하나, 치즈 등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추진

4-1-3	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
⑪	(저소득층 등 취약계층)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윤미라 주무관 T.044-202-2835

1. 과제내용

-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의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시스템 활용 및 확산
 - 임신부·영유아 보호자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시스템 점검·고도화
 - 모유수유, 영유아 식생활 관리 강의 등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·확산
 - 온라인교육과정 운영 및 시스템 활용 방법 관련 매뉴얼 제작·배포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운영 관련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및 자문 (4~5월) ○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시스템 오픈 전국 확산(7~8월) ○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강화 및 운영 모니터링(9~11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스템 유지·보수 및 전국 오픈 확산(4~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영상 강의 6편 모바일·PC 탑재 * <EBS부모> 동영상 강좌 1,000편 연계 ○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운영 관련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개최(7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 영양교육 강의주제별 전문가 교육 - 영양교육과정 소개 및 운영 방법 안내 ○ 매뉴얼 개발 및 보급(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당자용 소책자, 대상자용 리플렛 2종 ○ 다문화 가구용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강화 실시(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[유아 식생활 관리] 영어·중국어·캄보디아어·필리핀어·베트남어 자막·더빙, 관련 교육매체 제작·보급 ○ 프로그램 운영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(7월/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당자 대상 개선의견 수렴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교육 활용률(%)	50	50

* 측정산식 : (온라인교육 활용 보건소 수/영양플러스 운영보건소 수)*100

3. 성과 및 한계

□ 대상자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국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영양 교육 시스템 신규 도입·운영

○ (17년) 6개 교육과정 개발, 4개 보건소 시범운영 → (18년) 시스템 유지·보수, 다문화 가구용 콘텐츠 강화, 담당자 교육설명회 개최, 전국 보건소 확산·운영

- 담당자 교육 및 의견수렴(베타서비스 사전 운영)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정 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 노력 실시

*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 중 98.2%가 온라인 교육시스템 활용 계획 있다고 답변

□ 대상자 확대를 위한 신규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발 필요

○ 기존 영양위험요인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불량 등) 대상자 뿐만 아니라 과체중·비만 대상자(영양불균형) 등을 위한 영양교육 과정 도입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대상자 확대를 위한 신규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발

○ 과체중·비만 대상자를 위한 영양교육과정 신설

- 영유아 과체중 및 비만 보호자 대상 등 영양교육 동영상 강의 개발

*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(18.7월) 내 반영(추진과제 1-1-1-① 영유아·임산부·아동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품지원 강화)

4-2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활동

4-2-1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

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유유순 사무관 T.043-719-2103

1. 과제내용

-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외식환경조성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자체별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시행(연중) ○ 소규모 영세영업자(100㎡이하) 중심 현장 맞춤형 컨설팅(2~11월) ○ 현장 평가전문가 양성(200명) 및 평가항목 합리적 개선(11월) ○ 관련 협회를 통한 교육, 설명회 개최 등 위생등급제 참여 독려 ○ 영업자가 원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유도(3~11월) ○ 음식점 위생등급제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(2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정신청 4,597, 지정 1,359개소 ○ 소규모 영세영업자 중심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(1,656개소) ○ 현장 평가전문가 양성(278명) 및 평가항목* 개선(5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위생과 무관한 간접지표 항목 삭제 ○ 지자체, 협회와 협업을 통한 위생등급제 참여독려 및 설명회(9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영업자 896명, 공무원 285명 대상 ○ 시·도, 유관 협회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 협의체 운영(4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위생등급제 추진현황 공유 및 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협력 요청 ○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송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YTN(2·10월), 정부청사(6~7월, 9~12월), 연합뉴스(6~7월), KTX(7~10월), MBN(11월), 채널A(11~12월), 롯데시네마(8·11·12) 등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수(개소)	6,000	4,597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기술지원, 평가자 양성 및 홍보 등을 통해 위생등급제 확산

○ 참여업소 전년 대비 46.5%, 전년도 동월 대비 평균 34.1% 증가

* 참여업소 개수 : ('17) 3,138 → ('18) 4,597개소 증가

□ (한계)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증가하고 있으나, 영업자의 지정효과에 대한 확신부족 및 평가의 난해성 등으로 인해 제도신청에 소극적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

○ 위생등급 평가항목의 단일화 및 합리적 조정으로 영업자 이해도 제고

○ 위생등급 지정업소 대상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

* 관련 고시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조항 신설 및 식품진흥기금 활용 지원

○ 영업자 및 공무원 대상 설명회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

4-2-①	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
②	배달음식 및 가정간편식 점검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박동희 사무관 T.043-719-2054
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황인영 연구관 T.043-719-4052

1. 과제내용

-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등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 실시
- 배달앱 운영업체와 정보공유를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즉석섭취·조리식품 제조·판매 업체, OEM 제조업체 집중점검 - 가정간편식, 조리식품 제조업체 점검(4월, 12월) - 편의점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수거·검사(4월, 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즉석섭취·조리식품 제조·판매 업체 집중 점검 - 영유아식 등 즉석섭취식품 제조·판매업체 1,657개소 기획점검(3월) -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5,076개소 합동점검 및 1,000건 검사(5월) - 가정간편식 제조·판매업체 1,635개소 점검(8월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관리 집중 점검 및 수거·검사(7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달앱 3사 등록 음식점 41,683개소 점검(연중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확대(9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우버이츠, 네이버주문하기' 등을 통한 위생정보 연계 확대(9월)

* 음식점 인허가 및 행정처분 정보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생취약분야 지도·점검(건)	4	4

3. 성과 및 한계

- 가정간편식 제조·판매업체 및 배달앱 3사 등록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
 - * 가정간편식 제조·판매업체 6,711개소 점검 137개소 위반 조치
 - * 배달앱 3사 등록 음식점 41,683개소 점검 1,198개소 위반 조치
- 배달앱 이용 증가로 배달전문 음식점이 급증하고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하나, 한정된 단속인력만으로는 효율적 관리에 한계
- 배달앱, 맛집정보 제공사이트를 통한 식품안전정보(인허가, 행정처분 정보 등) 제공으로 외식의 위생수준 제고 및 소비자 알권리 강화
 - * ('17) 3개(배달앱) → ('18) 6개(배달앱, 맛집 정보제공 사이트 등)
- 식품안전정보의 배달앱 등 연계·제공 시 기관 간 매칭정보가 상이 하여 정보 연계에 어려움 발생
 - * 매칭정보 : (통합망)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허가 정보, (민간) 사업자등록번호

4. 향후 추진계획

- 가정간편식 제조·판매업체,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지속 점검 및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제도 마련
- 국민 이용이 많은 배달앱, 맛집사이트를 통한 위생정보 제공확대
 - * ('18) 배달의 민족·배달통 등 6개 → ('19) 카카오 주문하기·망고프레이트 등 9개

4-2-2	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
①	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고영호 연구관 T.043-719-2104

1. 과제내용

-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 운영으로 식중독 발생 저감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 연간 계획수립·시행(1월) - 노로바이러스 검사 680건 실시(연중) -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현장점검 (3, 8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 연간 계획수립·시행(1월) - 식품용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(710건, 불검출) -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의 염소 소독살균장치 정상 작동여부 점검 (233개소/3, 4, 8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(건)	680	710

3. 성과 및 한계

- 지하수 살균소독장치의 설치·운영으로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의 노로바이러스 검출률* 지속 감소

* ('13년) 6건 → ('14년) 4건 → ('15년) 6건 → ('17년) 1건 → ('18) 0건

4. 향후 추진계획

-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운영(계속)

4-2-2	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
②	연안 생산해역 및 패류 양식장 감시체계 운영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류성봉 사무관, T.044-200-5618
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목종수 연구관, T.051-720-2640

1. 과제내용

- 전국 연안 생산해역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및 패류 독소 관리
 - 패류(굴) 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파악
 -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패류독소 안전성조사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굴 중의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의거하여 서·남해안 패류 생산해역(24개소)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파악 * 굴 생산시기(1~4월, 11~12월) : 격주조사 - 패류 생산해역 오염원 관리 및 생산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○ 전국 연안 패류독소 모니터링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기조사(50개소) 월 1회 이상 * 주 발생시기(3~6월) : 확대조사 정점(46개소)과 동시에 2주 1회 ** 단, 검출시 주 1회, 기준초과시 주 2회 - 패류독소 발생상황 속보 제공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의거하여 서·남해안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·남해안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실시 완료(31회) 및 자료 제공 ○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실시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 연안 패류양식장 96개소(정기조사 50개소, 확대조사 46개소)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실시 완료(89회) 및 정보 제공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(회)	25	29
○ 패류독소 모니터링(건)	1,800	3,025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조사 및 결과 제공

- 해수부,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노로바이러스 조사결과 제공(29회)

□ (성과) 전국 연안 패류독소 발생상황 감시체제 가동 및 피해대책반 운영

- 해수부,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패류독소 조사결과 제공(89회)
 - * 패류독소 급속한 확산에 따른 조사 강화 : 불검출(격주 1회 → 주 1회), 검출시 (주 1회 → 주 2회)
- 패류독소 발생 상황 속보(수과원 홈페이지 등) 및 보도자료 제공
 - * 패류독소 속보(89회), 스마트폰 앱 정보(89회), 보도자료(12회), 취재협조(22건)

□ (한계) 패류독소 부적합 패류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당일분석·결과통보 하여야 하나, 조사·분석 인력 부족으로 애로

- 패류독소 발생해역 내 출하 전 모든 패류 품종에 대하여 당일분석·결과통보로 부적합 패류 유통 사전차단 하여야 하나, 조사·분석 인력 부족으로 일부 부적합 패류 유통 및 조사기관(수과원) 업무 과중으로 애로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서·남해안 패류양식장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 지속 추진

□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지속 추진

4-2-2	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
③	범부처 관리 체계 구축·운영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고영호 연구관 T.043-719-2104

1. 과제내용

- 범정부 협업을 통한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식중독 대책협의기구'를 통한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·추진(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름철·겨울철 범정부 「식중독 대책협의기구」 실무회의(5, 1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중앙부처, 지자체, 관련단체 등 30여개 기관 참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중독 발생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17년에 식중독이 발생한 시·군·구 대상 1회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모의훈련(4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국 시·군·구 100% 신속보고 전파 - 지방청 및 시·도 주관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(5~10월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(상시) 및 식중독 발생분석 정보제공(매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상 : 17개 시·도(시·군·구), 17개 교육청, 관련 협회 5개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중독 발생 및 예방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(상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·시설·원인군별 식중독 발생 정보 등 식중독 주의정보 제공(매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식중독 환자 수(명)	5,642	11,066

* 현재 원인·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최종결과에 따라 수치 변동가능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범정부 협력 체계 강화로 식중독 대응 효율성 향상
 -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발생 시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속 대응으로 확산방지 및 단기간 내 원인 규명
 - * 식중독 최초 신고 이후 30시간 내 확산방지 조치 및 120시간 내 규명
- (한계) 온난화, 라니냐 등 급격한 기온변화로 식중독 위해우려 요인이 증가하는 등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요인이 작용
 - '18년 케익 식중독 등 완제품을 급식으로 제공한 대형 식중독 발생으로 학교급식 환자수 증가
 - * 식중독 발생현황 : (최근 3년 평균) 355건, 6,264명 → ('18.12월) 488건, 11,087명

4. 향후 추진계획

- 식중독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
 -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 확대* 및 관계부처 간 식중독 대책 상호공유 지속 추진
 - * aT(한국농수산물통공사)와 협업하여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 등 공유

4-2-3	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
①	학교급식소 및 납품업체 점검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유유순 사무관 T.043-719-2103

1. 과제내용

-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
 - 식중독 발생 시기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·점검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등 급식소 식중독 예방 지도·점검 및 특별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학 대비 학교급식소 등 합동 점검(3, 8월) - 위생취약학교 특별점검(6, 11월) -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(연중) - 청소년 수련시설 등 발생 우려 시설 집중관리(4월) - 학교장·영양사 및 사회복지시설 조리종사자 식중독 예방 교육(연중) ○ 집단급식소 납품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전수검사(연1회) 및 위반업체 특별점검(11월) - 김치류 제조업체 HACCP 기획평가(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등 급식소 식중독 예방 지도·점검 및 특별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학 대비 학교급식소 및 매점 등 11,528개소 점검(3, 8월) - 식중독 발생 및 위반 이력 학교 841개소 특별점검(6, 11월) - 학교 등 집단급식소, 일반음식점 등 27,507개소 컨설팅 실시 - 행락철 청소년 수련시설, 도시락·김밥 제조업체 등 2,954개소 점검(4월) - 학교급식 관계자(학교장 154회, 영양사 245회) 및 복지시설 종사자(238회) 교육 ○ 학교급식소 납품 식재료 공급업체 정기 및 특별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재료 공급업체 등 3,995 개소 정기점검(3, 8월) 및 위반업체 78 개소 특별점검(11월) - 학교납품 HACCP 인증 김치제조업체 93개소 기획평가(2~5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93개소 중 적합 85개소, 부적합 8개소(시정명령 및 인증취소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학교급식소 점검횟수(회)	3	3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예방적 지도·점검

- 학교,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·점검으로 안전한 급식 제공 및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 노력

* 급식소·수련시설 등 19,411 개소 점검(147개소 적발), 27,507개소 컨설팅 및 조리종사자 대상 399회 교육 실시

□ (한계) 합동점검 시 교육청이 제공하는 식재료 납품업체 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나, 일부 업체가 누락되는 등 효율적 관리에 한계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 안전관리 강화

- 학교급식 납품업체 정보 사전입수 등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방식 개선
 - *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와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공유 강화 등 협의 추진
- 학교급식소 현대화사업 기간 중 도시락·대체식 등 제공업체 사전점검
-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식재료 및 다빈도 제공식품 검사 강화

4-2-③	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
②	학교급식소 관리책임 강화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, T.044-203-6543

1. 과제내용

- 학교급식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책임 강화
 - 학교 내 급식관리 전반에 대한 연 2회 정기 위생·안전점검 강화
 - 정기점검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연 2회(학기별 1회) 급식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*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철저
 - * 모든학교 전수점검,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홈페이지 공개
 - 학생에 제공되는 실제 급식사진 등을 학교홈페이지 게시하는 등 급식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·학부모에게 제공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급식 위생·안전관리 강화(계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·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위생·안전 점검(학부모 참여) 등을 강화토록 행정지침 시달(1월) -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소 전수 점검(연 2회, 5개 등급 평가)을 실시 하고 점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 ○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(4월, 8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’ 지침 시행(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점검활동이 가능한 학부모 등을 참여시켜 학교급식 위생·안전점검 등을 강화(2018년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, '18.1.16) ○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관련 시도 관계관 회의 개최('18.3.2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급식 위생·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 자발적 개선 유도 등 시행 ○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(총 5회, 3.21, 6.1, 8.17, 9.6, 10.12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·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관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철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강화 ○ 학교급식 관리 및 소통 강화(계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급식에서 실제 제공되는 식단 사진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활성화 행정지침 시달(1월) - 학교급식 관련정보를 국내·외 공개 및 홍보, 대국민 이미지 개선 및 신뢰성 제고를 학교급식 전용사이트 구축·운영(5월~) ○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시 관리 책임 강화(계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, 사고 발생 시 원인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단위 위생·안전관리 강화, 학교급식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, 신속 보고 및 대응 철저 등 시달 ○ 학교급식 관리 및 소통 강화(계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제 제공되는 식단사진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지침 시행(2018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, '18.1.16) - 학교급식 전용사이트 관련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조치 및 '학교급식 정보마당' 오픈('18.4월) ○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시 관리 책임 강화(계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시 학교 책임 강화 요청 등 시행('18.3.21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학교급식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율(%)	85	97.9

3. 성과 및 한계

- ‘학교급식 정보마당’ 구축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, 학교 내 급식관리 전반에 대한 연 2회 위생·안전점검 및 식중독 발생 시 학교장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급식 제공 환경 조성

4. 향후 추진계획

- 학교급식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책임 강화(계속)

4-2-③	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
③	학교급식소 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, T.044-203-6543

1. 과제내용

□ 학교급식소 급식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

○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(매년 500개소 수준), 조리실 적정 온도 유지 및 여름철 가열식품 제공 등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

○ 축산물 검수시스템 구축 및 도입 추진(' 19)

- 축산물 납품시 검수기로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리자의 컴퓨터에 식재료 정보*를 자동 기록(축산물품질평가원 협업)

* 생산정보(생산지역, 친환경 여부), 위생정보(원산지, 위해 축산물 여부 등), 유통정보(부위, 유통기한, 냉장·냉동, HACCP인증 등)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 환경 개선(계속) - 겨울방학 기간 급식시설·기구에 대한 점검 및 조리실 온도 적정 유지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개·보수 실시(1~2월) ○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(4월, 8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 환경 개선(계속) - 개학 대비 급식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(10,755개교) 및 조리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개·보수 조치(3,503교, 29,877백만원) ○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(총 5회, 3.21, 6.1, 8.17, 9.6, 10.12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·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관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철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강화 ○ 축산물 검수시스템 구축 및 시범 사업 추진(~12월, 축평원 협업) - 축산물 검수 시 QR코드를 스캔 하면 식재료 정보를 자동 기록 하는 시범사업용 검수앱 개발(~4월) - 축산물 QR코드 활용 검수앱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(7~8월) -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축산물 검수앱 개발(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단위 위생·안전관리 강화, 학교 급식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, 신속 보고 및 대응 철저 등 시달 ○ 축산물 검수시스템 구축 및 시범 사업 추진(축평원 협업) - IT기술 활용 시스템적 검수체계 구축방안 조사(~'18.1월) - IT기술을 활용한 축산물 Smart 검수시스템 개발(~'18.6월) - Smart검수시스템 운영을 위한 납품업체 프로그램 개발(~'18.7월) - 축산물 Smart 검수시스템 시범 운영(11~12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학교수(개소)	500	500

3. 성과 및 한계

- 학교급식 식재료의 철저한 품질, 위생관리를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검수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의 철저한 품질 확인 및 검수시간 단축 등 영양(교)사의 업무 경감

4. 향후 추진계획

- 학교급식소 급식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(계속)

4-2-4	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
①	위생 사각지대 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박동희 사무관, T. 043-719-2054
 식중독예방과 윤태형 연구관 T.043-719-2105

1. 과제내용

- 특정시기·지역에 소비가 많은 식품 및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한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명절, 행락철, 휴가철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 실시(연 4회) ○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 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활용한 식중독 신속검사 및 식중독 예방 홍보 ○ 지역축제,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중독 예방 홍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, 추석 명절 다소비 식품 등 제조·판매업체 합동점검(2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7,813개소 점검, 345개소 위반 ○ 봄·가을 행락철, 여름 휴가철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(3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0,969개소 점검, 356개소 위반 ○ 평창동계올림픽 및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식중독균 신속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식중독신속검사차량 91회 운영(1,778건 검사 /13건 검출) ○ 국제행사 등 식중독 예방 홍보 동영상 총 399회 송출 ○ 식중독 예방 홍보영상 송출 및 포스터·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영상) TV·라디오 등 1,389회 송출 - (홍보물) 식중독 주의정보 달력(18천부), 노로바이러스 예방요령 리플릿(26만부), 손씻기 포스터(89천부),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스티커(33만부) 배포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다소비식품·다중이용시설 합동단속(건)	5	5

3. 성과 및 한계

- 국민 소비가 많은 품목, 시설에 대한 지도·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
 - 한정된 자원(단속인력, 예산 등)으로 다수의 업체를 관리해야하는 만큼,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점검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계절별·시기별 다중이용시설 및 다소비식품 제조·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
 -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계를 활용하여,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위반이력업체 및 미점검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 역량 집중

4-2-4	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
②	식중독균 추적관리 기반 마련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고영호 연구관 T.043-719-2104

1. 과제내용

- 식중독 원인규명 기반마련을 위한 유전정보 DB 확보
 -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미생물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된 식중독균 유전자형을 분석하고 DB 관리로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 개선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중독균 추적관리 및 유전정보 DB 분석 계획수립(1월) - 식중독균 탐색조사(12천건) - 식중독 균주 유전적 상동성 등 특성정보 분석 및 DB화(1,500건) - 차세대염기서열장비 도입(10월, 유전정보 DB화 1,000건) - 균주 계대배양 등 자원 표준화 (600주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중독균 추적관리 및 유전정보 DB 분석 계획수립(1월) -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식품 체인에 대한 식중독균 탐색조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3,906건 검사(2,187건 검출) - 탐색조사 등을 통해 확인·배양한 식중독 균주 유전적 상동성 등 특성정보 분석 및 DB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식중독균 특성정보 2,214건 DB화 - 전장유전체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장비(NGS) 도입(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식중독균 유전체정보 DB화 1,050건 - 진단법 개발 및 원인 추적 등에 활용을 위한 균주 계대배양 등 자원 표준화(600주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식중독균 DB화(건)	1,500	2,214

3. 성과 및 한계

- 식중독균의 혈청형·유전자형 등 병원성 특성을 규명하고 DB화하여, 신·변종 고위해 식중독균 감시 및 식중독 추적조사에 활용 가능

* 식중독균 DB(누계) : ('16) 6,745건 → ('17) 8,200건 → ('18) 10,414건

- 식중독균 전장유전체 분석*이 가능한 NGS 도입으로 식중독균의 상동성 분석 정확도** 증대 등 원인규명을 개선 기반 마련

* 전장유전체 (WGS, Whole Genome Sequence) 분석 : 차세대염기서열분석 (NGS, Next Generation Sequencing) 장비를 이용하여 유전자 전체(유전체)의 염기서열 정보를 획득하고 해독하는 작업

** 상동성 정확도 : 유전자 지문분석(PFGE)은 범인의 '몽타주' 수준이라면, 전장 유전체(WGS) 분석은 '증명사진' 수준의 정확도의 비교 가능

4. 향후 추진계획

- 식중독 원인규명 기반마련을 위한 유전정보 DB 지속 확보(계속)

4-3 생활속 식생활 교육·홍보 강화

4-3-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

① (학생) 식품 안전·영양 교육

교육부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, T.044-203-6543

1. 과제내용

□ 어린이 식품안전·영양교육 등 지원

- 영양(교)사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연령별 식생활 교육 교재 지원 및 실천프로그램을 강화한 실천학교* 운영

* 식생활 교육 및 전교생 대상 올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 등 수행 학교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 교육 강화' 지침 시행(1월~) - '2018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'을 통해 초·중등학교 범교과 학습 주제에 영양·식생활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 ○ 학교에서의 '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 교육계획' 수립·추진(2월~) - 단위학교의 「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」에 '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 교육 강화' 지침 시행(1월) - 범교과 학습주제인 안전·건강교육(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등)을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교육 실시(2018년 학생 건강증진 정책방향, '18.1.16) ○ 학교에서의 '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 교육계획' 수립·추진(2월) - 단위학교의 「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」에 '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

추진계획	추진실적
<p>교육' 반영,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실시(월 2회 이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, 불량식품 근절, 식중독 예방, 식품 안전 및 영양·식생활 등에 관한 사항 반영, 월별 추진계획 수립·시행 ○ 식품안전·영양교육 교재 개발·보급 (3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안전·영양교육 교재를 교육 지원 사업 참여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에 활용(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) ○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(계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 홈페이지 및 급식관리실 등에 '영양상담실'을 개설·운영하여 식사 조절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 맞춤형 영양상담 실시 ○ 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등 추진상황 점검(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에서의 영양·식생활교육 현황, 영양상담실 운영 현황,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진실적 점검·평가 	<p>교육'을 반영하여 월 2회 이상 교육 실시 안내(2018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, '18.1.1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안전·영양교육 교재 개발·보급 (3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중고등학교 대상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지원 사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자료, 콘텐츠, 교사 교육 등 지원(식약처 공동) ○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(계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 홈페이지 및 급식관리실 등에 '영양상담실'을 개설·운영하여 식사 조절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 맞춤형 영양상담 실시(2018년 학생 건강증진 정책방향, '18.1.16) ○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양·식생활교육(83%), 영양상담실 운영(11,715개교, 99.3%),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(11,787개교, 100%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영양·식생활교육 실시율*(%) (영양교사 배치교 중 월 2회이상 교육실시)	83	83

* 영양교사가 관련교과 시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평균 월 2회 이상 실시한 영양·식생활교육을 실시 한 경우

3. 성과 및 한계

- 단위학교에서의 영양·식생활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건강증진 도모 및 향후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·보급으로 영양·식생활교육 지속 확대

4. 향후 추진계획

- 단위학교 식품안전 및 영양·식생활교육 강화(계속)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반경녀 연구관 T.043-719-2279

1. 과제내용

-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·영양교육 교재·교구 지원
 - 식품영양, 식습관, 위생안전을 주제로 영양(교)사가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및 교구 등 제작·배포
 - * (식약처) 설명회를 통한 교재 등 활용법 제시 → (학교) 교육 운영
- 식품안전·영양교육 실천학교 운영
 - 식생활 교육과 더불어 전교생 대상 올바른 식생활 실천캠페인 등 실천프로그램이 강화된 실천학교 운영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어린이 식품안전·영양교육 지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식품안전·영양교육 운영계획 수립 (1월)- 지원 학교 수요조사(1~2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어린이 식품안전·영양교육 지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초등학교 대상 식품안전·영양교육 운영계획 수립(1월)- 초등학교 대상 식품안전·영양교육 지원학교 수요조사(~2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- 사업 설명회 개최(2월)	- 영양(교)사 대상 식품안전·영양교육 지원사업 설명회(2월, 서울·오송)
- 교육콘텐츠 배포 및 교육운영(3월~)	- 식약처(주관)·교육부 협조를 통한 교재·교구 등 교육콘텐츠 배포 및 교육운영(3월~) * (교재) 초등학교(교재 3종, 지도서 3종), (교구) 미각키트, 핸드플레이트 등(4월~)
- 영양(교)사 교육과정 운영(7~8월)	- 영양(교)사 대상 식품안전·영양 전문 교육과정 운영(8~9월, 5기, 125명)
-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(10~11월)	- 식품안전·영양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(11월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식품안전·영양교육(명)	17만2천	19만1천

* 식품안전·영양교육 지원 대상 초등학생수

3. 성과 및 한계

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

○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, 영양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의 식습관 개선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

* (실천학교) 영양교육 필요정도(98%), 식습관 개선정도(82%)

4. 향후 추진계획

2019년도 초등학교 대상 식품안전·영양교육 지원

○ 어린이 비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당·나트륨 저감 집중교육 추진(주제 : “저염·저당을 배워요”)

4-3-①	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
②	(고령자) 찾아가는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반경녀 연구관 T.043-719-2279

1. 과제내용

-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
 -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경로당, 복지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'건강 백세 영양관리 체험교실' 운영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(8월)	○ 건강 백세 영양관리 체험교실 운영 (7~10월) - 어르신 영양·식생활 개선 교육 및 건강간식 만들기 조리실습 * 경로당, 노인복지관 대상 체험형 식생활 교육 수행(20회, 658명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미니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(회)	20	20

3. 성과 및 한계

- 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스토리텔링식 체험교육 수행으로 교육 만족도가 높고,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 실천의욕 향상에 기여
 - * 체험교실 운영 현황 : ('17) 7회, 142명 참여 → ('18) 20회, 658명 참여



(이론) 스토리텔링식 영양·식생활 개선 교육

(실습) 건강 간식 만들기(또띠아 견과류칩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노인 식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

- '건강 백세 식품안전·영양관리 체험교실' 지속 운영(8월)
 -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·영양교육 및 건강 간식 만들기 등 조리실습을 병행하는 체험형 교육 실시
 - * 경로당, 노인복지관 등 현장 방문 교육프로그램 운영(목표 총 20회 이상)

4-3-2	지역 먹거리 통합관리
①	지역단위 푸드플랜 계획 수립
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나인지 T.044-201-2217

1. 과제내용

- 지역단위 푸드플랜*을 전국으로 확산**, 지역의 친환경·GAP 등 우수 농식품을 급식·외식·직매장 등 지역 수요처에 우선 공급

*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, 지역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(지역 농산물을 급식·외식·직매장 등에 공급) 등을 위한 관련 정책 연계

** '15년 「밀라노 도시 푸드정책 협약('15.10)」 채택을 통해 전 세계 117개 도시 (런던, 뉴욕 등)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동참. 우리나라는 서울, 전주 운영 중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도지자체를 선정(8개소)하여 지역 푸드플랜 구축 시범사업 실시 ○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·보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도지자체 선정 완료(9개소, 2.24) 지역 푸드플랜 구축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도지자체 워크숍 개최(7.18, 8.22), 추진상황 점검·지역별 벤치마킹 독려 ○ 지역 여건에 맞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(도시형, 농촌형, 도농복합형),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(7월~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지역푸드플랜 구축 지자체 수(개소, 누적)	8	9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지역·분야별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선도모델 구축
 - 지역 유형별 9개 선도지자체* 선정·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(2월~)
 - * 광역형(충남), 도시형(서대문, 유성), 농촌형(청양, 해남), 복합형(춘천, 완주, 상주, 나주)
 - 선도지자체 추진상황 모니터링, 애로사항 청취 및 자문을 위한 워크숍 개최(7.18, 8.21) 및 현장 방문 실시
 - 나주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지역 농산물 시범 공급 추진
 - 농식품부-14개 공공기관-나주시-전남도 간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 체결(11.14)
 - * (8월) 출하농가 9농가, 식재료 공급액(月)454만원 → (12) 47농가(5.2배 ↑), 3,804만원(8.4배 ↑)
 - 「군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추진단」* 구성, 접경지 시범지역(강원 화천, 경기 포천)부터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확대 추진
 - * 농식품부, 국방부, 농협중앙회, 지자체, 외부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주 1회 점검회의 개최
 - 로컬푸드 확대 공급에 저해가 되고 있는 단지장 제도 폐지 합의(12월)
 - 화천, 포천 군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방안 및 목표* 설정 완료
 - * (화천) '17년 33개 품목 32억(31%) → '22년 72개 89억(77%), (포천) '17년 11개 품목 19억(33%) → '22년 48개 43억(71%)
- (한계) 지역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 대상 재정 지원 및 추진 역량 강화 등 통합적 지원 및 로컬푸드 소비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 필요
 - 지역 푸드플랜 추진 관련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, 지역에서 이를 실행할 재정 및 담당자의 지식 부족으로 정책 확산 어려움
 - 정부 주도의 로컬푸드 공급 확산 지원과 동시에 시민사회 주도의 로컬푸드 소비 가치확산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지역 푸드플랜 추진 우수 시·군에 대해 우리부의 관련 재정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'먹거리 계획 협약' 추진(2월)
-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식 제고 및 지역 푸드플랜 추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(3월~)
- 시민사회·지자체 주도의 로컬푸드 가치 확산 추진
 - 로컬푸드 관련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·육성(사례 공모전 등)
 - 로컬푸드 로고송, 포스터 제작 등 전략적 마케팅 추진으로 소비자 인식전환 및 전 국민 분위기 조성

4-3-3	건강한 농산물 소비 촉진
①	GAP 농산물 소비 촉진

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김남진 농업사무관 T.044-201-2278

1. 과제내용

- 대형 유통업체 연계 판로확대 및 학교급식 관계자·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GAP 농산물 소비 촉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AP 농산물 판로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학교급식에 GAP 과일간식 제공(연중), 유통업체 GAP 취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(농관원-롯데마트) 체결(5월), 농협 하나로마트 GAP 전용판매관 설치(12월) 등 ○ 소비자 등의 자발적 홍보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영양사 자발적 학습조직 운영(4~10월), 소비자 GAP 리더 육성(4~10월), 학교급식 관계자 GAP 우수농장 팸투어(6~8월)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통·소비 단계의 교육·홍보 강화로 GAP 제도확산 및 이해도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통·급식업체와 협업하여 민간 주도 GAP 농산물 소비 확대(롯데마트 MOU 추진, 5월) - 학교 과일간식 연중 공급 - GAP 전문강사 육성, 소비자 GAP 리더 육성, 영양교사 학습조직 및 팸투어 운영 등 추진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소비자 인지도(%)	75.3	81.0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유통업체와 협업, 다양한 학습조직 운영 등 교육·홍보 강화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GAP 제도 확산 및 이해도 제고
 - 유통·급식업체와 협업하여 민간 주도의 GAP 농산물 소비 확대
 - * 롯데마트 GAP 매출액 355억원('18.10), 농협 취급액 10,078억원('18.11)
 - 생산·소비 현장에서 GAP 제도를 선도할 다양한 학습조직을 구성·운영하여 GAP 제도 알리미로 활용 및 인식 확대
 - * 농업인·소비자·유통업자 대상 'GAP 전문강사' 80명 육성, 소비자단체 중심의 '소비자 GAP 리더' 120명 육성, 영상교사 대상 'GAP 학습조직' 134명 조직·운영 등
- (한계) 유통·소비 단계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, GAP 확산 유인책 미흡
 - 유통 관계자들의 낮은 인지도, 안정적인 공급물량의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로 대형 유통업체 이외 유통관계자 취급 소극적
 - *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유통업체 주도로 생산농가에 GAP 인증을 요구하는 등 B2B 위주 거래이나, 우리나라는 B2C 정책으로 유통관계자 인지도가 낮음
 - 대량 소비를 위한 급식시장 등 공적영역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고, 친환경 농산물과의 충돌 등으로 소비 확산에 어려움

4. 향후 추진계획

- 민간업체와 협업강화 등으로 민간 주도의 GAP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GAP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·제공
 - 대형 유통업체와 정기 협의회 등을 통해 GAP 농산물 취급 확대 및 신규 수요 창출 발굴
 - * GAP 전용관 설치 지속 추진, 농협 취급물량 확대, 초등 돌봄 과일간식 확대 등
 - 유통업체·소비자 등에게 GAP 농산물 정보(품목·출하시기 등)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출하정보 등록·제공 시스템 개발 추진

4-3-3	건강한 농산물 소비 촉진
②	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이윤식 사무관, T.044-201-2439

1. 과제내용

-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선정·지원(3개소, '18.9월),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활성화(2개소) 등을 통해 유통·소비 활성화
- 친환경 공공급식, 직거래·온라인·홈쇼핑 등 다양한 판로 확충 및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·홍보 확대
 - 서울시와 학교·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업무협약 체결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선정 지원(3개소, 9월) ○ 친환경공공급식, 직거래·온라인·홈쇼핑 등 다양한 판로 확충, 친환경농업가치 중심 교육홍보 (연중) ○ 서울시와 학교·공공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업무협약 체결 (3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선정 완료(3개소, 7월) ○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 지원 (134개업체, 411개 제품), 어린이집 및 유치원 소비자 대상 친환경농업 가치 현장체험(50회 1,488명), 공영홈쇼핑 방송 6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랜차이즈기업과 협업, 친환경 농산물 메뉴 개발(9개 메뉴) 및 프로모션 진행(2개 업체, 5개 메뉴) ○ 서울시와 학교·공공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업무협약 체결 (3.6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(개소, 누적)	4	4

3. 성과 및 한계

□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구매도 5.3%, 6.2day 참여매장 매출액이 8.2% 증가

- * 소비자 구매경험 향상 : 5.3%('17년 76.9% → '18년 82.2%)
- * 6.2day 참여매장 매출증가율 : 8.2%('17년 29,018백만원 → ('18) 31,390억원)

□ (유통·소비촉진) 현장체험 및 교육, 판촉행사, 제품개발 및 프로모션 등을 통한 친환경농식품 유통·소비 활성화 유도

- * 홍보실적 : ('17) 2,166회 → ('18) 2,363회(TV 258, 라디오 2,063, 언론 38, 월간지 4)
- * 프랜차이즈기업과 협업, 친환경농산물 메뉴 개발(9개 메뉴) 및 프로모션 진행(2개 업체, 5개 메뉴)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시행기관 간에 사업조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성과

- 친환경농업 관련 언론홍보 등 자조금위원회로 단일화로 홍보 강화
- 농정원은 공공분야(학생, 유치원생 등),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민간분야(소비자, 농업인 등)의 현장체험·교육 추진

5

[관리 기반]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
5-1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

5-1-1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

① 부처간-지자체간 협업 활성화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T.043-719-3206
 농축수산물안전과 신향숙 사무관 T.043-719-3253
 농축수산물안전과 이영희 사무관 T.043-719-3259
 농축수산물안전과 김성희 사무관 T.043-719-3241)

1. 과제내용

□ 농·축·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채널 구축·운영

- 지자체, 관계부처(농식품부, 농관원 등)와의 협업채널 구축으로 농·축·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등의 수립 시 긴밀한 협조유지
- 관계부처(농식품부, 해수부, 식약처)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상황 공유·협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

2. 추진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농·축·수산물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(2회/년)	○ 관계부처 정기협의체 개최(4, 12월) - 참여범위에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협의체 운영규정 개정(5월) * 산란일자 표시 등 현안 발생 시 별도 면담 진행(12월, 식약처·농식품부 국장급)
○ 농·축·수산물 안전성 조사·검사 협력 위한 시·도 워크숍 실시(1회)	○ 축산물 안전·위생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숍 실시(11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관계부처 실무자 간 실무협의(3회)	○ 농·축·수산물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(6회/ 4, 5, 6, 11, 12월)
○ 농·축·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(2회)	○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 개최(2회/4, 11월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 관련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개최(회)	3	6

3. 성과 및 한계

'농·축·수산물 정부기관 간 협의체' 운영성과

- 관계부처 협의체 참여범위를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현장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·집행 및 보완 등 선순환 체계 마련
 - * 협의체 운영규정 개정 : 지자체를 포함하는 실무협의회 설치·운영 조항 신설
-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위험평가 근거 마련 시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법률 개정 추진
 - *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개정(공포 6월, 시행 12월)

농·축·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

-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축수산물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정보 신속 공유 등 사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관리의 효율성 향상

4. 향후 추진계획

지자체 및 관계부처 간 협의채널의 지속 운영

- 실무협의회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과제 및 협업과제 계속 추진

1. 과제내용

-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추진 조사기관 간 협업체계 구성
 - 관계부처 및 조사기관(수품원-지자체)간 협의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추진상황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역할 분담 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 추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협의회(3월/12월)	○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협의회(3.31일/11.20일)

-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관계부처 및 조사기관(수품원-지자체)간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성 조사

4. 향후 추진계획

- '19년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회의 (19.1월)

5-1-①	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
②	정보공유 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이성규 사무관 T.043-719-4056
 농축수산물정책과 설찬구 사무관 T.043-719-3204

1. 과제내용

- 생산단계 등 정보 공유 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
 -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추적·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등에 관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실시간 공유
 - * 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정보 등 14종 추가 확대
 - 위해정보 입수 또는 위해사고 발생 시, 농식품부·식약처는 사전 정보공유 및 협의를 거쳐 생산·유통단계 공동조사를 실시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산단계 등 정보 공유 확대 및 실시간 공유 - 통합망 정보 연계·공유 확대를 위한 기관 간 협의 계획 수립(4월) - 생산단계 등 식품안전 관련정보 추가 연계·공유(11월) - 부적합 식품대상 표준코드 적용 및 추진방안 마련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산단계 식품안전정보 등 관계 기관 정보 연계·공유 확대 - 정보연계 협의 계획 수립(4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검역본부(가축매몰지정보) 등 10개 기관별 협의일정 확정 - 가축매몰지 정보 등 23종(신규 19종, 기존 4종) 연계 확대 - 부적합 식품대상 표준코드 적용 완료(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농수산물안전성조사정보, 수산물안전성 조사정보 2종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약처, 농식품부 공동조사 실시 근거 마련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·시행(4월) - 위해정보 또는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위해사고 발생 시 식약처-농식품부 공동조사 가능 *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신설

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기관별 분산된 식품안전정보의 연계 확대 및 부적합식품 표준코드 적용 등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

- 생산단계 가축매몰지 정보 등 19종 추가 연계 확대 및 부적합 정보 공유를 위한 행정기관 표준코드 연계 완료

- * 신규 연계정보 작년대비 112% 증가 ('17년 17종 완료)

- ** 농수산물안전성조사정보(2종) 행정표준코드 연계

- 유관기관의 여건에 따라 정보연계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 발생

- *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사업일정에 따라 19.1월 중 기관표준코드 적용 예정

축산물의 영업장(산란계 농장 포함) 공동조사 실시 근거 마련

- 위해 우려가 있거나, 위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협업함으로써 선제적 축산물의 안전관리 가능

4. 향후 추진계획

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정보의 연계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, 연계 가능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등 업무절차 보완

- * 매년 10월까지 연계 가능여부 회신(공문) 확정 요청

5-1-①	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
③	지자체 역량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.044-201-2987

1. 과제내용

- 지자체 축산물 검사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지원
 - 지자체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시설(장비) 확보 지원
 - 지자체 축산물 검사 전문인력 지원 추진
 - 검사항목 확대에 따라 필요시 부처 검사 인력을 파견·지원
 - 지자체 축산물 검사 전문 인력 확충 방안 추진(행안부와 협업)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자체 축산물 검사시설(장비) 확충('18.3~12월) ○ 지자체 축산물 검사 전문인력 지원 추진('18.3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8년 축산물 검사 장비비 64억원 (국비) 지원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 대비 47억원 증액 ○ 지자체 축산물 검사 전문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자체 도축검사관 인원 전년 대비 19명 증원

-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(성과) 지자체 축산물 검사시설(장비)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확충 및 인력 확보로 지자체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의 검사 역량 강화
 - 축산물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'18년 축산물 검사장비 구축 비용을 전년 대비 47억원 증액된 64억원 투자(국비 기준)
 - '18. 9월 기준 전국 지자체 검사관은 274명으로, 전년 대비 19명 증원

- (한계) 지자체 검사관 확충은 수의사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음
 - 지자체 자체노력과 함께 행안부·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필요시 협의 추진

4. 향후 추진계획

- 지자체 자체노력과 함께 필요시 행안부·기재부 등에 협조요청

해양수산식품부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.044-200-5622

1. 과제내용

- 지자체 수산물 안전성 조사기관 확대 및 분석법 교육 지원
 -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 분석장비 구축 및 유지관리 지원 ('17년까지 4개소→'18년 10개소로 확대)
 - 항생물질·오염물질·세균 등 분석법 확립을 위하여 지자체 분석 담당자 교육 지원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(1월)	○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(1.16일)
○ 지자체 분석법 교육 실시(3~5월)	○ 지자체 분석법 교육 실시(3~5월)
○ 지자체 안전성조사 장비 구축 추진상황 점검(7월)	○ 지자체 안전성조사 장비 구축 추진상황 점검(7.31~8.31일)
○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(12월)	○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(11.20일)

□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□ 지자체 안전성조사 기관 확대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

- 6개 지자체에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 지원으로 안전검사체계 확대
 - * ('17년까지) 4개소(부산, 전남, 경북, 경남) → ('18) 6개소(인천, 경기, 충북, 충남, 전북, 제주)

□ 현재 10개 지자체에 안전성 조사를 위한 검사장비 구축이 완료되었으나, 조사인력 부족으로 안전성조사 업무에 한계 발생

- 향후 지자체 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'19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 추진('19.1월)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이현희 사무관 T.043-719-1803

1. 과제내용

- 검사항목 등 확대 시 사전교육·설명 의무화(식약처, 2회 이상), 필요 시 부처 검사인력(지방식약청, 농관원 등)을 파견·지원
-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담하던 축산물 안전성 검사 중 유통단계 제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(전국 16개소)에서 분담 수행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검사항목 등 확대시 사전교육·설명 의무화(수시) ○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분담수행 추진 (수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검사항목 확대 시 사전교육·설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생용품 기준규격 시험법(3월),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(4월) ○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개정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정(안) 의견조회(1~2월), 개정요청(2월, 식약처), 개정안 확정(6월, 복지부) - 개정안 의원발의(9월) 및 복지위상정(11월) ○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회의(1, 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축산물 검사업무 수행 근거 마련 논의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개정건수 대비 교육 실시 건수*(회)	개정건수 × 2	4

* 항목 개정건수 × 교육 실시 건수

3. 성과 및 한계

- 식품·의약품 분야 검사관리 체계의 효율적 운영 근거 마련
 -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타당성 의견개진
 -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와의 간담회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상호 의견 수렴
 - 유통 축산물 안전성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
 - *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개정안 복지위 상정(11월)

- 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지자체 검사역량 강화 및 신속 대응 지원
 - 위생용품관리법 제정(18.4월)에 따른 위생용품 기준규격 시험법 등 사전 교육 실시
 - 시도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기준 평가 전 사전 교육 실시로 실험실 운영시스템 개선 및 조치 유도

4. 향후 추진계획

-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개정 및 인력확충을 위한 관련 부처 지속 협의
 - 보건복지부 및 복지위 전문위원 면담,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인력 증원 협의 추진

5-1-2	법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①	식품 관련 법령체계 개편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임동춘 주무관 T.043-719-2016

1. 과제내용

- 소비자 식생활 및 소비형태 변화로 발생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반영하여 조리식품 안전관리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과정을 총괄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개편

* 즉석제조·판매 영업의 활성화, 키즈카페, 동물카페 등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식품법령 개편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('18)	○ 연구사업을 통한 「식품위생법」 개편방안 마련 * 소비자 식생활 변화 등에 따른 「식품위생법」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(10~12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연구 사업을 통한 식품위생 법령 개편방향 제시
 -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도록 식품접객업을 별도의 관리체계로 개편하고, 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한 식품위생법 전면 개정

4. 향후 추진계획

- 학계·업계·소비자단체 등 검토를 거쳐 법령 제·개정(안)* 마련('19)

* 「식품위생법」 전면 개정안 및 「식품접객업법(가칭)」 제정안

5-1-②	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②	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마련

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신부선 사무관, T.044-200-2458

1. 과제내용

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마련

- 위기수준 판단 단순화, 위기대응 의사결정구조 일원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일관된 위기대응 추진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마련(5월) -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표준매뉴얼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마련(5.10) - 표준매뉴얼(안) 초안마련(2월) - 농식품부·해수부·식약처 협의(2~4월) -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확정·배포(5.10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수립(식)	1	1

3. 성과 및 한계

의사결정체계 일원화, 위기등급 개선, 의사결정 일원화 등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명문화한 표준매뉴얼 신규 마련

- (컨트롤타워)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 모니터링, 위기감지, 위기발생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상황팀 운영

- (위기등급) 현행 4단계(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) 위기등급을 위기냐·아니냐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
- (의사결정) 현행 부처별, 단계별로 나누어진 의사결정구조를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일원화 하여 대응수준 결정

4. 향후 추진계획

식품안전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운영 및 필요시 개정 등 추진*

- * 표준매뉴얼 운용과정 중 일부 개정필요사항이 도출될 경우, 매뉴얼 현장 적용성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위기대응이 가능토록 있도록 개정 추진

5-1-②	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③	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
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김홍태 사무관, T.044-200-2454

1. 과제내용

- 식품안전 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
 -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단일 대응체계 (국무조정실 상황팀-부처별 전담팀) 구성·운영
 - 국내·외 식품안전 정보 모니터링 및 관계 부처의 안전정보를 취합·분석하여 위기상황을 판단하여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안전 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기대응 정부단일체계(국조실 상황팀-부처별 전담팀) 구성·운영(1월) - 식품안전 정보 수집·분석 및 관계 기관 등에 결과 공유(1월) - 민관 합동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·운영(3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안전 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(1월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기대응 정부단일체계(국조실 상황팀-부처별 전담팀) 구성·운영(1.8) - 식품안전 정보 수집·분석 및 관계 기관 등에 결과 공유(1.18~) - 민관 합동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·운영(3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기대응 정부단일체계 구성(식)	1	1

3. 성과 및 한계

- 국무조정실(상황팀) 및 부처 전담팀 구성, 일일 식품안전정보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정부 단일 위기대응시스템 구축
 - (상황팀 운영)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 단일 대응체계 구성·운영
 - * 국무조정실 상황팀 및 부처별(농식품부, 해수부, 식약처) 전담팀 구성('18.1.8)
 - (모니터링) 위해식품, 동향 등 국내·외 안전정보를 매일 취합·분석하여 정보 수준에 따라 신속대응(단독·부처합동) 및 정보공유
 - (민관합동 관리체계) 식품안전정책위원회* 운영협의회(4회)를 통해 종합대책 및 현안과제 점검, 정보교류 등 협업체계 가동
 - *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 개편('18.3): 위해요소 중심→식품분야별로 재편

4. 향후 추진계획

- 식품안전정보 수집 대상 및 범위 확대 등 모니터링 강화

5-1-3	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
①	전문위원회 개편

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서밀가 사무관, T.044-200-2382

1. 과제내용

- 전문위원회 개편을 통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
 - 위해요소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식품분야별로 개편*, 부처별 식품 안전대책은 소관 전문위원회와 협의토록 하여 정책 완결성 제고
 - 식품안전상황팀과 협업, 식품안전관련 위해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대응 상황 판단을 위한 자문·검토 등 위기관리 역할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'위해요소'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'식품분야별로 개편'(17.12.27, 위원회 의결, '18.3월 중 개편)	○ 전문위원회 개편('18.3.5, 운영세칙 개정) - 5개 전문위원회별로 민간위원(54명) 재배치 및 정부위원(15명) 임명 - 식품안전관련 정보 공유('18.6월부터 매월(정례적), 발생 시 수시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운영협의회 개최 ¹⁾ (%)	100	100

¹⁾ 운영협의회 개최 계획 대비(분기별 1회) 이행률(%)

3. 성과 및 한계

-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사회적 이슈사항 등을 주제로 식품안전정책 포럼 개최 및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도 등 개선추진
- 민관이 함께 포럼 주제를 선정하고 협력(民:주제발표, 官:패널 토론 참여 등)하여 포럼을 개최**, 민관 소통 및 정책 제안의 장 마련
 - * 소비영양안전 전문위('18.6.7), 농/축/수산물/가공수입식품 전문위('18.6.15)
 - ** △생선회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(7.27, 수산물), △식품 원료 및 식품의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한글 명칭과 로고 개선 방향(9.7, 농산물), △축산물 생산-유통단계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(10.18, 축산물), △노인 공공급식의 안전관리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(12.7, 소비영양안전)
-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」 및 「2018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」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, 문제점 발굴 및 개선* 추진
 - * 총 12개 과제 현장점검('18.7.2~11.12) : 35개 개선사항 발굴 ⇒ 부처 개선 조치(수용 28개, 부분수용 1, 중장기 검토 3, 지자체 소관 이관 3)

4. 향후 추진계획

- 제5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('17.4.24~'19.4.23)로 신규 위촉 등 추진
- 전문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정보를 공유(매월) 하고 포럼* 및 현장점검*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의 소통 지속 추진
 - * 전문위원회별로 포럼 개최 및 현장점검 실시계획 등 검토('19.5) 및 추진('19.6~12)

5-1-3	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
②	민관 합동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

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서밀가 사무관, T.044-200-2382

1. 과제내용

- 민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구성·운영을 통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도모
 - 위원회 운영방향과 활용계획 검토, 결정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및 여러 전문위원회의 관련 사항 등 논의
 - 위원회 의결사항인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」(17.12.27) 등 주요정책을 점검하고 현안 등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민관 합동 운영협의회 구성·운영 ('18.3월, 분기별 개최)	○ 운영협의회 신설(운영세칙 개정, '13.3.5) 및 총 4회* 개최 * '18.4.9, 5.30, 9.20, 12.13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운영협의회 개최 ¹⁾ (%)	100	100

¹⁾ 운영협의회 개최 계획 대비(분기별 1회) 이행률(%)

3. 성과 및 한계

- 운영협의회를 통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간 정보공유·소통의 기회를 마련, 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
-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」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(분기별), 현안사항*을 공유 및 개선사항 논의, 위원회 상정안건** 검토
 - * ‘여름철 수산물 위생관리 대책’, ‘농약 PLS제도 시행사항’ 등을 점검 및 논의
 - ** ‘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’, ‘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 시스템 확대 방안’, ‘축산물 사료안전관리 강화 방안’ 등 4건의 상정안건 사전 검토(’18.12.28 위원회 개최)
- 위원회 활동계획*을 사전에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
 - * 전문위원회별 식품안전정책포럼 개최 계획(총 5회, 5.4, 7.27, 9.7, 10.18, 12.7), 민관 합동 ‘식품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점검’ 실시 계획(총 12회, ’18.7.2~12.11) 등 검토

4. 향후 추진계획

- 제5기 전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(’17.4.24~’19.4.23)로 도래로 운영협의회* 재구성 추진(’19.4월말, 정례회의 : 분기별 개최)

5-2 대내외 소통 · 협력 강화

5-2-① 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

① 부처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김정욱 서기관, T.044-201-2294

1. 과제내용

- 국민 감정을 고려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
 - 객관적 위해도와 국민의 주관적 인식수준(분노·불안)을 함께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농식품부-소비자 소통 협의체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도출	○ 농식품부-소비자 상시 협력체계 구축(4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과 수급대책, PLS 대응 등 주요 현안사항에 이해를 위하여 소통 협의체 개최(5회) - 6차 인증, GAP 농가 현장방문 등 농산물 생산현장을 연계한 정책 포럼 개최(2회) - PLS 관련 대응방향에 대한 소비자 단체 공유를 위한 간담회(1회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소비자단체 간담회 운영(회)	4	8

3. 성과 및 한계

□ 소비자단체와의 농정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소통채널 개설

○ (제공 정보) ①소비자 관심사항 및 ②소비자단체 정보전달 필요사항

- * ① 농식품 안전, 물가 변동 등 소비자 관심사항을 그룹톡을 통해 상시 접수·파악
- ② 부내 수요조사를 통해 소비자단체에 제공하고 싶은 농정 정보 발굴(매월)

* 소비자단체 측에서 감자가격 현황 및 정부 조치사항에 대해 문의(4.25)하여, 감자 가격 급등에 대해 우리부가 배포한 설명자료(식량산업과, 5.3)를 토대로 정보 제공

○ 양파, 감자 등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인, 유통인 등 자율적 소비촉진 운동, 레시피 확산 등 협업 추진

- * 햇양파 특별판매 기획전(4.12~25), 고객 감사 사은행사 기념품 제공(4.2~27, 32톤), 조생종 양파 자율감축 홍보(4.1~30) 등

□ 농약 PLS 시행에 따른 농업계의 문제점 공유 및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8.6 보완대책 공감대 확산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를 연계한 소통협의체 지속 운영 및 협력 사업 지속 추진

해양수산식품부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.044-200-5622

1. 과제내용

□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요령 대국민 교육 및 홍보

○ 수산식품의 위해요소 발생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등 의견수렴 기회 제공, 위생·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소통 활성화

-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·안전 교육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소통을 활성화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추진계획 수립(1월)	○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추진계획 수립(1월)
○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(6월)	○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(6월)
○ 여름철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TV광고 등 홍보(6~8월)	○ 여름철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TV광고 등 홍보(6~8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수산물 섭취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요령 정보를 제공하고 타깃 세분화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
 - TV 73회, 라디오 52회, 카드뉴스 제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및 홍보 시너지 효과 제고

4. 향후 추진계획

-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·안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, 홍보 실시 등을 통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(19.1월)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임영인 사무관 T.043-719-1718
 소통협력과 이제명 사무관 T.043-719-2552

1. 과제내용

- 국민 감정을 고려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
 - 객관적 위해도와 국민의 주관적 인식수준(분노·불안)을 함께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 불안해소와 정부신뢰 확보를 위한 위기 소통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사고에 적합한 소통전략 수립 (6월) ○ 정책고객과의 상시 소통을 위한 '열린포럼' 운영(3월~, 매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 불안해소와 정부신뢰 확보를 위한 위기 소통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기 소통전략(안) 마련(5월), 위기 대응 전문가 포럼·자문(6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학계, 소비자단체, 산업계 등 26명 참석 -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배포(6월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위기단계·대상별 커뮤니케이션 방향 설정 * 기본원칙 정립 및 절차·관리 일원화 * 정책소통 거버넌스 활용 맞춤형 소통 </div> ○ 열린포럼·소비자포럼 개최(10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방향 소통 강화로 식의약 이슈 선제적 갈등조정 및 공감대 형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·피드백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열린포럼 운영 횟수(회)	9	10

* 열린포럼 및 소비자포럼(분기 1회) 운영횟수를 합산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열린포럼 운영을 통한 국민 관심·이슈에 대한 선제적 소통

- 국민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통해 식·의약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*(32건)하고, 사회적 관심 증대 유도**

* 칼로리 계산 어플리케이션 사용방법 개선 등 25건 반영완료

** 보도자료(8회), 언론보도(235건), 온라인 참여 증가(2회 54명 → 7회 503명)

- 의견수렴방식 다각화를 통해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열린 포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

* 운영방식 만족도(만족이상 비율, 설문조사) : 66%(3월) → 76%(8월)

* 2018년 중앙부처 ‘정부혁신 우수사례’ 선정(행안부, 10월)

□ (한계) 對국민·언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하였으나, 사고대응과 국민인식 간 괴리 및 국민감정 촉발요인 해소에는 한계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위기 커뮤니케이션 실행방안 마련(‘19년)

- 정부기관과 국민 사이의 위험인식 괴리가 발생하는 요인 파악 및 성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이드 마련

□ 열린포럼 및 소비자토론120(‘소비자포럼’ 명칭변경) 지속 개최(‘19년)

- 식의약 안전 관심·이슈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강화

5-2-①	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
②	국민청원 창구 마련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권대근 사무관 T.043-719-1004
소통협력과 백남이 사무관 T.043-719-2553

1. 과제내용

- 국민청원 창구를 마련, 국민 다수가 청원한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불안감 해소
-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시민 등으로 '국민소통단'을 구성,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·추진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청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(3월) ○ 국민청원 시스템 개방 및 홍보(3월) ○ 국민소통단 및 관리위원회 구성(3월) ○ 소비자 니즈 발굴 및 의견수렴(3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청원 업무운영지침(4월) 및 심의위원회 운영규정(5월) 마련 ○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스템* 오픈(4월) 및 TV,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용사이트 : petition.mfds.go.kr ○ 국민소통단 1,004명 구성(3월), 실무급·위원급 위원회 구성(3월) ○ 소비자 니즈 발굴 및 의견수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담사례 분석(24,186건) 및 설문조사*(6회)를 통한 계층별 니즈 발굴 * 식품 알레르기 표시·홍보 강화 등 설문결과를 정책에 반영 ○ 소비자포럼 개최(4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안전한 온라인 소비환경 등 식의약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

추진계획	추진실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비자 요청사항 검토보고서(4회) * 빵집 쇼케이스 위생관리, 인터넷 허위·과대광고 단속 등 요구사항 발굴·조치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정보 만족도(%)	71	74

3. 성과 및 한계

-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도입, 소통을 통한 선제적 위해요인 관리
 -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*을 선정하고, 검사 후 결과 공개하여 요청제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
 - * 어린이 기저귀, 물휴지, 다이어트 음료 등
- 국민소통단을 통한 대국민 상시 소통채널 기반 마련
 - 국민 1,004명으로 국민소통단을 구성·운영하고,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지속 발굴·조치하여 소비자 만족도 향상
 - * 국민소통단의 식의약 안전정보 만족도가 74%로, 목표치(71%) 초과 달성

4. 향후 추진계획

-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스템 개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속
 - 사용자 편의를 위해 통합·분야별 검색기능 마련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, 보도자료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대국민 참여 독려
- 국민소통단 구성원의 직접적인 니즈 발굴, 실시간 소통 추진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민소통단 사업 성과 홍보
 - * 네이버 카페(가칭 '컨슈머 담소창') 개설·운영

5-2-2	국제 교류·협력 강화
①	국제식품 기준·규격 설정 대응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이은섭 서기관, T044-201-2080
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정찬민 사무관, T.044-201-2121
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이혁인 사무관 T.054-912-0631

1. 과제내용

- 우리 농식품 수출 활성화,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 및 농축산업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제규격 제개정에 적극 대응
 -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의 총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주요 수출 식품 등 기준·규격 설정에 우리나라 기준(입장)을 반영 노력
 -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, 세계식물보호협약(IPPC) 및 검역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동축산물 및 식물 위생·검역 기준 제개정 대응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ODEX 총회·분과위별 국제동향 파악 및 논의의제 검토 대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ODEX 분과위 대응팀을 구성, 체계적 대응으로 제41차 CODEX 총회(18.7월)에서 아래와 같은 성과 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추장 세계규격화 및 건조감(꽃감) 규격(건조과일부속서) 작업 추진 승인 - ‘국제식품 및 사료 분류’에 들깨를 유지종실류로 존치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PPC(세계식물보호협약), OIE(세계동물보건기구) 등 동식물 검역기준 제개정 대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명자를 차(음료) 용도 포함 ○ 제13차 IPPC 총회(18.4), 제86차 OIE총회(18.5), 식물검역 전문가회의[한-일(18.3), 한-베(18.6), 한-미(18.8), 한-중(18.10), 한-호(18.12)] 등을 통해 다·양자간 동식물 검역기준 제·개정 논의 대응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국제기준 제개정 제안(건)	2	4
○ 국제회의 참석 및 대응(회)	13	13

3. 성과 및 한계

□ (성과) 국제식품 규격 기준 제·개정 관련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

* 고추장 세계규격화 및 건조감(꽃감) 규격(건조과일 부속서) 신규 작업 추진 승인, 국제식품 및 사료 분류'에 들깨를 유지종실류로 존치, 결명자를 차(음료) 용도 포함 등

○ (한계) 국제식품 기준규격 제·개정 추진은 발굴, 분과위 등 상정, 총회 승인 등에 장시간 소요 및 신규 규격 발굴 등에 애로

* 김치 세계규격(7년) 고추장 지역규격(7년), 인삼 지역규격(9년)/세계규격(5년) 등

4. 향후계획

□ 국제 식품 기준 규격 제·개정 관련 정량적 성과 창출에 장시간이 걸리는 만큼, 별도의 기준 설정보다는, 아래 예시와 같은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손영욱 사무관 T.043-719-2020

식품기준과 최윤주 연구관 T.043-719-2415

농축수산물정책과 박재우 사무관, T.043-719-3220

1. 과제내용

-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의 총회 등 20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에 대한 국제동향 사전 검토 및 국가 대응 방안 마련
 - 국가 간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당국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ODEX 총회 등 총 12개 분과회의 참석(연중) ○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회의 개최(12월) ○ 국가 간 협력체계 마련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ODEX 총회 등 총 12개 분과회의 참석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오염물질) 어류의 메틸수은 기준을 가공어류제품류에 적용 * (농약) 국내 인삼·고추에 사용하는 살균제의 국제 농약 MRL 설정 * (동물용의약품) 넙치류에 사용하는 아목시실린 등 동물용의약품 MRL 설정 * (식품위생)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군에 대한 표시권고 반영 ○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제6차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개최(12월, 205명 참석) ○ 국가 간 협력체계 마련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·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개최(3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글라데시 식품위생 공무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(4월) - 한·베 식품안전협력 약정 체결(5월) - 아시아 개도국 식품위생 공무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(10월) - 인도네시아 식약청장 면담(12월) - 한·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개최(12월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회의 및 훈련 개최 횟수(회)	5	6

3. 성과 및 한계

- CODEX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, 국내기준에 적합한 의견이 반영·채택되도록 적극적 의견 개진
- 식품분야 항생제내성 관리와 관련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기준 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
- 국가 간 식품 기준 국제조화를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

4. 향후 추진계획

- 2019년도 CODEX 총회 및 분과회의 참석(연중)
- 제7차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개최('19.12월)
- 제14차 한·중식품안전협력위원회 개최('19년)
- 제10차 한·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개최('19년)
- 한·베간 식품안전을 위한 기준 조화 지속 논의('19년)

5-2-2	국제 교류·협력 강화
②	국제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연구관 T.043-719-4503
 농축수산물정책과 박재우 사무관, T.043-719-3220
 현지실사과 안정하 주무관 T.043-719-6221

1. 과제내용

-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
- 아세안 식품 안전관리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우수성 소개 및 개도국 전파
- 주요 축산수출품목에 대한 맞춤형 위생점검 및 외국 정부의 현지 실사 대응 등 적극 지원으로 국내 축산식품의 원활한 수출 도모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해평가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(연중) ○ '18년 아시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현지훈련 실시(6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해평가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원-유럽식품안전청(EFSA) 간 MoC 체결(9월) - 한국-독일(BfR)-프랑스(ANSES) 국제 심포지엄 공동개최 실무협의(연중) ○ '18년 한-아세안 위생협력 사업 추진계획 보고(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탁사업 공고(1월), 외교부에 초청 대상자 추천요청(3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 축산물 유형별·수준별 안전 관리 지원 및 수출상대국의 현지 실사 대응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시아 개도국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세미나 개최(5월, 12개국 31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축수산물 생산·제조·유통 현장 방문, 참가국별 식품위생관리체계 소개 및 안전이슈 등 토론 ○ 삼계탕(EU, 미국, 캐나다, 싱가포르), 영유아조제분유(중국), 유제품(말레이시아) 등 수출 관련 안전관리 지원 및 EU 등 3개국 7개소 현지 실사 대응(연중) ○ 축산물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민·관 상호간 이해도 증진을 위한 '수출축산물 협의회' 개최(3회) ○ 지방청·지자체 수출담당 공무원 및 수출업체 대상 교육(8월)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해평가 분야 회의 및 훈련 개최 횟수(회)	1	1
○ 한-아세안 위생협력 사업 자체평가 결과(등급)	A	A

3. 성과 및 한계

□ 위해평가 분야 신규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기반강화

- 유럽각국 위해평가 전문기관과의 협력에 이어 식품안전을 위한 유럽연합과의 포괄적인 협력체계 구축

□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식품교역 상대국인 아시아 개발도상 국가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유도 및 수출기반 강화

- 우수 농축수산물 위생시설 및 위생관리체계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관리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 기회로 활용
- 개발도상국 위생관리 체계 및 실태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수출희망 업체와 공유, 식품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에 기여
- 수출상대국의 위생조건에 따른 정부지원 및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추진
 - (성과) 삼계탕(싱가포르, 캐나다 등), 쇠고기·양념육(홍콩 등) 등 기존 품목에 대한 수출국 확대와 영유아조제분유(중국)의 수출작업장 갱신등록 완료
 - * (연례보고서 제출) 미국·EU·말련, (현지실사) EU·말련·캐나다, (위생평가자료 송부) 싱가포르
 - (한계) 수출상대국의 여건에 따라 수출품목에 대한 현지실사 진행 불투명 사례 발생
 - * (인니) 망고 검역조건으로 對 인니 유제품 실사 중단, (중국) 조직개편 등으로 영유아조제분유 신규작업장 현지실사 지연 등

4. 향후 추진계획

- 위해평가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심포지엄 공동개최, 훈련참여 등 협력 강화
- 국제협력 체계 강화 및 농축수산물안전관리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한-아세안 위생협력 사업 지속적 추진
- 수출상대국의 위생제도 및 요구사항 사전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지원 추진
 - 수출작업장의 사후관리 및 수출 품목에 대한 설문답변서 작성
 -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회의 및 수출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등

5-3 |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

5-3-① | 감시·감독 역량 강화

① | 수사역량 강화

법무부 형사기획과 한지혁 검사 T.02-2110-3271

1. 과제내용

- 위해식품 집중 단속을 통한 부정식품 근절
 -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해식품사범 단속에 대한 수사력 집중
 - 유관기관 간 회의 및 간담회 통한 협업체계 강화
 - 법무연수원 전문교육 및 각급 검찰청별 수사실무 교육 확대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속	○ 「식품안전 중점검찰청(서울서부지검)」 및 전국 59개 검찰청 「부정식품 사범 합동단속반」 등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 실시 - '18. 1.~12. 검찰 직접단속 49명(구속 5명),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17명 - '18. 1.~12. 범죄수익환수(143,260,100원)
○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	○ 각급 검찰청,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의체 회의 및 간담회 실시 - '18. 1.~12. 협의체 회의 등 34회 개최
○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지속	○ 법무연수원, 각급 검찰청 등을 통한 특사경 교육 지속 실시

추진계획	추진실적
	- '18. 1~12. 법무연수원 특사경 수사 실무 집합교육(36회 1,880명) 및 사이버교육(5회 5,493명), 검찰청별 관내 특사경 교육(11회 194명)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불량식품 관련 회의 개최 실적(회)	16	34
○ 수사전문화 교육실적(회)	30	40

3. 성과 및 한계

- 「식품안전 중점검찰청(서울서부지검)」 및 전국 59개 검찰청 「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」 등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 실시
 - ※ 전체 부정식품 단속인원 13,667명(구속27명)
검찰 직접단속 49명(구속 5명),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17명
- 법무연수원 및 각급 검찰청 등을 통한 특사경 교육 지속 실시로 식품범죄 수사역량 강화

4. 향후 추진계획

-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속
 - ‘식품안전 중점검찰청’과 전국 ‘부정식품 합동단속반’ 중심으로 부정식품사범 지속 단속('19. 연중)
 - 범죄수익 환수 조치, 불량식품·원재료 몰수·폐기, 인허가 취소 행정처분 및 국세청 탈세 통보 등 적극 실시('19. 연중)
-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
 -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회의 개최를 통한 협업체제 강화('19. 연중)
 -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지속('19. 연중)
 - 법무연수원, 검찰청 특사경 대상 직무교육 확대 및 지속 실시

5-3-①	감시·감독 역량 강화
②	검사 권한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설찬구 사무관 T.043-719-3204

1. 과제내용

- 식품안전관리 현장 집행 공무원 권한 강화
 - 축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에게 축산농장 출입·조사 권한을 부여하고
위해사고 발생 시 출하중지 등 긴급 조치 권한 부여('18)
 - * 산란계 농장 출입·조사 권한은 기 부여('17.10)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축산농장 출입·조사 근거 마련(10월, 법령 개정안 국회 제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개정 추진(7월 의원발의, 8월 복지위 상정) -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·조사 권한 확대 - 위해우려 가축사육시설 경영자 등에 가축 및 생산물 긴급조치 명령

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위해축산물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관련 가축이나 축산물의 출하·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유통·판매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,
 - 가축 사육단계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 확보 가능

4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 없음

1. 과제내용

- 식품안전관리 현장집행 공무원 권한 강화
 -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세관장이 직접 단속 할 수 있도록 「원산지표시법 시행령」 개정('18)
 - *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은 개정 완료('17.10)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원산지표시법 시행령」 개정안 마련 - 현재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관세청장에게 단속권한이 위임되었으나 이를 세관장에게 재위임하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(안)* * 시행령에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단속권한을 위임하는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원산지표시법 시행령」 개정안 제출 - 단속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하는 수정(안) 제출('18.1월) - 수입물품 표시면제 조항 신설(안) 제출('18.5월) ⇒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반영 시행('18.12.11)

-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'18.12.11시행)
 - 세관장에게 시중유통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표시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으나,
 - 농수산물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성과 미미

4. 향후 추진계획

- 농수산물 단속권한을 활용한 자체 기획단속 또는 범정부 합동단속
 - 단속권한 확보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

※ 「원산지표시법 시행령」 개정안 개정사항

<개정 전>	<개정 후>
<p>제3조(원산지의 표시대상) 제1항 2. 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단서조항 <신설></u></p>	<p>제3조(원산지의 표시대상) 제1항 2. 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. <u>다만,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.</u></p>
<p>제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④ <u>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관 단계에 있는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.</u></p>	<p>제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④ <u>관세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.</u></p>

5-3-①	감시·감독 역량 강화
③	감시기법의 과학화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중유해물질팀 서정혁 연구관, T.043-719-4455
 첨단분석팀 신동우 연구관 T.043-719-5302
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이성규 사무관 T.043-719-4056

1. 과제내용

- 정직한 식품 유통을 위한 과학적 감시 기술 개발
 - 저가어종 둔갑판매 사례 근절을 위한 수산물 판별법 및 소비자 기망(欺罔)식품(저가, 불량원료 혼입) 판별법 등 지속 개발 확대
 - 불법 혼입 부정 식품 및 의약품 성분의 분석법 개발
 - 통합망의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지원을 통해 위해사고 사전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신속 대응 체계 구축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(연중) ○ 위·변조 식품의 신속검사법 및 소비자 기망행위 판별법 개발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산물 유전자바코드 50종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(6월) - 종(種)특이 유전자분석법 10종, 건강기능식품 원료 6종 판별마커 개발(11월) ○ 위·변조 식품의 신속검사법 및 소비자 기망 행위 판별법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적용 신속검사법 및 분석 키트 개발(12월)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용금지 원료 및 불법 혼입 의약품 성분 분석법 개발(11월) ○ 스마트 수거증 개발(8월) ○ 수요자 중심의 '음식점 표준분류 체계' 마련(9월) ○ 수거대상 선별시스템 구축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품 중 히스타민(histamine) 신속 검사 방법 및 키트 개발(11월) - 인위적 증량 냉동낙지 판별 알고리즘 개발 및 맹검테스트(10월) - NMR, FT-IR 기반의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법 개발(11월) - 천일염 성분의 데이터베이스 및 판별법 마련(11월) ○ 식용금지 원료 및 불법 혼입 의약품 성분 분석법 개발(11월) - 골다공증 치료제 등 부정·불량식품 중 의약품 성분 분석법 개발 - 식용금지 원료(백선태, 천오 2종)에 대한 혼입여부 판별법 개발 ○ 식품위생앱에 수거증 온라인 전송기능 개발(8월) * 식품위생앱 이용, 감시원이 피수거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수거증 전송 ○ 식품접객업의 표준분류체계 개선안 마련(9월) ○ 지능형 수거검사 대상 선별시스템 구축(12월) * 통합망 식품안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거검사 품목 선정 자동화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위·변조식품 판별법* 개발 건수(건)	63	70

* 유전자 바코드 정보 및 진위, 혼입 판별법

3. 성과 및 한계

- 식품 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종(種) 특이 PCR법*, 건강기능식품원료 및 유사 수산물 판별을 위한 유전자 바코드마커** 개발
 - * 대구, 명태, 더덕, 도라지 등 10건, 연구논문(1건), 특허등록(2건)
 - ** 맥문동, 작약 등 6종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돛류 등 유사수산물 50종
- 현장에서 바로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한 신속검사법*(키트), 국내유통 주요 식품의 위·변조 및 원산지 판별법** 개발
 - * 히스타민 현장 검사법 및 점성어, 민어 등 4건의 신속 검출 키트
 - ** 천일염, 고춧가루, 인위적 증량 냉동낙지 판별법
- 골다공증 및 통풍 등 치료제 20종 동시분석법, 백선피·천오 등 식용금지 원료에 대한 혼입여부 판별법 개발(11월)
- 식품 수거증 문자발급 서비스 개시로, 종이 수거증 장기 보관 등에 따른 영업자 불편 개선 및 수거증 현장 발급의 용이성 증대
- 외식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음식점 표준분류체계 마련으로 식품안전관리 효율성 및 정보 활용도 제고
 - 음식점 표준분류 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

4. 향후 추진계획

- 부정·불량 식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분석법 개발 지속
 - 저가원료를 고가원료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위·변조 및 부정·불량식품 판별 시험법 개발 지속 및 관련 실태조사 강화
-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 등 부정·불량식품 중 의약품성분 분석법 및 청목향, 당살초 등 식용금지 원료 혼입 판별법 지속 개발
- 현장 감시업무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장행정 정보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
- 음식점 표준분류체계 반영을 위해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개정(19)

5-3-2	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
①	전통시장 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이영희 사무관 T.043-719-3259

1. 과제내용

-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연중 발생에 따라 전통시장 불법 도축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 판매 축산물에 대한 점검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통시장 내 산닭 등 가금류 불법 도축 합동점검(1, 9월) -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병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닭 불법도축·판매행위 등에 대한 전국 합동점검 실시 - 명절(1~2, 9월), 하절기(5~6월) 축산물 취급업체 5,240개소 점검 - 전통시장 닭·오리 식육의 위생관리 홍보 리플릿 제작·배포(5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전통시장 등 합동점검 횟수(회)	2	2

3. 성과 및 한계

- 위생관리 취약지대에 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부정·불량 축산물 유통차단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

4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 없음

5-3-2	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
②	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임창근 사무관 T.043-719-1901

1. 과제내용

-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에 대한 신속 대응
 - 집중 모니터링과 관계기관(방통위, 공정위 등) 공조를 통해 온라인 불법유통 식품 신속한 발견 및 조치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기 판매제품 집중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(상반기) ○ 관계기관과 공조체계 확립(상반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클렌즈쥬스 등 생활 밀착형 제품 집중점검으로 약 96천건 차단 등 조치 및 안전정보 관련 기획기사 12회, 보도자료 18회 발표 ○ 불법유통제품 신속차단 위한 유관 기관과 간담회 16회 및 업무협약 체결(협회 3, 쇼핑몰 등 28개사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관계기관 및 인터넷 판매 운영업체와 간담회 개최(회)	6	16

3. 성과 및 한계

- 단속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심관심분야 및 이슈분야를 중심으로 감시역량을 집중하고, 감시결과 대국민 홍보 실시

* 해외직구제품, 다이어트 해독주스, 음이온 제품 등

- 네이버, 홈쇼핑, 온라인쇼핑협회 등 28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
위법 사이트 차단기간 획기적 단축(88일→27일)

4. 향후 추진계획

- 다이어트, 영·유아 제품, 탈모, 미세먼지 등 소비자 일상생활 사용
제품은 매월 집중 점검
 - 온라인 최신 트렌드, 언론 동향,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관심
제품 중심으로 점검 대상 선정
- 온라인 감시 HOT-LINE 구축 및 MOU 체결 대상 확대
 - 온라인 불법유통제품 신속차단 등 업무협약 체결대상 확대(28개소
→ 32개소) 및 자율 감시 구축 지원

5-3-2	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
③	취약계층 보호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상록 사무관, T.043-719-2257
 식품안전관리과 박동희 사무관, T.043-719-2054

1. 과제내용

- 개학·어린이날 등 어린이 기호식품 소비가 많은 시기에 대비하여 학교주변 위생취약 조리·판매업소 지속 안전관리
- 식품의 효능·효과에 대한 허위·과대광고로 인한 고령층의 피해 예방을 위한 '뺏다방' 단속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(연중) ○ 학교주변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'이력점검제' 실시(월 1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309천개소 점검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생취약 우려 특정시기 대비 특별점검 실시 * 봄·가을 개학철(64천개소), 어린이날(31천개소) - 비위생적 환경 개선을 위한 '위생 마스크, 앞치마 착용 캠페인' * 홍보물, 리플릿, 포스터 등 2만부 배포 -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(8~9월) * 423개교 주변, 공무원 및 전담관리원 2,014명 참여 ○ 학교주변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'이력점검제' 실시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료관광을 빙자한 이동식 떴다방, 홍보관 등 단속 ○ 노인복지관협회 등과 협업하여 어르신 대상 '떴다방'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등 교육·홍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생취약 업종 및 부적합 이력 업소 이력점검 및 관리(월 1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담관리원 3,026명, 309천개소 점검 - 전담관리원 대상 관련 법령 및 지도·점검 요령 등 교육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교육(11월, 171명), 업무매뉴얼 및 이력 점검표 제작·배포(2월, 3,771부) ○ 홍보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집중 단속(9~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515개소 점검, 3개소 위반 ○ 떴다방 피해 예방 및 신고요령 포스터 제작·배포(9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노인복지관 등에 1만부 제작·배포

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지도·점검(회)	9	9

3. 성과 및 한계

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영업자 법령 위반율 감소 등 위생지표 개선

* 학교주변 조리·판매업소 위반율 감소 : ('16) 0.04 → ('17) 0.03 → ('18) 0.02

4. 향후 추진계획

학교주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위생취약업소 관리 강화

* 문방구 등 위생취약업소 및 부적합업소 이력점검(주기적 기록 및 집중관리)

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정책 및 안전관리 실적 대국민 홍보

* 학교주변 판매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학생, 학부모 등 맞춤형 홍보

5-3-2	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
④	수입식품 관리 강화

관세청 기획심사팀 이승연 사무관, 042-481-7742

1. 과제내용

위생관리 취약품목 점검 강화

- (수입식품) 명절·김장철 등과 같이 원산지 위조·변조가 급증하는 시기별로 집중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, 기획 단속 실시(관세청)

2. 추진실적

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기별로 집중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 특별 단속 실시 ○ 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표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○ 내·외부 정보수집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범정부 합동 단속 및 민·관 합동단속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시기 성수품목에 대한 표시 위반 특별단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정의 달 특별단속('18.5월) - 휴가철 특별단속('18.8월) ○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이원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체 대상 사전안내 도입·운영 (연중) - 위반업체 신고 유도를 위한 대 국민 홍보 ○ 범정부 합동단속, 민·관 합동단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처간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 - 민·관 합동단속 강화

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시기별로 집중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 특별 단속 실시
 - 특정시기 수요품목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
 - (가정의 달) 선물용품, 의료용품 등 6개 업체(32억원) 적발
 - (휴가철) 써클레이터, 캠핑용 숯 등 15개 업체(482억원) 적발
- 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표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
 - 업체의 자율적인 범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
 - 사전안내 제도를 최초 도입, 시스템을 신설하여 1,133개 업체 대상 홍보
 - 위반업체 신고 유도를 위한 대국민 홍보
 - 서울·부산 지하철 광고, 라벨같이 근절을 위한 부처합동 캠페인(2회) 등
- 범정부 합동단속 및 민·관 합동단속 실시
 - 관세청(수입업체), 수품원·식약처(식당) 등 기관간 분야별 단속범위 확립
 - 합동단속으로 외국산 향어 국산둔갑 식당(12,100Kg, 2.1억원) 및 유통이력허위신고 수입업체 적발('18.6월)
 - 민물장어 협회와 간담회 실시(2회)하여 우범정보를 수집하고 범정부 합동단속('18.5월)으로 유통이력 허위신고 76,154kg(49억원) 적발

4. 향후 추진계획

- 아국 산업보호를 위한 국산가장수출 등 산업보호 기획단속 추진
 - 新보호무역주의 환경에서 일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선의의 국내 수출·제조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'중국산→국산 허위표시 수출·판매'를 기획단속 등 중대위반사건 중점 단속

5-3-3	소비자 피해구제 및 법 위반시 처벌 강화
①	소비자 피해구제

법무부·식품의약품안전처

법무부 상사법무과 이규철 서기관, T. 02-2110-3256
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임동춘 주무관 T.043-719-2016

1. 과제내용

-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
 - (집단소송제) 위해식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, 대표 당사자를 통한 집단소송제도 도입
 - (징벌적 손해배상제) 고의·중과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,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제도 도입

2. 추진실적

□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무부 주관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마련 및 국회 심사 적극 지원 * 집단소송 적용범위에 식품 등을 포함한 「증권관련 집단소송법」 개정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마련(18.9월) 및 식품안전 사항을 반영한 「증권관련 집단소송법」 개정안 발의(18.9.21) * 「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」(김종민 의원 대표발의) 국회 계류 중 - 공개 토론회 및 의원실 주최 간담회 등 입법지원활동 적극 실시 * 법무부장관 현장정책간담회(9.17), 공정경제 전략회의(11.9),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(12.5), 공개토론회(12.13) 개최 등 다수 활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,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시행(「제조물 책임법」, 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제조물 책임법」 시행(4월)으로 식품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

□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집단소송제 확대도입	도입 방안 마련	도입 방안 마련 및 개정안 발의('18.9월)

3. 성과 및 한계

□ 식품안전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마련

- 「증권관련 집단소송법」 개정 추진을 통해 위해식품 제조·판매 등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

□ 식품 등 피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시행

- 「제조물 책임법」 시행(4월)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

4. 향후 추진계획

□ 「증권관련 집단소송법」 개정을 위해 국회·주요 정책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입법설득 활동 강화

- 지속적 홍보 및 의견수렴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내용·의의 및 필요성 등 강조

5-3-3	소비자 피해구제 및 법 위반시 처벌 강화
②	불법영업자 처벌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임동춘 주무관 T.043-719-2016
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승철 사무관 T.043-719-2452

1. 과제내용

- (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) 인체위해물질 함유 제품 판매 등 5개 항목에서 고의적 법령 위반 등을 포함한 9개 항목으로 확대
- (일시 영업중지 명령제 도입) 명백한 위반행위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, 행정처분 이전에 영업 일부를 일시 정지
- (허위·과대표시·광고 처벌 강화)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·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·광고 시 행정처분 강화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(12월)	○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안 복지위 법안 소위 회부(17.8월)
○ 일시 영업중지 명령제 도입(12월)	○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안 법사위 법안 소위 회부(17.1월)
○ 건강기능식품 허위·과대광고 행정 처분 강화(12월)	○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(9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 : 해당 없음

3. 성과 및 한계

- 건강기능식품이 질병·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·과대 표시·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

4. 향후 추진계획 : 해당 없음

5-3-4	농축수산물 생산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
①	농축수산물 생산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이재승 사무관, T.044-201-2326

1. 과제내용

-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의무교육에 '위생·안전' 과정을 신설하고, 교육횟수도 확대(2년 1회 → 1년 1회)
-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의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
 - 현행은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「약사법」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취소 가능
 - 살충제 성분 함유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축산업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축산법」 및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개정('18) - 축산업 허가자 의무교육에 '위생·안전' 과정 신설 및 교육 횟수 확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('18.7)* 및 「축산법」 ('18.12)** 개정 * 위생·안전과정 신설(시행규칙 제36조의2 등 개정) ** 교육횟수(2년 1회 → 1년 1회) 확대(법 제33조의2 개정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「축산법」 개정	개정완료	개정완료('18.12)

3. 성과 및 한계

- 축산법('18.12) 및 동법 시행규칙('18.7)을 개정하여 축산업 허가자의 의무교육에 '위생·안전' 과정 신설 및 교육횟수를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
-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의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('19.6)을 위해 추진 중인 「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국회 발의('18.9.7)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('18.11.19)되어 농해수위 법안소위 검토 중

4. 향후 추진계획

- 차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「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심의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 입법조사관실에 심의 요청

5-3-4	농축수산물 생산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
②	양식수산물 유해물질 불법사용 처분 강화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 T.044-200-5622

1. 과제내용

-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체에 대한 출하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

2. 추진실적

-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

추진계획	추진실적
○ 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 처분 규칙」 개정('18.12월 예정)	○ 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 처분 규칙」 개정 수요조사(~'19.2월)

- 성과지표 달성도

성과지표명	목표	실적
○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칙 개정	고시개정	개정 추진 중

3. 성과 및 한계

- 상위법 근거마련 등 내부 검토과정에서 지연

4. 향후 추진계획

- 동 규칙 개정을 위해 상위법률 근거 마련이 필요
 - 상위법 개정('19년 上) 후 동 규칙('19년 下) 개정